

제313회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 4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3년3월4일(월)

장 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인사청문회

심사된 안건

- 1.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인사청문회 1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신계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
의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인사
청문회

○위원장 신계륜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
자(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인사청문회를 상정합
니다.

지난 21일 위원회에서 의결한 국무위원후보자
에 대한 인사청문 계획에 따라서 국무위원후보자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
시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새롭게 출범한 박근혜정부
에서 고용노동정책의 기본틀에 대해서 점검해 보
고, 또 장관에 대한 개인적 여러 가지 상황을 점
검해 본다는 의미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
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많은 문제, 특히 고용노동
부 관련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문
제라든가 또 현안 문제로서 쌍용자동차 문제라든
가 기타 여러 가지 현안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들을 합리적으로 또 조화롭게 해결
해서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고, 노동이
이 사회에서 대접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
야 할 그런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새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을 이끌고 나갈 장관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이러한 점을 잘 감안해서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가 우리나
라의 고용과 노동정책 분야에 대한 비전과 의지
를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후보자의 도덕성과 준
법성도 심도 있게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방하남 고용
노동부장관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
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과 SBS 방송에서 중계하
고 있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실시하게 됩니다.

그 주요 절차를 말씀드리면, 먼저 방하남 고용
노동부장관후보자가 선서와 모두발언을 하고, 이
어서 위원님들이 후보자에 대하여 일문일답의 방
식으로 질의를 하며, 후보자가 질의에 대하여 답
변하도록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
들의 질의가 모두 끝나면 후보자의 마무리 발연
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
니다.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날인을 해서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에게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3년 3월 4일

공직후보자 방하남

○위원장 신계륜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존경하는 신계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고용노동정책의 발전을 위해 애써 오신 위원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로서 위원님들과 국민 앞에 섰습니다.

장관후보자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말 하나 하나, 행동 하나 하나에 신중을 기하면서 청문회에 임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가슴 깊이 새기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20년 가까이 우리 노동시장의 이론과 현실, 정책과 현장의 접점에 있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일해 왔습니다. 우리 노동시장에 대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으려는 고민의 출발점에서 고용노동부를 만났고, 이러한 경험과 인연이 저로 하여금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등 우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주요 국가에서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해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새롭게 출범한 정부 모두가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침체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한 묘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자리 문제는 어떤 정책보다도 우선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간의 고용노동정책 역시 이러한 시

대적 과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과 장기 저성장으로 인해 일자리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격차와 삶의 질 문제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습니다.

일하고 싶은 청년, 여성, 장애인 등에게 일할 기회를 가로막는 장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장년은 언제 소중한 일자리를 잃을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기업규모와 고용형태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소득불평등으로 인한 계층과 세대 간 갈등이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정책이 처한 지금의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그 답을 찾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과 중산층 70% 복원을 약속했습니다. 성장률 수치보다 일자리와 중산층 회복을 통해 국민행복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의지입니다.

성장의 과실이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더 좋고 더 많은 일자리로 이어지고 소득도 골고루 나누어진다는 믿음을 되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 임명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기본과 원칙을 세워 지키면서 그간의 정책과 제도들을 세심히 다듬어 고용노동정책의 수준을 높이고 정책의 외연을 넓혀갈 수 있도록 저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선 일하고 싶은 사람 모두가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환경 변화에 맞게 청년, 장년, 여성이 실력과 능력으로 일자리를 찾고, 일을 통해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취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일자리가 늘고 일하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든든한 일터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경쟁력을 키워 고용창출 여력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유망 산업 분야를 적극 육성하는 한편 각종 기업지원제도와 연계해서 적극적인 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확산, 장시간 근로 개선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함께 사회적기업 등 창

조적 사회 경제를 통한 대안적 일자리 창출 모델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일하는 사람들 간의 격차를 줄이고 낙후된 고용 관행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은 좋은 일자리를 나쁜 일자리로 대체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정규직의 활용은 인정하되 비정규직 사용의 무분별한 남용과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공공부문부터 앞장서고 민간기업의 고용 관행도 바꿔 나가겠습니다.

사내하도급 보호, 가사사용인, 특수형태업무 종사자 등 다양한 근로형태 종사자에 대한 맞춤형 보호대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셋째, 고용과 복지와의 연계를 통해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계층 간에 벌어진 틈을 좁히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정비하는 한편 더 나은 일자리에 도전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경영상 해고제도를 개선하고, 해고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일자리가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일하는 곳과 고용 형태는 달라도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일하다가 아프거나 다쳐서 귀중한 인적자원이 소실되지 않도록 재해예방에도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거시경제 환경이 호전되어야 하고, 기업의 창업과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일자리를 나누기 위한 대기업 그리고 정규직 노조의 협력도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근로자, 기업, 정부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광범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의 틀을 만드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정책이 일자리의 관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간, 중앙과 지방 간, 그리고 정부와 민간 간 정책협의·조정을 강화하고 경제산업정

책, 보육과 교육정책, 고용과 복지정책을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노사가 상생하고 협력하는 토대 위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노동계, 시민사회가 함께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고용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대타협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일자리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해법은 저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할 기회를 늘리고,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은 충분히 보호하며, 땀 흘린 사람에게 그만큼의 대가가 돌아가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일자리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가는 핵심 가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좋은 일자리, 행복한 일터’가 우리 국민들의 삶과 산업현장 곳곳에 뿌리 내리도록 낮은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 행복한 일터’가 우리 사회의 차별과 격차를 메우고, 성장·고용·복지가 선순환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한발 한발 앞으로 굳건히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실되고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질의와 응답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 질의가 끝나면 보충질의 있습니다. 또 추가질의도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다만 오전 중에 모든 위원님들이 한 번쯤 질의를 원하시기 때문에 첫 번째 질의시간은 7분으로 완전히 제한을 하겠습니다. 7분 안에 꼭 요약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모든 위원님들이 오전 중에 한 번씩 질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분이 지나면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한 번도 안 그랬는데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시간도 포함되기 때문에 후보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아주 짧게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미 위원님, 그다음에 김성태 위원님, 이완영 위원님, 세 분에게…… 김상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미 위원 민주당 은수미입니다.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후보의 정책에 관한 기본 답변과 그에 충실한 자료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낸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을 제가 검토했는데 내용이 매우 부실한 것은 물론이고 답변 자체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특히 우리 의원실에서 요구한 동일한 자료에 수치 합산이 맞지 않거나 중요한 수치를 10분의 1로 줄여 보고하는 것 같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차례나 같은 자료를 요구해야 했지요.

더군다나 답변 내용 중 노사관계에 대한 답변은 부실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MB정부에서 노사관계는 특히 권리를 무시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것으로 유명했고, 사실은 그것과 결이 다른 의견이나 내용이 있는가를 살펴봤는데 사실은 MB정부의 노사관계 파트 담당자들의 서면답변 내용과 똑같았습니다. 이 정도로 부실하고 내용은 별 차이가 없는 그런 것을 지금 새로 오신 장관후보자에게서 검토를 하신 것인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의 부실함은 작년 국정감사나 정기국회 때도 반복적으로 지적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올 한 해, 그다음에 내내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행정부가 사실은 자기 일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청문회 시작 전에 이렇게 위원들의 서면질의에 부실한 답변 혹은 수치에 대한 잘못된 때문에 반복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게 되는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하게 경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계륜 예, 잘 알겠습니다.

가능하시면 내용과 관련된 것은 질의시간에 해주시고요, 의사진행에 관련된 것만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태 위원 새누리당 김성태 위원입니다.

새누리당 환노위를 책임 맡고 있는 간사 입장에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은수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과 같이, 후보자 본인보다는 고용노동부에서 준비한 서면답변 자료가 좀 부실하다는 내용의 우리 당 위원들의 입장도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후보자 본인이 우리 질의 시 답변에 더욱더 성실하게, 충실하게 해 주시면 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위원장님과 또 우리 존경하는 환노위 야당 위원님들께, 지금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여야 간에 정쟁이 심화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조금 전에 미래창조과학부후보내정자였던 김종훈 내정자가 국회 정론관에서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사실상 새 정부가 출범하고도 엄청난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사실상 우리 환노위처럼 이런 여야 간에 때로는 중지를 잘 모르고 슬기롭게, 지혜롭게 소관 상임위 활동을 하는 상임위도 흔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환노위 신계륜 위원장님과 홍영표 간사님께서 민주당 차원에서의 초당적인 정부조직개편법안 여야 협상의 원만한 타협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서…… 지금 현재 많은 어려움이 야기되고 여야 관계가 더욱더 경색되는 국면에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노위 민주당 위원님들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정부조직법안 처리 이 사항에…… 결론은 우리 국민들께 우리 국회가 할 일을 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국회에 모든 화살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깊이 헤량하여 주시고, 민주당 지도부께 좀 원만한 정부조직법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협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그다음에 이완영 위원님!

○이완영 위원 오늘 우리가 박근혜정부 노동부장관 뜻 깊은 청문회를 해서 정말 기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장하나 위원께서 이 청문회에서, 제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지금 뭘 하나 걸쳐 놓았거든요, 위원장님.

제가 굉장히 거슬려서 이걸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 모임에서 저게 꼭 필요한 건지…… 오늘 장관 청문회거든요, 상임위 질의도 아니고. 조금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제가 또 정면에 앉아 가지고 매우 거슬려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김상민 위원님……

다른 의사진행발언은 없으시지요?

그러면 바로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계륜** 예.

○**심상정 위원** 오늘 장관후보 청문회와 관련해서 은수미 위원께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장관 후보자의 부실한 답변과 아주 무성의한 소명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걸 왜 김성태 새누리당 간사께서 해명을 하시고 답변을 하십니까?

○**김성태 위원** 그건 해명하고, 답변이 아니에요.

○**심상정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이 된 만큼 장관후보자의 답을 듣고 본질의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장관후보자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봐도 자료의 내용이 빈곤하고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은수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또 김성태 위원님도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동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실 때 그렇게 자료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된다, 보다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림과 동시에 자료를 제출을 잘 하세요.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

○**심상정 위원** 저는 본인이 하셨는지 좀 듣고 싶어요.

○**위원장 신계륜** 안 나온 것도 있고, 했으나 아주 형식적인 것이 많다는 게 제 본 소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고 넘어갑시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제가 내정된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챙겨야 할 사안들이 엄청나게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보내 주신 서면질의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고, 그 답변 내용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제가 다 촘촘히 검토했었어야 되는데 몇몇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꼼꼼히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때 서면에 있는 것 이상으로 제가 생각하는 소신과 방향을 진실되게 얘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자, 그렇게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그냥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넘어가시지요.

○**김성태 위원** 장하나 위원님이 질의할 때 그렇게 해 놓고 하면 안 되겠어요?

○**장하나 위원**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이렇게 하시지요.

제가 의사진행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장하나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자기 소신에 따라서 하는 것을 권유할 수는 있지만 제가 강제로 저것을 내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그렇게 하시고요.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서로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10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그러실래요?

○**장하나 위원**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이완영 위원님께서 자리에 안 계셔서 너무 아쉽기는 하지만.

이 패널을 보고 거슬린다고 표현하신 것에 대해서, 어제 잘 아시겠지만 대한문에서는 쌍차 유가족들 분향소가 방화범에 의해 전소되고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 이 패널 하나가 그저 거슬린다는 표현을 하시는 것은 다른 어느 상임 위도 아니고 우리 환노위, 같이 일하고 계신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다 부끄럽고 가슴이 아팠다는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우지는 않을 것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질의를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꼭 엄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비례대표 주영순 위원 질의합니다.

○**朱永順 委員** 주영순 위원입니다.

먼저 고용노동부장관에 내정된 방하남 후보자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하남 후보자에 대해서는 고용복지 분야 전문가이지만 한편으로는 학자 출신으로 현장의 노사

문제 경험이 거의 없고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으로
서 조직 장악과 부처 간 업무 조율에 한계가 있
을 것이라는 우려도 더러는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청문회에서 방하남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현안 및 정책질의
중심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의 수장으로서 내정된 만큼 조직 및
인원에 대해서는 이미 숙지를 하셨으리라 봅니
다.

현재 본부와 일선 기관의 인원이 얼마나 되지
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현재 본부의 인
원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500여 명 그리고 전체
지방까지 합쳐서 5500여 명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朱永順 委員** 2008년 930만 명이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지난해 1120만 명으로 대폭 급증
했고, 취업성공패키지사업 규모는 2011년 5만 명
에서 약 23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자 상담은 직원 1인당 100명
에서 130명 수준이 적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1인당 최대 관리 인원은 267명에 달한다고
하니 이래 가지고 제대로 고용서비스가 가능하겠
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위원님께서 말
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에 취업성공패키지가 고용
복지 연계에 아주 중요한 취업지원패키지 프로
그램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담당 인력
들이 충분히 보강되지 못한 면들이 있습니다.

○**朱永順 委員** 현재 우리나라 공공고용서비스
인프라가 얼마나 열악한지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용센터 직원 1인당
실업자 수는 191명으로 영국 독일보다 약 9배나
많고, 일본 미국에 비해서도 2배나 많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2년 전 KBS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 직원 10명 중 7~8명이 다른 부처
진출을 희망하고 있고, 이들 중 대부분은 과중한
업무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위원님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도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
회가 있었고, 실제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는
찾아오는 취업이나 구직자들에게 처음부터 끝까
지 종합적인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
렇게 하려면, 현재 1인당 20~30명이 하루에 서
비스를 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라고 얘기를 들었
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보다 몇
배 넘는 이런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서 제가 장관
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

○**朱永順 委員**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그런 부분
에 대해서 전반으로 지금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
조직과 인프라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서 재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朱永順 委員** 지금과 같이 이렇게 열악한 고용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지금 지방 인
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朱永順 委員** 후보자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첫째로는 지금
제가 장관에 취임하면 일단 우리 부처 내에서 각
서비스 조직의 인적자원들이 효율적으로 배치되
고 효율적으로 업무의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내부적으로 재조정할 이
후에 필요한 인력들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朱永順 委員** 다음은 쌍용차 문제에 대해 질의
를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장관 내정 이후 쌍용차 문제와
관련하여 장관에 정식으로 취임을 하면 우선순위
국정과제로 챙겨 나갈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신 적이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朱永順 委員** 본 위원이 사전에 서면으로 후보
자에게 국정조사에 대한 입장을 물었는데 이 문제
는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라며 민간기업에 대한
국정조사는 찬반 여론 등 다양한 의견이 있으므
로 국회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
당하다는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현재 쌍용차 국정조사에 대해 노사 양측은 물
론 평택 시민사회단체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
고 있습니다. 쌍용차 5000명의 근로자, 협력업체
까지 포함하면 약 11만 명의 일자리와 생계에 직

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성의 없이 답변을 해서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쌍용차에 대한 국정조사는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소모적인 논쟁은 피하고 쌍용차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쌍용차 국정조사는 법적으로,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3조 내지 8조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국정의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로 쌍용차와 같은 민간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례가 없고,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법적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유수의 대기업마저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초비상 경영 상태에서 지난해만 1000억 원가량의 영업 손실을 기록한 쌍용차가 국정조사 논란에 휩싸여 투자가 지연되고 영업에 지장을 받고 대외신인도가 떨어지면 회사는 파산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최근 쌍용차 사장이 러시아 달러와 수출계약 가격을 협상하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화강세 등으로 수출 가격을 올리겠다고 통보하자 쌍용차 국정조사 관련 기사가 실린 영자신문을 들고 와서 ‘회사 사정이 이렇게 어려워져 가는데 값을 올리는 게 말이나 되느냐’며 압박했다는 이야기에 정치권은 절박하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본 위원은 환노위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직접 기업을 운영한 유일한 경제계 출신입니다. 쌍용차 국정조사 논란이 지속되고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새 엔진과 신차 개발에 9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마힌드라의 약속도 장담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쌍용차 경영정상화가 11만 명에 달하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 더 나아가 고용 확대에 기여할 수 있고, 평택시민과 시민사회 단체와 노사가 국정조사를 반대하고 있으며, 지역 및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데, 후보자는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제가 말씀……

○위원장 신계륜 잠깐만 잠깐만요,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제가 답변할 시간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이 끝나셨나요, 주영순 위원님?

○朱永順 委員 예, 답변……

○위원장 신계륜 예, 장관 답변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지금 쌍용차 국정조사 관련해서 사회 각계에서, 그리고 국회에서도 여야 간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에 관련한 국회에서 여야 간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결과들을 지켜보고 장관으로서 쌍용차 사태가 가지고 있는 노동적인 측면 또 사회적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장관으로서 이제 거기에서 피해자로 나올 수밖에 없는 정리 해고자라든지 또 생활상에 어려움을 겪는 여러 명예퇴직자들 이런 분들을 고용안정이라든지 생활안정 차원에서 챙겨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朱永順 委員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명숙 위원 질의합니다.

○한명숙 위원 민주통합당의 한명숙입니다.

노동부장관 내정을 축하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감사합니다.

○한명숙 위원 방하남 연구위원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내정되었다는 소식에 노동계는 우려 반기대 반입니다.

우선 행정·정무적인 경험이 전무하고 그리고 특히 노사관계나 노사정책에 대한 연구 내지는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아마 이렇게 연구원이 책임장관을 주창하고 있는 이러한 시기에 장관으로 발탁됐다는 것은 참 이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면답변에 대한 평가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너무 실망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는 노동철학이 강하고 신념이 강하고 인권문제가 투철한 사람이 노동부장관이 되어도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까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데 서면답변을 보면서 사실상 MB정부의 노동정책을 그냥 이어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노동문제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불투명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측면에서 벌써부터 노동부 공무원들에게 휘둘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저희들 생각에 노동부장관께서는 이번에 장관으로 발탁된 배경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는 것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히 이 시기의 노동 현안의 배경 그리고 MB 정부의 노동정책의 방향 이런 것들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 100일이 넘도록 고공 투쟁을 하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이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노동 문제에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노동부장관 내정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분들에게는 자신들의 생사를 가르는 그러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MB정부 5년의 노사관계, 노사정책은 상당히 후퇴했다고 평가를 하고 어떤 사람은 암흑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특히 노동계에서도 친기업 반노동 정책으로 자신들이 너무나 불공정하게 많은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사회적 비용을 굉장히 크게 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목숨을, 24명이나 희생한 그러한 쌍용자동차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산상의 피해 이런 무형·유형의 피해가 사회적 피해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MB정부의 노사관계를 그대로 이어가서는 우리나라에 희망이 없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민대통합을 기치로 내걸고 경제민주화를 하시겠다고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경제민주화의 핵심도 노동정책이 들어가 있고 국민대통합도 노사관계로 갈등이 크게 야기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MB정부의 노동정책을 그대로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MB정부의 노동정책의 평가를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간단하게 평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과거 정부에 대한 평가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다양한 평가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제 박근혜정부는 국민들에게 약속했듯이 사회적 대타협의 큰 틀에서 대화와 상생의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들어 보자고 제안을 했고, 그러한 것들이 노사 간에 대화가 잘 되고 협력이 잘 되면 제 생각에는 과거를 넘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또 다른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노사관계 부분이 지금 국정……

○한명숙 위원 간단히 해 주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국정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고용률 70%하고 중산층 70% 복원을 위한 고용의 문제에 조금 더 친화적인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MB정부의 평가를 그냥 구경하듯이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고 저렇게 평가할 수도 있다고 객관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후보자 자신의 평가를 부탁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서면답변에 보니까 어떻게 노사관계가 노사관계 외형적 자료를 들면서 안정화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특히 후보자께서는 고용 문제에 힘을 쓰시겠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를 말씀하셨는데 초기 MB정부도 1년에 60만 개씩 300만 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고용정책을 화려하게 펼쳤습니다.

그리고 '747'이라는 성장담론을 내세웠는데 노사관계는 법과 원칙, 노사 자율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300만 개, 747 공약은 정권 초기부터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노사관계는 심각한 갈등으로 초래됐지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모두 실패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정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지켜질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큼니다.

그래서 저는 노사관계의 심각한 갈등으로 야기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일자리 창출도 어렵다……

‘늘지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양질의 취업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늘리고 지키겠다는 건데 이 사람들도 생존권의

문제이고 자기 일자리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분리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철학과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장관직을 수행하지 않으면 지금 모든 하시는 말씀은 물거품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잠깐 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고용과 노동이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노동정책이나 현안의 원만한 해결이 없이는 고용정책이 어렵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최봉홍 위원님 질의합니다.

○**최봉홍 위원** 새누리당의 최봉홍 위원입니다.

장관님, 오늘 모두발언에서 주로 고용에 대한 일자리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 현재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가장 어려운 사항은, 사회적 합의에 의한 두 번의 큰 법 개정을 했습니다만 역시 노사가 공동으로 현행법을 '노동악법'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이 법의 수정이 없이 그대로 갔을 때는 계속되는 그 노동환란은 이겨내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서는 취임하시고 난 후에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법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면 좋은지 의견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현재 제가 알기로 그 노동법이 10년 이상 유효기간을 거치고 또 노사정의 여론수렴을 거쳐서 어렵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장에서 또 실질적인 기업 현실에서 여러 가지 노사 간에 불만도 있고 또 고쳐야 될 사항들이 있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가 그동안에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에 취임하면 다시 한번 실태조사라든지 현장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들이 있으면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 노동법이 말입니다. 80

년대 6·29 나기 이전까지는 노사 간에 분쟁이 생길 때 다루는 척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조합의 공익성, 공익을 먼저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다루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지노위나 중노위, 법원의 판례도 공익을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노동부 예규가 우선을 해서 현장 사정에 맞춰서 해 왔는데 6·29 나고 난 이후, 특히 IMF 생기고 난 뒤에 아웃소싱이니 용역이라는 제도가 도입되어서 기업은 공정거래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이익 경쟁에 들어가고 노동자는 결국 그 중간에, 사주와 근로자 사이에 많은 용역업체가 개입함으로 인해서 실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노동하는 대가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노동법은 중간착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 용역업자를 합법화시켜서 그 사람들이 중간착취를 함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와서 일자리는 전부 다 아주 나쁜 비정규직이나 파견직으로 되고, 그러나 실제 원청회사가 주는 돈은 그대로 주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착취에 의해서 도로 반제가 되든지 하는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이나 또 노동법상 규제되어 있는 노동권을 근로자들이 주장해 나왔는데, 물론 노동자들도 노동권이 있기 전에 근로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응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노동권을 주장하고 그 노동권을 주장하다 보니까 소수 불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인 명분을 얻게 되고 정치권이 개입하게 되고 그래서 파국적인 노사분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서는 재임하신 이후에 사회적 노사정 대타협을 얻기 위해서…… 현재 대통령께서도 노사정 대화합을 유도했는데 대화합을 유도하는 방침을 어떤 기구를 통해서, 어떻게 대화합을 유도하시려는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복잡한 고용관계들이 지금 우리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사회적 대타협의 틀을 얘기하셨고, 그 틀에서는 지금까지 기존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 틀보다는 보다 큰 틀에서 책임 있는 여러 부문의 사회

적 파트너들이 참여해서 과거에 좁은 의미에서의 노동 현안 중심의 사회적 대화나 타협보다 앞서서 큰 경제·사회적 이슈들을 가지고 이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 나갈지 큰 틀에서 빅딜을 한 이후에 보다 구체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내하도급이라든지 파견근로 그리고 중간착취 이러한 부분들은 구체적인 방안들을, 사회적 합의나 해결방안들을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서양의 노동법은 현재 모든 것이 인권헌장이 중심으로 되어서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법은 항상 일본 법을 이기해 온 거기에다가 우리 사회현상에 맞춰서 부분적으로 뺄 처방을 해 왔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 저는 생각할 때 앞으로 바르게 한다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더라도 학계나 노사를 전부 합쳐서 새로운 차원에서 새로 시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평소에 생각하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필요한 부분들, 법·제도 부분도……

○최봉홍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쭙 보겠습니다.

지금 특수고용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을 바꾸라 하는 것이 노동계나 일반 국민들은 바라고 있는 상황인데 그 특수고용자나 또 사용자 개념 바꾸는 거기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하신 점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일단 특고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특별히 고용노동정책 차원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고용안정이라든지 차별해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봉홍 위원 장관이 되시고 난 뒤에는 이 근로관계를 정리하는 그 법률부터 정비를 하고 거기 맞추어서 불만스러운 노동자가 없도록…… 특히 퀵서비스 화물운송 비정규직 파견직 거의 다 특고가 많을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고 현재까지 나와 있는 학설이나 이론에 의해 가지고 서구 선진국과 같이 그 특수 고용……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근로자도 단체협약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법을 새로 만드십시오.

○위원장 신계륜 최봉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하남 후보자께서는 군대를 78년에 갔다 80년에 전역했나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그런데 어떻게 하사로 가셨다 오셨나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일반 병으로 입대를 했는데……

○위원장 신계륜 이른바 물병장 그것……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당시에 일반하사 차출이 있어서 제가 하사로……

○위원장 신계륜 하사관학교를 간 것은 아니고?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하사관학교에서 6개월 동안 훈련 마치고……

○위원장 신계륜 훈련받고?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다음은 한정에 위원님 질의합니다.

○한정에 위원 민주통합당 한정에입니다.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게 하나 있으시지요?

증여세 관련한 것, 후보자께서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었던 해남의 땅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장관으로 지명된 2월 17일 바로 다음날, 2월 18일 날 밀린 증여세를 납부를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해명을 좀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국민에게 사과해야 될 것이 있으면 사과를 하시고요. 무엇보다도 공직후보자 또는 공직자에 임명이 되실 분들은 국민의 4대 의무 중의 하나인 납세의 의무와 관련해서는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저도 납세의 의무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가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늦게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질의서에서도 답변드렸습시다마는 2009년 12월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제 이름이 그 건물의 공동소유자로 표기가 됐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제가 후보자 지명을 받고 나서 여러 가지 인적사항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알게 됐고, 그것들이 발견되어서 이제 필요한 세, 증여세를 2647만여 원을 납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꼼꼼히 여러 가지 세금 관련해서 확실하게 인지를 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향후에는 그런 사항들이 없도록 더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처리를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고요. 그것은 잘못된 내용이고, 지금 해명하신 내용도 조금 맞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나 하면, 2009년에 가건물 상태였던, 2001년에 지어진 가건물 상태였던 그 가건물이 실질적으로 건축물로 변경이 되면서 그때 소유권 등록을 하셨다고 했는데 2011년에 해당 건물을 담보로 해서 농협에 대출을 할 때 방하남 후보자의 인장과 근저당설정권자로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께서는 아주 늦게 알았다고 하면 2011년 당시 대출을 할 때 알았어야 되고요. 그보다 빨리 알게 됐다고 하면 2009년에 건물을 제대로 소유권지분을 설정할 때 아셨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애초에 2001년에 해당 건물, 가건물을 지을 때 건축주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님이 해당 건축물을 짓는다고 계약을 할 때 공동건축주 방하남 후보자의 이름과 날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해남군청에 보고가, 신고가 됐고요. 그것을 통해서 취득세도 아버님이 대신 전체를 다 납부한 사실도 있고요.

그런데 ‘그 취득세에 대해서는 해당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내지 않았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거든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미 2001년에 아버님께서 이것을 증여할 목적으로 일정 부분 건축물을 지으면서 공동건축주로 하셨고,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게 가건물이었다라고 하지만 가건물도 증여의 대상은 됩니다. 길게 보면 12년 동안 증

여세를 내지 않으신 것이고요. 후보자가 얘기하는 해명을 받아 준다고 해도 2009년, 아주 늦게까지 몰랐었다라고, 아주 눈 가리신다고 해도 2011년입니다. 그래서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시고요. 그냥 깨끗하게 사과를 하시는 것이 맞고 ‘향후에는 좀 더 신중하게 처신하겠다’라고 할 것은 아니고요. 세금을 내고 안 내고를 신중하게 처신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내야 되는 것이지요. 일반 국민들은 세금을 탈세를 한다, 납세를 회피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직후보자가 되셨으니까 지금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저는 깨끗하게 사과를 하시고 가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제가 공동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이번 후보자로 등록된 이후에 여러 가지 세금 관련 서류를 정리하면서 알게 된 것은 그것은 진실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납세의 의무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은, 그 기본적인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처리 과정에 있어서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추후적으로 납부하게 됐고, 저는 그런 차원에서 납부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납부를 한 겁니다.

향후에 더 신중해야 된다는 것은, 이렇게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관계들이 설정되어 있을 때 오늘 저와 같은 이런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정애 위원** 그래서 저는 은행에 대출을 받을 때 본인 명의가 들어가고 했는데도 그것을 전혀, 부친께서 지난 십몇 년 동안 연락을 안 하고 지내신 것도 아니고 그것을 모르셨다고 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세금 탈루로밖에,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봐지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어쨌든 사실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향후 조사를 통해서 결정할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78조에 의하면 신고 불성실, 납세 불성실로 인해서 가산세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가산세는 성실하게 납부를 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지금 현재 저는 공식적으로 세무사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지금까

지 법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납부액을 계산 받았고 또 그것을 국세청에 신고해서 고지를 받은 액수입니다. 그 고지 받은 액수는 지금까지 제가 몰라서 못 냈던 해태 부분에 대한 사후납에 대한 가산금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마지막 건물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증여가 됐다라고 하는 것만에 대해서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국세청에서는 판단을 한 것이고요. 실제로는 애초에 가건물이 지어진 시점부터 계산을 하기 때문에 국세청은 또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가산세가 매겨지게 되면 그것은 충실하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관련 절차하고 사업자등록 자체가…… 물론 그간 재산권 행사도 부친이 직접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가설건축물 축조 대장상 공동건축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장관후보자에게서 그것을 ‘몰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납득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몰랐습니까? 아버지가 주신 땅인데 몰랐다고 설명이 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사실은……

○위원장 신계륜 어느 국민이 그것을 이해하겠습니까?

액수가 큰 것은 아니지만 내가 몰랐다, 내 재산이 들어왔는데……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그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는 하지만 제 입장에서 그것을 알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아버님께서 어떤 생각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전혀 정보를 주신 사실이 없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예,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잘 이해를 못 할 겁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다음 질의합니다.

새누리당 서울 강서구을 김성태 위원 질의합니다.

○김성태 위원 새누리당 서울 강서을 김성태 위

원입니다.

경제민주화는 앞으로 공정한 사회와 또 차별을 해소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특단의 의지가 반영된 정책이지요? 잘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래서 노동하고 복지, 경제민주화는 모두 하나로 얽혀 있는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후보자 시절이나 당선인 시절까지도 복지에 대한 관심은 지극하게 높았는데, 경제민주화 이야기하면서 노동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었거든요. 결국 노동 없는 복지 확대나 경제민주화는 그 토대가 나중에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수위에서 노동 분야의 전문위원으로 인수위 활동을 했는데, 왜 경제민주화에 노동 없는 경제민주화만 계속 외쳐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고의적으로 이 내용을 뺀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저는 특별히 노동을 일부러 배제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없고 또 그렇게 의도하지도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민주화에 있어서 여러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또 동시에 노사관계나 노동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라든지 노사관계의 협력이 없다면 어떻게 경제민주화가 제대로 실천될 수 있겠습니까?

○김성태 위원 좋습니다. 지금 장관님의 그 답변대로 경제민주화의 국정목표 속에는 앞으로 반드시 노동도 언급되고 노동도 중요하게 자리 잡을 수 있게끔, 그것은 장관의 역할이요. 인정하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그렇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경제민주화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경제 부흥과 또 창조 경제를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 수단 속에서 이 노동이 제외되고 있다는 것은 절대 국민들도 납득되지 않을 사항이니까 앞으로 장관내정자께서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국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지난 28일 날 대법원에서 한국 GM 불법 파견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내린 사실

을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날 고용노동부에서도 이마트에 그동안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불법 파견 판정을 내렸거든요. 1978명입니다, 23개 지점에 대해서. 그렇지요?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대형마트들의 직접고용과 간접고용 현황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건강 증진 정책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했지만 그 답변은 아주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답변을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간접고용 현황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사한 바가 없고, 근로조건 개선에 대해서는 매년 사업장 감독 강화를 하고 있다는 이런 아주 입에 발린 그런 형식의 답변이에요. 이러면 새 장관으로서 청문회를 준비하는 자세에 성의 있는 답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 하니까, 이마트 23개 지점 해서 약 2000명 불법 파견 판정 내려놓고, 그동안에 그러면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용노동부가.

대형마트들의 운영방식이라든지 이런 불법 파견 문제가 이번에 처음 알려진 게 결코 아닙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고용노동부에서 방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던 게 무슨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계시니까? 장관내정자께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지금 대형마트를 포함하는 유통업에서 그런 아주 복잡한 하도급 관계와 고용 구조가 있다는 것들은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어떤 계기로든지 이번에 불법 파견 문제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만큼 제가 장관에 취임하면 현재 지금 특별감독을 받은 특정 마트뿐만 아니라 유통업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서 다른 업체에 유사한 불법적인 요소들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필요하면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과제인 시점입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형마트,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중소기업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막는다 그래서 그동안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었지만 이제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엄정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마저 빼앗는다면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본 위원이 이 청문회의 질의를 통해서 우리 장관내정자가 확고한 앞으로의 각오를 다져 달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그것 관련된 여러 가지,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문제라든지 또 불합리한 차별 이런 부분들은 이번 계기로 해서, 정부의 공식정책 과제도 비정규직 차별 해소, 고용안정이 중요한 과제로 돼 있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다행스럽게 이마트에서, 우리 장관이 아마 청문회 준비한다고 그러니까, 청문회 한다고 그래서 그런가 이마트에서 고급 인력 만 명을 갖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그런 결정을 오늘 아침에 발표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저도 아침에 얘기 들었습니다.

○**김성태 위원** 상당히 저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봐요. 고용노동부가 일선에서 특별근로 감독하고 제대로 일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업계가 달라집니다.

앞으로 장관께서 그런 특단의 의지를 가지시고 이마트같이 이제 이렇게 개선 방안을 낸 곳보다는 다른 데, 다른 데를 더 많이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현장 중심의 노동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 인천 부평구를 홍영표 위원 질의합니다.

○**홍영표 위원** 인천 부평을 출신 홍영표 위원입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내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감사합니다.

○**홍영표 위원** 장관후보자께서는 이명박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면 점수로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저는 좀 미래지향적이고 싶습니다. 평가점수를 제가 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과거의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면서 노동행정정책들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 미래지향적으로 하신다 하더라도 이명박 정부가 일자리 정책에서 또 노사관계 안정이나 산업보건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일해 왔는가는 제대로 평가를 하셔야 미래지향적인 그런 비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일자리 정책만 하더라도 이명박 정부는 30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연평균 약한 24만 개 정도, 그래서 한 125만 개밖에 못 만들지 않았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홍영표 위원** 그것도 보면 특히 청년들은 취업률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5년 동안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그것 여러 형태들이 좀 다릅니다.

○**홍영표 위원** 그러면서 125만 개 정도 일자리가 생긴 게 보면 대개 50세 이상의 조기 정년퇴직을 하는 분들이 영세 자영업 쪽으로 진입하면서 일자리가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공급 요인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영표 위원** 그래서 실제로 내용적으로 보면 고용 사정은 훨씬 더 악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용시장에서 여러 가지 불법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으로 불법 파견 같은 것을 정부가 방치했습니다. 노동계에서 뿐만 아니라 본 위원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불법 파견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몇 년 동안 지적을 했지만 정부가 귀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마트가 만 명의 불법 파견을 인정을 하고 정규직화하겠다고 했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홍영표 위원** 이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

어졌는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환노위에서 이것을 문제 제기하니까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 나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로 이마트가 이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니까 오늘 1만 명을 정규직화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그래서 우선은 제가 현대자동차는 이따가 물어보고요, 지금 이마트뿐만 아니라 홈플러스나 롯데마트와 같은 대형 유통업체에서 이런 불법 파견이 명백히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불법 파견이 있다면 장소를 막론하고 그곳이 어디든지 그것은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법에 있는 대로 불법 파견이 발견되었을 즉시 직접고용 명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 우선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이런 대형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이 불법 파견을 포함한 이런 불법 고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방치해 왔지 않습니까?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

○**홍영표 위원** 1년 전에, 2년 전에, 3년 전에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만 했어도 이런 문제가 시정되었을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그래서 저는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영표 위원** 아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말을 이렇게 회피하지 마시고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홍영표 위원** 노동부가 제대로 그렇게 역할을 못 해 온 것 아닙니까? 법과 원칙을 만날 외치면서 대기업들이 불법하는 것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노동자들에 대해서만 가혹하게 해 온 것,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아니었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안 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저는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사 간에 균형을 이루고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원하고, 강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양보를 받아내서 균형 있게……

○**홍영표 위원** 그러니까 장관님, 동문서답하지 마세요.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마트 오늘 1만 명 불법 파견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겠다, 발표했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홍영표 위원 이것이 왜 일어났습니까? 알아서 했습니까? 우리가, 노동계에서 또 저를 비롯한 국회에서 이런 유통업체의 불법 파견 문제를 제기하니 그때 마지못해서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하고, 오늘 이마트가 그것을 인정해서 정규직화한 것 아닙니까? 정부가, 특히 노동부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그것을 묻는데 왜 동문서답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조금 더 제가 취임한 이후에……

○홍영표 위원 아니, 장관후보자께서는 벌써, 무슨 답변을 그렇게…… 명확하게 좀 하십시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제가 이 한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 불법 파견 문제, 대법원 판결까지 났습니다. 이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노동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간에 방치해 온 것 아닙니까? 그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제가 직접 노동행정에 몸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 있는 말씀을 여기서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그런 불법 파견들이 있는지 없는지 실태조사, 평소에 감독들을 철저히 하고, 법 집행을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영표 위원 저는 지금 장관후보자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답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엉뚱한 답변을 하시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고용노동부가 정말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 중심의 이런 노동행정을 해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저는 그것이 개선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삼성의 이번 유해물질 문제도 보십시오.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900건이 넘는 불법행위가 나왔는데 이것도 사고난 뒤에 뒷북치는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노동행정이 선제적으로 이런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그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

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계륜 다음 순서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상민 위원 질의합니다.

○김상민 위원 새누리당 김상민입니다.

먼저 장관님후보로 임명되신 것에 대해서, 지명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감사합니다.

○김상민 위원 하실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청년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또 여러 가지 많은 사안들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첫 번째 질의를 좀 드리면서, 사진을 좀 보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 오늘 발표했는데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지금 유해물질, 불산 누출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산업단지요 이렇게 사람들은한테는 알려지고 보도가 되어서는 이 주변 1.5km 반경 이 안에, 지금 원 안입니다. 원 안에 이렇게 보기에 빨간 것으로 칠해져 있는 것이 학교들이요, 학교, 중학교 그다음에 초등학교 또 기타 주택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에서 불산 누출사고가 일어난 것이지요.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또 구미에서 또 한 번 누출사건 일어난 것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김상민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그동안에 우리 산업고도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화학, 특별히 화학 관련된 유해위험물질들이 많이 생산공장……

○김상민 위원 짧게 얘기해 주세요.

삼성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 그리고 또 대기업 LG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이 갖고 있는 생각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산업안전 관련

해서 특별히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민 위원** 지금 사과문 발표했는데 주변 지역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 주변이면 동탄신도시 영통 수십,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해서 피해보상이라든지,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피해보상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전혀 없고 그저 시스템만 바꾸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번째는 불산 누출량이 얼마큼인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거 말이 돼요? 특별감독 결과 나온 내용에서 무려 2000여 건수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끔찍하고 이걸 정말 심각한 사대인데, 불산 누출량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특별감사 결과에서 경찰과 함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출량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왜 보고량이 안 나오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거기까지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김상민 위원** 이거 굉장히 앞으로 진행하시면 지금 유해물질 같은 경우가 전국에 수천 개가 지금 시한폭탄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대기업마저도 이것이 관리가 안 되는 상태에 있는데 지금 우리 장관 후보님께서, 이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예측 가능하게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입니다.

세계적인 기업에서도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수많은 육칠천 개의 관련된 유해물질을 관리하는 기업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손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주변에 보면 인근에서 채취한 15개 식물자료, 시료 가운데 9개에서 불소성분이 검출됐어요, 환경단체 조사에서 나왔는데요.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주변에 지금 그 정도가 된다면 초등학교, 중학교 또 주택단지에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 학생들이 만지는 여러 가지 식물이라든지, 기구에 그 물질이 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김상민 위원** 이 불산 누출량 안 나온 것에 대해서 삼성이 이런 식으로 또 사과문 발표하고 그

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의 입장을 정확히 얘기 좀 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마음이고……

○**김상민 위원** 아니, 우려가 아니라 실제적인 피해를 입은 것이잖아요?

집 앞에 이것 터지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장관후보님이?

지금 이러한 사안들이, 앞으로 헤쳐 갈 것이 많으신데 거기에 대한 우리 후보자님의 아주 강한 의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불법적인 어떤 안전수칙이라든지 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엄중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엄중한 조치가 뭔가요? 사과하고, 사과문 발표하고 그러면 엄중한 조치에 들어가는 겁니까? 행정부에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특별히 이런 사고가 일어나게 된 절차라든지 과정에 대해서……

○**김상민 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대답하지 마요.

한번 저는 우리 후보자님께서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지 정말 묻고 싶은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산업안전……

○**김상민 위원** 제가 그래서 직접 기업 이름도 거론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삼성이라는 데에서 이런 게 발생됐고, 그냥 사과하고 불산 누출량도 말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또 지역주민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 지역주민이, 누가 삽니까? 다 삼성 전자 다니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삼성전자의 협력업체 사람들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이럴 때 정부에서 이것 나서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력하게?

이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의 의지와 입장을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대기업 당사자로서 그 발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듣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저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김상민 위원** 후보자님 죄송한데요, 시간이 없어서……

후보자님이 이것을 정확히 모르신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오늘 발표한 것에 대해서 제가……

○김상민 위원 오늘 발표에 대한 것을 그러면 아셔야지요. 지금 당장……

왜 저는 알고 있어요, 이 중대한 문제를요?

이것 정확하게 좀 우리 후보자님께서……

이후에 오후 질문에 제가 이어서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확실하게 책임 소재들을 밝히고 의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예.

하나 더 있는데 이것 시간이 없네요.

7분 안에 끝내야 되는 것이지요?

제목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6475명 대량 해고 사태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알고 계십니까? 학교의 비정규직에 있는 또 계약직 교사들이 어느 소속인지 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소속은 학교 소속인데 실제로 여러 가지 감독이라든지 배치, 예산 관련된 사항들은 실제로는 교육감 수준의……

○김상민 위원 근로자예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 이게 소위 말해 교육과학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생님들 근로자입니다.

이렇게 방치가 된 것이예요.

지금 오늘 이마트, 새롭게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지금 양 부처에서 누구도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청년들, 젊은 사람들, 100만 원 미만의 월급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오후 질의에 이어가겠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교육부 소관된 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비정

규직의 불합리한 처우와 그다음에 차별 같은 전반적인 새 정부의 기초하에서 지금 현재 교육부의 여러 가지 비정규 문제도 다루어 나갈 것이고 불법한 사항들이 있으면 의법 조치를 하되 지금 현재 교육부와 협의하든지 협의 사항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고용노동부 차원에서는 불법적인 어떤 고용 종료나 이런 것들을 자제하라는 공문을 내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에서는 보다 더,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면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확실하게 불법한 사항들은 쟁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장관후보자에게 김상민 위원이 질의한 것은 불법, 안 불법 이런 게 아니고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박근혜 후보 시절의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정규직화하며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소할 것인가, 그 구체적인 방안과 복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 아니었어요? 정책적 문제이고, 현 박근혜정부의 핵심적 내용이고……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여야 간에 공감한 내용이고.

사실 머리말을 들어 보면 그런 데 대한 웅대한 포부 또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아마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연구하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다음은 심상정 위원 질의합니다.

○심상정 위원 고양 덕양갑 국회의원 심상정입니다.

비정규직 850만, 그 가족까지 합치면 절반의 국민을 차지하는 시대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습니다.

힘든 자리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가장 의미 있는 보람을 느끼는 자리가 될 수 있리라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방하남 후보자를 고용노동부장관후보로 지명한 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지금 앞에서 밝

했듯이 이제 새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고용률 70% 달성을 통한 중산층 70% 복원인데……

○**심상정 위원** 예, 됐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제가 그동안에 고용정책의 여러 가지 현상성 있는 연구들을 해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펼쳐 나가 달라, 또 한 가지는 고용·복지 연계를 통해서 근로 빈곤이라든지 저소득층을 좀 챙겨 달라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장관후보자께서는 상투적인 얘기, 답변하지 마시고 분명하고 간결하게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분들이 지적을 했지만 지난 대통령 취임사에 ‘노동’이라는 단어 자체를 박근혜 대통령은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면서도 ‘노동’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나라 월급쟁이 시민이 1500만이고 그 가족까지 합치면 절대다수인데 이렇게 대통령께서 ‘노동’이라는 단어를 한 마디도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장관후보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심상정 위원** 아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만 말씀하세요.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저는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어디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대화와 상생을 통한 노사관계를 이끌어 가시겠다……

○**심상정 위원** 그런 식의 상투적인 얘기를 하시니까 여기 다들, 우리 위원들이 장관후보자의 자질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장관후보자예요, 대통령후보가 아니예요.

그렇게 추상적인 얘기로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항간에 우리 후보자께서 행정 경험도 없으시고 노사관계 경험도 없고 전문가도 아니고, 이번에 답변을 보니까 소신과 비전도 뚜렷치 않은 분을 고용노동부장관에 임명한 것은 노동 없는 고용노동부장관을 임명해서 박근혜정부가 노동 배제 소신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저는 고용노동부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용정책이……

○**심상정 위원** 꼼꼼하게 챙겨 나가실 만한 자질과 소신이 있다는 것을 오늘 좀 보여 주세요.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하셔야 될 가장 시급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노사관계를 보다 미래 지향적으로 고용 중심으로 가져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위원** 노사관계를 고용 중심으로 가져간다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미국에 대공황이 한창인 1936년도에 GM이 파업을 장기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파업이 장기화되니까 사용자가 구사대를 조직해서 유혈사태가 났어요.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께서 주방위군을 투입했습니다.

누구를 끌어냈습니까? 누구를 끌어냈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

○**심상정 위원** 루즈벨트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투입해서 누구를 끌어냈는지 아세요, 혹시?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제가 아직 기억이 없습니다. 과거에 들은 것 같습니다만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 유혈사태를 일으킨 구사대를 다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노동자들도 불만을 표출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이후에 미국에서 노사가 대등하게 테이블에 앉았고 노동자들이 자동차도 사고 집도 사고 해서 중산층이 두터워졌습니다.

‘중산층’, ‘중산층’ 이야기하는데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중산층을 두텁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법 위에 군림하는 대기업 사용자들 법 아래로 내려오게 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

○**심상정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노동3권은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중소기업이든.....

○**심상정 위원** 됐습니다.

28일 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세계 이마트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는데 근로기준법 위반부터 파견·기간제법 위반, 산안법 위반, 노조법 위반, 불법적인 감시·사찰, 이루 말할 수 없이 말하자면 불법·위법의 신세계를 연 그런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라면 이마트 대표이사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에 대해서 저는 고용노동부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법률적인 처리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심상정 위원** 이런 정도의 특별근로감독을 통해서 지금 밝혀진 상황을 놓고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제가 물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법률적인 앞으로의 판단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일단 이마트의 1978명 불법파견을 적발해서 조치를 했는데, 이게 지금 특별근로감독 시작한 지 한 달 보름 만에 나온 결과입니다. 현대자동차는 200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10년째 되고 있거든요. 이마트에서 했던 것처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조치를 하면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도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불법파견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입장도 단호하고 현재 불법파견 관련해 가지고 여야 의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법적.....

○**심상정 위원** 2004년도에 9234 공정에 대해서 노동부가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는데요. 그러면 이마트 기준으로 하면 고용의무지시를 해서 안 반응하면 과태료 923억을 물려야 되겠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지금 현대차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고 법적인 판결이 나오는 대로 불법파견 등의 위법사항이 있으면 즉시 고용을 명령한다든지 이런 조치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상정 위원** 장관후보자, 지금 이마트 특별근로감독을 법적조치에 의해서 하셨습니까? 수사결과 보고 하셨어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지금 이마트의 경우에는.....

○**심상정 위원** 수사는 경찰이나 검찰이 하는 거고요. 지금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로 고용노동부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셔야지요.

후보자의 위치가 어디인지, 또 후보자가 해야 될 직무가 무엇인지를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왜 여기서 사법당국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저의 입장에서는 지금.....

○**심상정 위원** 노동부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하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노동법과 관련 법들을 확실하게 적용을 해서 위법사항들이 발견 되면 의법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제 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심상정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는 끝났지만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 신계륜** 끝나시고 하세요. 전체질의 끝난 다음에.....

○**김성태 위원** 방송 중이니까.....

○**위원장 신계륜** 끝나시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후보자님, 아마도 내가 보기에는 심상정 위원께서는 자신의 소신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을 듣고 싶어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진솔하게 답변하십시오. 그래야 또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용교 위원 질의합니다.

○**서용교 위원** 새누리당 서용교 위원입니다.

먼저 고용복지 전문가로서 새 정부의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또 오셔서 보니까 만만치 않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서용교 위원** 아마 장관후보자께서 오늘 각종 고용노동 현안에 대해서 공식적인 견해를 처음 밝히는 자리라서 신중하신 것 같은데, 신중하신 것도 좋지만 원칙과 원리에 관한 사항들이나 법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소신 있게 밝

혀 주기를 먼저 당부드립니다.

후보자님, 이번 새 정부 국정목표 다섯 가지 중 2개 분야가 일자리와 고용 문제인 것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서용교 위원** 저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부처가 무엇이나 하면, 지금 정부조직법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처가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장관후보자의 어깨가 굉장히 무겁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고 그에 걸맞은 비전과 자세를 보여 주셔야 할 것입니다.

후보자님께서서는 인수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대통령 공약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서용교 위원** 인수위 과정에서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공약이나 역점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서너 가지 먼저 간추려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 일자리 양을 늘리는 부분인데 새 정부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첫째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시고 저의 입장을 밝혀 주기를 원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차별해소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중산층 70% 복원을 위해서는 지금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기라든지 위험을 통해서 근로빈곤층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근로빈곤층이 중산층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안정된 일자리 그리고 안정된 소득을 만들 수 있는지, 그래서 근로빈곤을 위한 고용복지 연계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용교 위원** 방금 비정규직 말씀하셨는데 비정규직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근혜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2015년까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는 비정규직을 우선적으로 정규직화하겠다고 했지요? 아마 공공부문에서는 예산을 확보하든지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질의 일자리를

대부분 창출해내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할 때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일의 성격에 따라, 노동의 성격에 따라서 또는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그다음에 기술 변화에 따라서 이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상시적으로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할 때 고용부에서는 그런 유인정책을 펼 것 아닙니까? 펼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논리를 가지고 하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비정규직 관련해서는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될 게 고용의 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의 불법적인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노동부가 지향하고 있는 여러 가지 큰 정책의 틀 안에서 최대한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로 옮길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또 특별히 일정 부분 비정규직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차별 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로 관련된 복지정책들을 추가적으로 가져가서 현재에 있어서의 차별을 최소화하는 그러한 정책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용교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적인 비정규직은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해결을 해야 되겠지요.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법이라는 것은 정의로운 방패가 되어줘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먼저 불법적인 것은 다 해소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불법이 예견되어지는 것은 사법당국의 판단을 기다려서 판단이 다 끝났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예상되어지는, 예측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단호하게 해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것을 먼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각종 정책적 유인효과나 이런 것, 정책적인 지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노사관계 과정에서 정규직화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비정규직은 전환을 해줘야 되겠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보내오신 답변서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시행할 때의 어떤 로드맵이라든지 원칙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속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소에 후보자께서 갖고

계신 소신이 뭔지, 비전이 뭔지 자꾸 질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한번 더 깊게 고민해 주시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그런 차원에서는 정부의, 고용의 안정성과 정규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최대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여러 가지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통해서 확실하게 차별을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챙겨 나가도록 하습시다.

○서용교 위원 그리고 고용률 70% 달성 이것이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수치화한 몇 개 안 되는 공약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우리 대한민국이 97년도에 한 63.7%였던 고용률이 IMF 겪으면서 50%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작년에 64.2%까지 향상을 했던 것 같은데 250만 명 정도가 늘어나야 5년간에 고용률 70%가 달성 될 것입니다. 매년 한 50만 명 이상이 신규 고용이 돼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그 고용을 실현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만 말씀해 주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일단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 수요 측면에 특별히 이번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창조경제 활성화입니다.

창조경제 부분에서는 이제 중장년층의 일자리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문화콘텐츠라든지 이런, ICT 과학 분야하고 문화를 접목해서 우리 일자리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도 창조경제에서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 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OECD 기준으로도 터무니없이 긴 장시간 근로, 2100시간이 넘는 장시간 근로를 개선해서 근로시간이 단축된 만큼 새로운 일자리들이 나누어지는 그러한 정책들을 역점을 두고 추진할 그런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는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으로 인해서 우리 세대의, 중장년층의 고용 안정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걱정들이 많이 있는데 고용 연장뿐만 아니라 정년 연장을 통해서 함께 가는 일자리 정책들을 챙겨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용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계륜 다음, 김경협 위원 질의합니다.

○김경협 위원 민주당 부천 원미갑 출신의 김경협 위원입니다.

먼저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로 내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감사합니다.

○김경협 위원 비정규직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5년간 전국 대형마트의 고용 현황을 조사한 자료를 제출 요구했는데 답변은 그냥 한 줄로 ‘별도 조사한 바 없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을 일주일째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자료가 없습니까?

(신계륜 위원장, 김성태 간사와 사회교대)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김경협 위원 그런데 있습니다.

2010년 8월 달에 고용노동부가 전국 근로감독관을 통해서 조사한 대형 유통업체 사내하도급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있는데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렇게 2010년에 이런 현황들을 파악했는데 여태까지 아무 조치를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지금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 불법파견, 불법 하도급 문제…… ‘본인에게만 해당되는 판결이다’ 이렇게 노동부에서 또 답변을 했어요,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 이마트 건, 원래는 전 직원에 대한 불법사찰, 부당노동행위 문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큰 문제는, 물론 이것도 심각하지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비정규직 불법파견 문제인데요, 노동부에서 지금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마트 23개 지점에서 1978명 불법파견 근로자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28일 날.

그런데 이 발표를 보고 제가 직접 보도자료를 냈던 게 ‘146개 지점을 다 하면 몇 명이나 될까, 1만 명이 넘을 것이다’ 이런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행히 이마트에서 1만 명 정규직화 발표했습니다. 늦었지만 무척 고무적이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마트뿐만 아니라 여타의

다른 대형 마트들입니다. 노동부에서 2010년 8월 달에 조사해 놓은 자료에도 사내하도급 현황들이 죽 나와 있고요. 이것이 지금 이마트뿐만 아니라 여타의 다른 대형 할인매장이나 백화점에 전반적으로 다 퍼져 있는 문제입니다. 똑같은 양상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유통산업 전반에 대한 어떤 세심한 점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고 제가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서 특별감독이 필요하다면 단계적으로 수행을 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특별근로감독 하셔야 되겠지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필요하다면……

○**김경협 위원** 불법파견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하실 수 있겠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법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엇그저께 GM대우 불법파견 아마 대법원 판결 나온 것 봤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봤습니다.

○**김경협 위원** 사건 발생 10년 만이고 소송을 한 지 8년 걸렸습니다, 8년.

현대자동차 최병승 씨인가요, 그거 몇 년 걸린지 아시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다 받아냈는데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 개인적인 문제다, 개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지금 새로, 이제 국정과제 공약에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협소한 해석을 넘어서서 만약에 어떤 사업장에서 불법파견이 발견이 되면 같은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확대 적용을 약속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용노동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 똑같은 형태의 고용 형태가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라 아까 제기했던 대형 유통업체 산업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해서 다 광범위하게 펼쳐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불법파견 문제, 노동부

에서 아마 전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필요하다면 특별근로감독 실시하고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될 것입니다.

뭐 행정 인력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노동부가 죽 해 왔던 것들을 보면 타임오프제 사업장 감독 전반적으로 다 실시했고요, 하면서 무슨 노동조합에 쫓던 경조비 문제, 자판기 수익금 문제, 노동조합 조합원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일일이 시시콜콜 다 따지고 있습니다. 행정 인력이 부족한데 이거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업장 경영주들의 불법행위, 불법 파견자 문제, 불법 고용, 여기에 대해서는 손 놓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하게 조치하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특별한 조치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다음에 한국노동연구원에 오랫동안 재직을 하셨는데요.

노동연구원의 직원 대외활동 규칙에 의하면 대외활동, 연구용역이나 강의할 때에 사전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지요? 그리고 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연구용역을 하면서 사전 신고도 하지 않고……

외부 연구용역 했을 때 연구용역비는 어디로 귀속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노동연구원으로 귀속됩니다.

○**김경협 위원** 연구원으로 귀속되지요? 그런데 신고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연구용역 지금 파악된 것만 3건, 외부 강의 총 37건, 이렇게 해 가지고 2011년 1년 동안 연구용역한 게 2200만 원, 2011년 1년 동안 외부 강의비만 1800만 원 이렇게 4000만 원입니다, 이거 합쳐서. 그런데 외부 강의비는 어디로 귀속됩니까, 이것은?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그것은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경협 위원** 본인에게 귀속되고,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은 그러면 연구원으로 귀속이 돼야 되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연구용역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부에서 직접 연구원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계약하는 것이 있고 제가, 거기에 적시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들은 국책연구기관이 정부로부터 정책연구를 수주해서 각 연구, 여러 분야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에 각 맡은 분야에 대해서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에 직접 연구 안 하고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어떤 자문료 형태로 해서 들어왔던 것입니다.

○**김경협 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강의비와, 이게 지금 노동연구원 내부적으로는 연구용역을 개별적으로 수주할 수 없도록 돼 있고 할 경우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죽 보니까, 자료들을 봤더니 실질적으로 사전에 신고를 한 경우는 뭐 한두 건이고요, 대부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도 물론, 그런데 2011년만 2200만 원에 강의료만 1800만 원, 합치니까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별도의 부수입일 것 같은데 아마 연봉 외에 연간 4000만 원의 부수입이 생겼다 이런 거지요.

일단 지금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따가 다시 추가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성태**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완영 위원** 이완영 위원입니다.
축하받기 이전에 좀 어깨가 무겁지요? 어떠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박근혜정부의 첫 노동부장관이신데 기대도 크지만 우려도 많다 이런 것을 아파 느끼셨을 것 같은데, 저는 더군다나 노동부 출신입니다. 한 25년간 노동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먼저 한번 물어봅시다.

업무과약 과정에서 노동부의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만 꼬집는다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이완영 위원** 아직 문제점.....
제가 총리님 인사청문회도 3일간 꼬박해 봤는

데 도덕성하고 직무수행 능력 두 가지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도덕성에는 별문제 없다고 생각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완영 위원** 예, 본인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저는 뭐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완영 위원** 그러면 결국은 오늘 직무수행 능력이 집중적으로 검증이 될 텐데요, 제가 이 문제점을, 노동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고용 시스템입니다. 일자리와 직업훈련과 관련해서 고용지원센터가 있는데 저는 의원 되고 나서 한 10개월 됐지만 계속 또 가 보고 가 봅니다. 가 보면 우리 직원들이 정말 일에 허덕이는데 성과가 없어요. 전반적으로 뜯어고쳐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취업성공패키지도 있어요. 이것 많이 성공사업인데 너무 정부 직원들이 꺼안고 있습니다, 민간에 맡길 것을. 거기다가 내일 배움카드 또 취업지원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번에 대선공약에 직업능력개발에 대해서는 정부 주도가 아니라 정부 지원으로 가겠다, 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이완영 위원**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확 뜯어고쳐야 될 것 아닌가, 제가 경험과 지금까지 또 직원들 얘기로..... 좀 공감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제가 대통령께도 말씀을 드렸고 총리께도 주문을 드렸습니다. 부처 칸막이 없애자는 얘기 대통령으로부터 들으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이완영 위원** 저는 대표적으로 없애야 될 것이 고용지원서비스입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잘 아실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지금 그동안에.....

○**이완영 위원** 복지부하고 고용부하고 이렇게 두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는 주로 지자체를 활용하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래서 생보 대상자까지 이제 파악하고, 고용노동부는 고용지원센터를 이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그런 면이 있었었습니다.

○**이완영 위원** 저는 부처 칸막이 없애는 것이 무척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복지부하고 한번 해 볼 용의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용의가 있고, 제가 고용·복지 연계 정책을 만들고 또 전달체계를 복지부하고 고용부 양쪽을 불러서 상의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부처 칸막이를 최대한 없애고 고용·복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새롭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완영 위원** 누구보다 양쪽을 잘 아시는 후보자시니까, 저는 이렇게 되면, 지금 저소득층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파악을 해 보면 나는 직업훈련을 배우겠다, 나는 취업을 해야 되겠다, 이분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해야겠다라는 것이 확실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거기다가 저는 4대 보험까지 동시에 서비스한다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복지, 고용이 한 단계 업이 될 것 같아요.

확실하게 한번 추진을 해 봐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아까 서용교 위원 질문에 세 가지 얘기하셨는데, 고용률 70%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잘 알고 있고……

○**이완영 위원** 수치로 하면 지금 64.3%입니다. 이걸 5년 뒤에 70% 달성하는 데 240만 개 일자리 5년 동안 만들어야 됩니다. 연간 얼마나? 47만 5000개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저도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해서, 저는 재정일자리도 한 10조가량 있는데 재정일자리보다도 무엇보다도 기업만이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렇지요? 이렇게 보고 경제성장률이 5% 되어야 신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사람 채용한다 이런 학자들 얘기 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그래서 경

제성장만 가지고 70% 달성이 어렵습니다.

○**이완영 위원** 물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장이 또 있어야 일자리가 창출되는 건 동의하실 것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거기에 정부의 여러 가지 적극적 고용정책들이 같이 더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완영 위원** 삼성전자가 산업안전법 위반으로 2000여 건이 된다. 나 깜짝 놀랐습니다, 노동부 근무한 사람으로서. 2000건 다 한번 쥬 보세요, 저한테. 한 법 내에서 위반 건수가 2000건이라고 하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산출했는지 모르지만.

자, 그러면 이마트는 총 몇 건입니까? 뒤에 실무자 한번…… 몇 건입니까? 이마트 지적은 몇 건입니까? 이마트는 한 5개, 6개 법 되잖아요. 몇 건입니까? 뒤에 보좌하실 분 없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건수를 어떻게…… 저는 그게 놀라워요, 2000여 건 위반 이 자체가.

저는……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특히 고용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내일배움카드제 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알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문제점 많이 있다는 것 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이완영 위원** 한번 전면적으로, 과거 방식이 좋은지 내일배움카드가 좋은 건지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토해서 가지고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 개선해 보는 걸 당부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내일배움카드제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특별히 훈련시장의 장기 발전가능성하고 안정성을 위해서 다시 한번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성태**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은수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수미 위원** 민주당 은수미입니다.

쌍용차에서 전쟁 같은 해고 사태가 일어난 지 3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입니다. 24명이 돌아가신 건 알고 계실 터이고요. 1년 내에 복귀해야 했던 무급휴직자가 3년 만에 복귀한 것 외에는 해결된 게 없습니다. 여기에 옆친 데 덮친 격으로 대한문 앞에서 333일째 농성 중인 농성장 천막이 방화로 불탔고요. 현재 평택 송전탑에서 105일째 농성이 진행 중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정부가 회계조작이나 부당해고, 인권유린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외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희귀한 무능함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 화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화면을 보시면 쌍용차에서 전쟁 같은 해고 사태가 벌어진 직후 고용부에서 평택 고용촉진지구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간 1136억 원을 지원을 했는데, 보십시오. 그중에 대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대부 빼고 지원된 금액 노동자에게 딱 28억이고요. 합쳐해서 179억 원, 그러니까 1136억 원 중 딱 16%만 노동자한테, 그것도 대부분이 거의 90% 정도가 대부로 갔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우선 실업급여는 노동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기여를 하고 자기가 받아 간 겁니다. 그것도 3년 7개월 동안 딱 1인당 755만 원, 6개월간 755만 원 총액을 받는 것으로 3년 7개월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걸 자기가 냈기 때문에 그나마 받은 돈입니다.

나머지 그래도 고용촉진지구를 지정했다면 순수지원금이라는 게 있을 텐데 순수지원금 딱 2억이었습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이걸로 끝내고 고용부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쌍용자동차 파업은 불법이다 그리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딱 2억 지원한 것으로 3년 7개월을 그냥 끝낸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고용부장관께서는 쌍용자동차나 사 드리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시민이 할 소리를 장관이 했지요. 이 결과 저는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관후보자에게 몇 가지 좀 여쭙 보겠습니다.

아, 여쭙 보기 전에 다음 화면 하나만 더 보십시오.

제가 여쭙 보기 전에 하나만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태 간사, 신계륜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실직자들 입장에서는 취업이라도 됐나. 지원은 못 받았다 칩시다. 취업이라도 됐나 보면 2152명 중에 3년 7개월 중 1개월 이상 취업한 사람이 전체의 1245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뭐였느냐 봤더니 어떻게 됐냐면 자영업자가 342명이예요. 자영업자 빼고 고용보험 유지기간 1년 미만이라는 고용보험 사업장, 그러니까 고용보험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 1245명 중에 436명은 고용보험 유지기간 1년 미만의 사업장에 있다가, 1년 미만 있다가 옮긴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아예 고용보험 재취득을 할 수 없는, 즉 고용보험조차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 취업한 분이 769명입니다.

이분들 합쳐서, 자영업자 빼고, 자영업자는 아마 퇴직금 받아서 자영업 차려서 임금근로자의 급여조차도 제대로 못 받고 일을 하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그래도 취업을 했던 사람은 어쨌나 보면 1205명이 이렇게 1년 미만이거나 혹은 임시 일용직으로 떠돈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3년 7개월간 부당해고 당하고 2000여 명이 겪은 현실이고 정부가 1136억 원 쏟아부었다고 한 것이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장관으로 취임을 하실지 모르지만 장관에 취임을 하면 과거 정부의 일이라도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자들 앞에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MB정부 때라 하더라도 저는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쌍용차 사건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지금 여러 노동현안 진행 중인 현장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저런 자료들이 말해 주고 있는 대로 그 전후가 어떻게 됐는지 최대의 피해자는 근로자들이고 근로자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 실제로 재취업도 이렇게 제대로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그동안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챙기고 지원 방안들을 사전적으로 마련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고를 받고 지금 고용재난지역 선포……

○**은수미 위원** 잠깐 죄송하지만 그걸로 자르겠

습니다.

사과를 하셨으면 했는데 다시 정책문제로 넘어가실 것 같아서 차후에 다시 한번 그 문제는 얘기를 하겠고, 아마 고용재난지역 문제를 검토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건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사과에 대해서는 아직 대답을 안 하신 거고요.

두 번째로 저는 이것이 고용부의 정체성 문제하고 아주 깊이 연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MB정부 5년간 고용부는 경제부처의 하위부서였습니다. 그리고 장관의 서면질의 답변은 그 하위부서였던 관료의 말을 그대로 베껴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고용부의 위상을 바꾸고 정체성 바꾸고 MB정부 때처럼 청와대가 불법 저질러라라고 해도 ‘노’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드리는 두 번째, 그러니까 고용부 정체성 바꾸겠는지, 그다음에 청와대의 지시에 ‘노’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마지막 화면 하나만 보여 주십시오.

그다음에 최소한 저는 저 정도의 종합적 대책, 고용촉진지구 지정 실효성을 검토, 조사해서 발표를 해 주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실업부조 도입해 주시고, 사회보험 강화시켜 주시고, 정리해고 규제하고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고용부 의견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들, 그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만약에 제가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다 수용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

○**위원장 신계륜** 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훈 위원 질의합니다.

○**이종훈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처음에 서면질의에 대해서 말이 많았는데요, 이 답변서를 후보자님이 직접 작성하셨어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제가 직접 작성한 거는 아니고……

○**이종훈 위원** 관료들이 작성, 초안을……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기초 자료를……

○**이종훈 위원** 그러면 그거를 검토는 일일이 꼼꼼히 하셨나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꼼꼼히 못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종훈 위원** 이게 노동부 이름으로 오는 게 아니라 공직후보자 방하남 이름으로 지금 저희한테 오는 겁니다. 그거를 꼼꼼히 작성을 안 하시고 보내 주시면 일단 저희들이 좀 의문이 드는 게 이거를 알고도 시간이 없어서 그러신 건지, 잘 하실 수 있는데, 아니면 현실을 잘 몰라서 그러신 건지 그거를 잘 모르겠는데, 어느 쪽이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두 가지 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제가 처음이라서 이런 전체 과정에 대해서 완전한 지식이 없었고 또 두 번째로는 여러 위원님실에서 제가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정보에 대한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이종훈 위원** 질문은 많지만 사실은 중복되는 것도 많고 지금 노동 현안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손으로 꼽으면 딱 패턴이 정해져 있는데 현실에 대해서 내용을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닌가 좀 걱정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후보자님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 경험이 없으셔서 조직 장악이나 정치력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전문성이 확실하고 그다음에 소신이 거기에 덧붙여져서, 그래야 그거로 조직을 장악하고 갈 수 있겠다고 우리가 안심을 하고 후보자님을 추천해 드릴 수 있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야당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다시피 노동정책이 과거 정부로부터 전환되어야 하는데 기존의 노동부 관료들한테 휘둘리지 않을까, 뒤에 관료분들 계신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휘둘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국 대통령한테도 부담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 정책은 노동부만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노동부에 가장 기대하는 게 비정규직 대책이라고 보고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이 얼마나 비전을 갖고 계신지 그다음에 구체성 있는 대책을 갖고 계신지 좀 여쭙 보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해서 2007년도 노무현 정부 때 보호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비정규직 문제는 여전히 가장 심각한 문제로, 심각한 노동문제로 되어 있는데 심각한 노동문제로 된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비정규직 관련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고용의 불안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훈 위원 너무 추상적이라는 말입니다. 고용 불안하고 임금 낮고 그거는 그냥 누구나, 국민 일반적으로도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장관후보자님 되시면……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차별이 온존한다, 두 번째 상시 지속 업무인데도 계속 돌려쫓는다, 회전문 인사, 셋째 사내 하도급에 대해서 아무런 규제가 없으니까 풍선효과로 사내하도급이 급증하고 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되어서 우리 정치권에서도 대선공약 때 그것을 고민한 부분이고 그런데요. 차별이 온존하는 이유는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다시 말씀……

○이종훈 위원 차별이 지금도 계속 온존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사용주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훈 위원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저는 법에서 차별하지 말라 하는데도 차별이 존재하는 이유를 여쭙 보는 것이고요. 차별이 존재하는 이유는 차별시정 신청제도를…… 내려면 내가 해고를 각오하고, 계약 해지당할 각오를 하고서 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대부분의 차별시정 신청제도를 내면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 업무가 없습니다’ 하고서는 돌려보내는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현장에서.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종훈 위원 잘 알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이종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해법은 뭐예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지금 비정규직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도 새로운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있지만 불법적인 차별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소해 나가는 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직접 차별 신청을 할 경우에 고용의 불안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새누리당에서도 새로운 입법들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차별시정의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이종훈 위원 아니, 대표신청제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한 사람이라도 차별로 인정받으면 동종·유사 상황에 놓인 사람들도 차별로 인정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한데 인수위 보고서에서…… 인수위에서 활동하셨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종훈 위원 그래서 후보자님을 제가 평가할 수 있는, 국정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그 국정과제보고서인데 거기에서 전혀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없고 유사업무에 관해서는 정규직에서…… 유사업무를 하는 정규직이 없다 하는 것에서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지금처럼 너무 좁게 해석을 하면 그 부분은 해결이 안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PPT로 띄웠는데요, 지금 인수위 국정과제보고서 말씀드렸지만 후보자님이 활동하신 인수위에서 국정과제보고서가 대선공약보다 구체화된 것은 거의 없고 도리어 개혁성 있는 것은 후퇴된 것이 지극히 걱정됩니다. 저기 보시면 2015년까지 한다는 것도 삭제되고 사내하도급에서 사업주 교체 시 고용보호 그 내용도 없어지고 무엇보다도 현대자동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에서 핵심이 되고 있는 한 사람이 불법과건을 인정받으면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후퇴했어요. 그런 부분은 사실 행정으로 옮기기 위해 굉장히 구체화시키기를 원했는데 그런 부분의 내용이 빠져 있었습니까.

제가 조금 적나라하게 공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위에서 뭘 하셨습니까? 노동전문가로 유모 교수님과 방하남 후보자님께서 노동전문가로 인수위 들어가셔서 뭐가 더 좋아졌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저는 인수위에 있으면서 제가 맡은 역할들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는 인수위원이 아니었고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진 소신과 방향에 따라서 위원님들과 의견들을 많이 나누었고 최종적으로 인수위의 정책과제나 그것들의 숙의가 조정되는 것은 고용복지분과 인수위원 그리고 그 위에 국정기획조정분과의 또 조정을 거쳐서 대통령께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훈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장관후보자께서는 그러면 인수위에서 활동하신 게 그러니까 없네요? 인수위원도 아니었고……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전체적으로 정책들을 조언을 하고 제가 중요한 정책들은 다 기안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그러면 중요한 정책 기안한 것, 다른 의견 낸 것들요 나중에 자료로라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주장했다’ 이런 것이라도……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끝으로 장하나 위원 질의합니다.

○장하나 위원 민주당 통합당 장하나 위원입니다.

후보자에게 질문을 바로 던지겠습니다.

오늘 이마트에서 마칩 불법파견, 사내 불법파견 1만 명을 정규직 전환한다는 내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보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장하나 위원 당초에 2월 28일에 노동부에서 지금까지의 수사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23개 지점 그러니까 24개 지점을 조사했는데 물류센터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23곳에서 2000여 명 불법파견이 있었다, 이렇게 수사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 이것을 이마트 전체 147개 지점으로 확대했을 때 단순한 산술평균입니다마는 1만 2000명의 불법파견이 있을 것으로 추산이

되었던 상황이고요, 이미. 그리고 그러면 과태료도 매월 200억이 아닌 거기의 6배, 매월 1200억 과태료가 노동부의 약속대로 징수를 해야 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마트가 마치 본인들이 사회적문제 해결을 선도한다고 얘기를 해 놓고 또 연 600억 원의 추가비용이 든다 이렇게 해 놓고 또 취업 소외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렇게 자기 회사 자화자찬을 하는 이런 내용을 공개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노동부가 이런 이마트한테 먼저 불법사항을 인정을 하고 사죄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하게 질타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과태료가 매월 1200억 들 것을 연 600억 원이면 해결이 되었던 이런 불법파견 문제 알면서도 묵과했던 이마트에 대해서 이후에 이런 직접 고용 과정에서 고용승계나 보장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악질적으로 그 전에 직영사원 비율이 홈플러스가 62%, 롯데마트가 53%, 자체적으로 자신들은 39% 정도다 해서 자화자찬했던 내부 문건들이 있습니다, 우리 매우 잘하고 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악질적인 기업에 대해서 이후에도 상당히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내용들이 이전에는 정말 노동부로서 알 수 없었던 내용인가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그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할 것이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첫째 페이지를 보면, 지금 밝아서 잘 안 보이는데 밑에 박스만 한번 제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마트는 2011년 각 사별 중점 점검사항이라고 하여서 이마트 신세계 본점의 경영지원실에서 전 계열사의 하도급 부분에 이미 혼재 직무들이 있고 각 회사별 위장도급 판정 가능 직무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정밀 점검을 자체적으로 하고 대응방안 수립을 하라 이렇게 2011년에 경영지원실 주도로 프로젝트가 이루어집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지요.

여기서도 박스 부분만 봐 주십시오. 지금 당사의 현재 사내하도급의 운영형태는 형태상으로 완전도급이지만 운영상은 빨간 글씨로 불법파견

형태가 존재한다고 알고 있었어요. 내부적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그 밑에 회색박스에 보시면 완전도급으로 전환을 한다, 오늘 이마트 발표자료에서는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2012년부터 검토해 왔다고 해 왔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도급 형태의 서류를 완비하자 이것이 이마트의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가 상당히 있고요.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제가 제일 분노했던 것은 어떤 민간기업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러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대형 유통업체 3개 업체에 대해서 지난해, 지난해 모두 사내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노동부에서. 그랬더니 지금 빨간색 부분 보십시오. 파견법 위반 여부가 100% 법 위반 없습니다.

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이번에 이마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서는 24개 업체 중에 23개 업체가 불법파견을 다 적발을 당했고 2000여 명 적발해 냈습니다. 하지만 작년, 제작년에는 여기 지금 조사된 총 24개 업체 중에서 한 군데도 위반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고용노동부의 실태점검 현황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제대로 일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저도 이 자료를 처음 보고, 제가 지금 떨어져 자세히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제가 취임하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이러니까 지난 이명박 정부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친기업적이다’ ‘노동부에 노동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저는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를 회피할 수 없었다고 보여지는데요.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도 화면 글씨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려야 될 텐데요, 이 패널이라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보이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보입니다.

○장하나 위원 2011년에 신세계 이마트가 고용노동부한테 명절선물을 배송한 목록입니다.

여기 이름 잘 보이셔야 될 텐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자리에는 없지만 과학기술대학교 학

장으로 가 있는 전 차관님 이름도 있고요. 어마 어마합니다. 지금 흐려서 안 보이시겠지만 뒤에 계신 분들도 이름 찾고 계시지요? 제가 아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이름 부분만 지웠습니다. 그런데 소속하고 직위 확인해 보세요. 다 아시는 분들 맞지요?

뒤에서 웃을 일 아니고요. 웃을 일 아니고, 지금까지 이마트가 생겨서 13년 동안 1만 명 이상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불법파견으로, 그러다가 전태일평전이 사물함에서 나오면 그냥 잘리고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고용노동부가 소위 그냥 좀비였습니다, 좀비.

지금 ‘노동 여건이 열악해서’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고용노동부가 노동부에서 할 일을 하셨어야지요. 공동책임이시고, 방금 웃으신 분들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고개를 떨구셔야 됩니다.

이름을 다 읽으라고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남아서 제가 읽지는 못할 것 같은데 고용노동부장관, 지금 노동부 실태가 이렇다는 걸 좀 알고 일을 시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서면질의서를 보면서 실망이 아니라 분노스러웠어요.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 냈는데 이런 것을 서면질의라고 받아봐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이런 정도 보고받고 장관이…… 정말 허수아비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자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분만, 대충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의 이런 명절선물 배송 목록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들으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자세한 내용은 못 듣고,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징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박근혜정부는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지향합니다. 의법, 밝혀진 사항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저는 이 명단에 있는 분들이 승진을 한다거나 요직에 있는 것을 절대 볼 수 없어요. 끝까지 추궁할 것이고요. 이외에도 수많은

리스트를 갖고 있는데 하나하나, 그때그때 따져 물을 것입니다.

엄중 처벌할 것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중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오전 질의가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까 심상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것 같은데,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심상정 위원**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다 하셨지만 후보자의 비전과 소신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입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서면질의의 무성의와 마찬가지로 답변을 하실 때도 아주 추상적인 답변 그리고 질문의 소신과 비전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답변으로 일관하시기 때문에 과연 이런 식의 답변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 이 인사청문회가 효과적으로 검증이 가능하겠느냐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점과 관련해서 위원장께서 후보자의 소신과 비전이 제대로 검증될 수 있도록 답변 방법에 있어서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지금 심상정 위원 지적한 대로 후보자께서 평소에 갖고 있는 소신을 말하십시오. ‘나는 이래서 후보자가 되었고, 장관이 되고 싶다’ ‘나는 이런 정책을 하겠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도 맞다, 틀리다’ 이런 소신이 국민들한테 희망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위원님들이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속개된 회의에서는 좀 더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명숙 위원** 제가 그것과 연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예.

○**한명숙 위원**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대체적으로 낙마하는 사람들이 도덕성과 관련한 신상 문제가 사회 문제가 돼서 낙마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나 신상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그 장관 자리를, 특히 책임장관 자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는가, 정책에 대한 철학과 비전과 소신이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에서도 낙마할 수 있다는 것을 후보자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사실상 지금까지 잘 없던 사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후보자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도 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특히 후보자는 자신의 비전과 소신을 우리들이 읽을 수 있도록 오후에는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됨을 알려 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계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장관후보자께서도, 좀 더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오후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위원장 신계륜** 예, 발언하십시오.

○**이완영 위원** 제가 모두발언에 앞의 피켓 같은 게 좀 거슬린다라고 했는데 벌써 언론에 났어요. 그래서 제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쌍용자동차 국정조사에 반대해서 거슬린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하는데요.

지금 이 상임위의 신성한 자리에서, 제가 국회를 정말 많이 다녀봤지만 피켓 같은 것을 이렇게 걸어놓는 게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이 색깔도 앞에서 보면 지금 굉장히 눈에, 눈에 거슬린다는 거예요.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하는 이게 거슬린다는 게 아니라 저 노란색이 굉장히 거슬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위원장께서 우리 상임위에 계속 이런 게 허용이 된다면, 저희 여당 위원들도 예를 들면 ‘지금 정부조직법 빨리 야당들 해 주시오’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 그런 것을 질서를 좀 잡아 달라는 뜻에서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니까 참고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계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게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말하겠다고 하고 하는 것을 꼭 제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보시고요.

○**이완영 위원** 저는 발언할 때 이렇게 내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상시 지금 저렇게 해 가지고 있는 게 제가 지금 눈이 굉장히 피로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신계륜** 들어오시면 장하나 위원과 상의하겠습니다.

자, 질의 순서는 오전 질의 순서와 똑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순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朱永順 委員** 예.

○**위원장 신계륜** 질의시간은 10분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朱永順 委員** 새누리당 주영순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연결해서……

쌍용차 경영정상화가 11만 명에 달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더 나아가 고용확대에 기여할 수가 있고 평택시민과 시민사회단체와 노사가 국정조사를 반대하고 있고 또 지역 및 국가경제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후보자께서는 동의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쌍용차의 조기 정상화를 통해서 정리해고나 명예퇴직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복귀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朱永順 委員** 그러면 국정조사 문제를 포함해서 쌍용차 경영정상화를 위한 후보자의 소신이 무엇인지 확실히 의지를 한번 밝혀 보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지금 쌍용차 관련해서 그동안의 사태의 추이들은 상당히 복잡하게 진행된 것으로 제가 그동안에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사용자 측에서도 그렇고 노동조합 측에서도 그렇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다툼이나 소송들이 진행 중에 있고,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기업단위의 노사 문제는 노사가 일단 자율적으로 합리적 수준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정부도 할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朱永順 委員** 후보자께서는 고용률·중산층 70%

달성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는데, 사실 국내의 경제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그 목표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간단히 답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아까도 말씀했듯이 힘들지만 달성해야 될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朱永順 委員** 후보자께서는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알고 있습니다.

○**朱永順 委員** 바세나르 협약의 핵심은 정부 중재하에 노조가 임금인상 요구를 억제하는 대신에,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서 청년과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모든 노사 현안도 한국형 바세나르 협약과 같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서 실천이 가능하도록 노동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복안을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고용률 70% 달성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경제위기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노사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노사 간의 협조가 없이는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이나 이런 외국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큰 틀에서 장시간 근로라든지 정년 연장과 같은 중요한 사회적 이슈들을 진지하게 논의해 나가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朱永順 委員** 예, 됐습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교육기관에서는 비용 문제 등으로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이끌어 낼 수 있겠습니까? 간단히 이야기해 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저희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큰 틀에서 비정규직은 될 수 있는 한 정규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전환되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고 원칙입니다.

○**朱永順 委員** 예, 됐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더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님?

○朱永順 委員 됐어요.

그런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청년층의 해외 취업 및 창업 활성화입니다. 대선공약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 해외 취업 지원사업의 경우 해외 일자리 질과 지속성에 대한 부작용을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있는지, 또 창업의 경우 실패에 따른 리스크를 정부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간단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과거의 글로벌 청년인재사업들이 제가 살펴보니 가장 큰 문제가 수요처에 대한 개발이 없이 여기서 훈련을 시켜서 밀어내기식의 공급을 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 것을 제가 파악했구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먼저 수요처, 우리가 해외 한상네트워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KOICA라든지 KOTRA 이런 데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먼저 수요처를 개발하고, 또 여기서 우리 청년들을 내보낼 때도 무조건 어떤 여건에 따라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처에 맞는 맞춤형 훈련을 통해서 준비된 상태로 해외에 청년일자리 영토를 넓혀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朱永順 委員 후보자께서는 과거부터 최소정년제 의무화를 통한 적극적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자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朱永順 委員 60세 최소정년제는 임금피크제와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는 인력 구조조정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데, 제도적인 보완책이 있으면 간단히 말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그동안에 고용연장의 가장 침해한 형태인 정년 연장 부분에 정부도 많이 노력을 해 왔고, 이번 박근혜정부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정년 60세 최소정년을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의 형평성 문제인데, 그중에 가장 걸리는 부분들이 비용 상승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라든지 직무 재설계들을 동시에 추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임금피크제 부분만 해도 그동안 진행돼 오면서 사용자 입장에서 약간 오용되는 그런 사례들

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남용되는 사례들을 최소화하면서 제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朱永順 委員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율은 OECD 회원국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화성공장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 무려 1934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됐고, 지난해 불화수소 누출로 대형 참사가 발생, 구미에서 불산 누출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사업장의 안전관리 의식 부재는 물론 고용노동부의 예방적 관리 감독 시스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시설 노후화를 조사한 것이 지난해 12월 단 한 차례였다는 사실도 냉철히 반성을 해야 됩니다.

후보자께서는 산업재해의 사전 예방에 대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또한 시설 노후화 개선을 위해 유관 부처와 협의할 어떤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현재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 부분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일단 사전 점검, 사전 예방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대형 산재사고들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러한 계기로 해서 먼저 저는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의 예방시스템, 특별히 정보시스템이라든지 또 아까 한 지역에서 하나의 공장이 아닌 여러 개의 공장의 위험한 파이프라인들이 지나가고 있는 이런 아주 위험한 물질들이 공단 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앞으로 이런 대형 산재사고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朱永順 委員 마지막으로, 최근 취업자의 57%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다는 KDI의 보고도 있었지만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개선은 꼭 필요합니다.

최근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에 대한 노사정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합리적으로 제도를 마련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지금 현재 특수고용직 관련해서는 이미 산재보상보험이 적용되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6개 직종 관련해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법에 여러 가지 조금 누수가 있는 부분이 근로자가 원하면 그걸 적용 제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봤더니 경험상으로 한 10% 미만도 안 되는 실질 가입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 생각에는 조금 더 획기적으로 높여서 일단 하나의 특고에 대한 산재보험부터 확실하게 진행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고용보험 부분입니다. 고용보험도 그동안에 특고의 어떤 근로자성이라든지 사용자 관계에 대해 노동법, 근로기준법상에서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제 생각은 그걸 떠나서 일단 특고는 사회보험 차원에서의 보호를 강구하고 접근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朱永順 委員**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명숙 위원 질의합니다.

○**한명숙 위원** 지난 MB정부하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 중의 하나가 언론사 공동파업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한명숙 위원** 보면 MBC노동조합이 170일, KBS가 95일, 국민일보노조가 173일, 연합뉴스가 103일, YTN노조가 10단계 부분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었던 언론사 공동 연대 파업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언론 장악을 위해서 MB정부가 사장을 낙하산 인사를 하고 그로 인해서 공정 보도가 훼손됐기 때문에 언론 관계자들이, 언론 노조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공영방송의, 자기의 공정방송이라는 최대의 목표가 훼손되는 결과를 낳아서 이것이 작년의 총선과 대선까지 이어졌다고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

그런데 그중에서 YTN노조는 해고자가 6명이었는데 2008년에 해고됐습니다. 지금 5년차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2월 7일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떤 발표를 했는

가 하면 국무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 불법 사찰과 관련해서 권고를 했는데 이것은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한명숙 위원** 그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등의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불법 사찰 과정의 핵심 실무자가, 그 책임자들이 현재도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 불법 사찰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근간을 흔드는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YTN에도 해당이 됩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완전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중요한 것들은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지금 고용노동부에도 그 관계자들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YTN 해고자들은 신정부 낙하산 인사를 사장으로 앉히고 노조를 고립시키고 와해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저항함으로써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노사문제가 아닌 정권의 불법행위 피해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노사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원상복귀시켜줘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인 해고자 문제는 인수위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인수위에서 실무 테이블을 만들기로 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이 언론사 해고자 관련 부분들은 제가 있는 고용복지분과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

○**한명숙 위원** 어쨌든 간에, 어느 분과에서든지 간에 언론인 해고자 문제를 인수위에서 실무 테이블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보는데요.

YTN 해고자 문제는 정권의 불법 사찰, 낙하산 인사 투입으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YTN 해고자 복직 문제도 노사 간의 대화로만 풀어야 되는지, 이분들이 법원 판결을 기다려 가지고 5년이나 세월을 보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소신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안타까운 그 과정들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과거의 시대적·사회적 상황들이 개인의 어떤 해고로 이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행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수위원회에서 실무 TF가 마련됐다고 하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 실무 TF에서 정한 기본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근로자의 어떤 권익 보호라든지 다시 자기가 일하는 직장에 대한 복귀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검토할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검토를 하고 성실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예.

오전 답변 중에서 현장 중심적인 노사정책을 하시겠다, 그리고 상생과 대화를 통한 노사 문화를 구축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정말 수년 동안 해고가 되고 또 공동 언론파업이 유례없이 일어났던 이런 현장을 장관이 되시면 한번 찾아가서 노동조합이랑 대화하고 상생의 노사 문제 또 현장 중심의 노사 문제를 구축하신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겠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꼭 한번 방문하셔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좀 찾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MBC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환노위에서 MBC에 대해서 국정감사 그리고 또 청문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MBC의 김재철 사장은 고의적으로 두 번씩이나 외유를 하면서 참석하지를 않아서 저희들이 고발한 상태입니다.

노사 상생의 모범이 언론사노조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언론사는 노사가 서로 대화하고 상생하면서 일을 해결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체협약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거의 사장화되다시피,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노사 상생의 모범이 언론사노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느닷없이, MB정부 들어서 낙하산인사가 유례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MBC노조의 경우도 노사가 상시적으로 대화를 통해 단체협약을 수정하지 않아도 불편함이 없을 정도였는데 정말 지금 최악의 경우를 겪고 있습니다.

MB의 무리한 언론 장악 시도로 해서 MBC 노사관계가 파탄이 났는데요. 김재철 사장 전의 MBC로 돌아가지 않으면 MBC는 시청률이라든지 편파 방송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서 사실상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OBS노조가 28일 파업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박근혜정부가 들어서서 첫 파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첫 파업인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도 접수되고, 최소한의 근로감독이 되었다면 파업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었는데 고용노동부가 언론노조에 대한 파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언론사 근로감독은 작년 한 해에 방송사만 보면 32건, 신문사는 13건, OBS 경인TV에 대한 지난 3년간 근로감독 내용 중에 의미 있는 근로감독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만약 있었다면 이런 파업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언론사에 대한 적극적인, 상시적인 근로감독 내지는 특별근로감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특히 MBC의 경우는 파업에 참여했던 100여명의 조합원이 있는데 아직 현장에 복귀를 못하고 있어요. 파업에 참가했던 조합원은 격리조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보복 인사를 당하고, 부당 전보를 당하고, 굉장히 자질이 훌륭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햄버거를 만든다거나 샌드위치를 만드는 데로 교육 발령 내렸다가 징계를 당하고 또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교육 발령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상 퇴출프로그램이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정말 부당노동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근로감독도 필요하지만 MBC의 경우는 특별근로감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MBC에 대한 노동부의 대책이 그동안 전무했다고 보는데 정상화 방안이 없는지,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는데 특별근로감독 실시할 의사는 없는지 장관이 되시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복

안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이런 노사관계의 어떤 이슈들이 더 크게 번질 수 있고 위험한…… 의미 있는 사업장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근로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MBC의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근로감독을 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까지의 정보에 의하면 특별근로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몇 가지 요건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요건들을 더 살펴보고 특별근로감독 이전에 어떤 실태 파악이라든지 조사 그리고 특별근로감독이 아닌 근로감독 수준에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상황하고 또 지금까지 어떤 여러 가지 진행된 법적 절차, 판단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근로기준 위반이라든지 또 노동법 관련 위반사항들이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법적 조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판단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명숙 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장 중심, 대화와 상생을 통한 노사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현장을 꼭 방문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소통을 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권유하고 싶고요. 거기에 근거해서 그러한 현안들을 아주 실감을 느낄 수 있도록 좀 장관께서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을 꼭 좀 방문해 주시고, 근로감독이나 정리해고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 보여주셨으면 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정부에서, 제 입장에서는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 대로 그동안에 제가 고용정책 부분에 있어서 연구를 많이 하고 현장 경험이 많이 있지만 노동정책이라든지 이런 노사관계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 그룹하고 또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얘기를 끊임없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직접 가서 그것이 만약에 현장의 노사관계 화합이 이루어지고 발전을 이룩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어디든지, 언제든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예, 꼭 그 말씀 실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위원장 신계륜** 다음, 최봉홍 위원 질의합니다.

○**최봉홍 위원** 새누리당의 최봉홍 위원입니다.

장관님, 노동행정은 우리나라 전체 이천만 노동자들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직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 가지고 3일, 4일을 헤매서 찾아오는 목자가 있는 대신에, 99마리 양이 한꺼번에 떠내려가는 것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느냐, 그 정책적인 판단을 장관님께서 먼저 하셔야 되는 그런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쌍용차 같은 경우 쌍용차가 현재 요구하는 사항 중에 본 위원이 현재까지 대강 파악한 것으로는 쌍용차의 요구사항이 회계조작이다, 강제 진압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다, 그다음 정리해고자 복직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희생자 보상이다, 거기에 덧붙여서 정부가 기술 유출을 방조했다, 이 다섯 가지가 주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공판 중에 있는 게 있고, 쌍용차를 인수한 마힌드라는 자기는 대한민국 정부와 합의에 의해 가지고 깨끗한 회사를 인수했기 때문에 자기책임 한도는 합의서에 써놓은 그것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쌍용차를 국정조사를 해 가지고 회계조작이 사실로 드러났다, 강제 진압을 했다, 이것이 유죄로 전부 해결이 된다면 그것을 해결해야 할 사람은 결국 마힌드라입니다.

그러면 마힌드라가 쌍용차를 인수할 때 했던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마힌드라가 현재 쌍용의 70%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주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전부 다 져야 하는데 그 사람들 안 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을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그동안에 쌍용

차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어떤 해외 자본들이 국내 투자되는 과정 그리고 또 그것이 국내에서 아주 복잡한 고용관계를 낳게 되고, 또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제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호적으로……

○**최봉홍 위원** 그러면 한번 제가 여쭙 보겠습니다.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거꾸로, 역으로 우리가 미국의 더글러스 항공을 샀다고 합시다. 70%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 가져오면 기술 우리가 안 가져옵니까? 당연히 가져오겠지요?

그러면 지금 기술 유출 문제를 얘기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기업의 70%를 뺐다면 우리 기술이 빠져나간다고 보고 당연히 알아야 할 사항인 것 같고, 그다음 또 하나는 지금 쌍용차를 가지고 지난번에 5대 종단에서 온 분들하고 제가 만나서 대담을 한번 해 봤는데, 그 양반들이 쌍차에 대한 모금을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가지고 하는 것 좋습니다. 좋지만, 그러면 그 모금을 하는데 여기 보상이나 이런 것을 처리하려면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힌드라가 내놔야 되겠습니까? 마힌드라가 안 내놓을 때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국민의 세금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도 일단 당사자 책임주의가 있기 때문에……

○**최봉홍 위원** 당사자 책임주의인데, 당사자는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지금. 전 정부에서 했고, 그다음에 해 가지고 회계조작이다 했지만 그것도 재판이 나와 봐야 알겠습니까마는 회계조작이라고 했을 때도 지금 마힌드라가 당사자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민법상으로 봐서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

○**최봉홍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하나 더 물겠습니다.

지금 이마트, 현대, 쌍용차, 유성기업, 노사 문제가 벌어진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노동부는 뒤로 제쳐놓고 국회가 나서야 됩니까? 이 현실에 대해서 한번 장관님 되시고 난 후에 어떻게 이런 문제를 처리하실는지 한번 의견을 묻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사업장들이 굉장히 사회적인 파장이라든

지 의미성이 커서, 또 지금 이마트라든지 현대자동차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노동 현안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노동법인 노동관계법 또 근로기준, 고용관계 가지고 있는 합의가 엄청나게 중요한 합의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국회에서도 사내하도급법이라든지 파견법 개정안들이 많이 상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봉홍 위원** 그런데 내용 면으로 봐 가지고는 노사 문제를 근로감독관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노동부가 근로감독 업무를 평소에 성실히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한 문제가 정치권에 안 들어오고 자체 내에서 해결해서 유도를 해야 되는 데……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그것은 노동부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최봉홍 위원** 그런데 현재는 보면 전부 다 국회에 먼저 온다 이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참작하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그 점 참작하시고 앞으로 그러한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좀 근로감독 의무를 충실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최봉홍 위원** 그다음에 사전에 뭐가 잘못된 게 있으면 과감하게 쟁취할 것은 쟁취하고 하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또 국회는 근본에 맞는 국회의 의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최봉홍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문제, 지금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정상적으로 합의를 이룬 적은 아직까지 단 두 차례에 불과합니다. 전체 최근 10년 동안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민노총, 한노총이 빠지고 난 뒤에 공익위원으로 해 가지고 결정을 지었습니다, 4860원. 이 4860원 지금도 못 주는 기업이 있습니다. 심지어 국회 인턴들도 이것 해당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노사

간에 합의를 하면 더 좋은데 실태가 그렇게 안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과 노동계는 월 평균임금 50% 수준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기업의 형편상 저는 도저히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이 구성원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제가 알기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회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것이 국제적인 추세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마 법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구성보다는 실제로 그 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양보라든지 타협 또……

○최봉홍 위원 장관님이 되시고 나면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가지고, 지금 노동계에서 또 경영계에서 요구하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조사를 하셔서 가지고 앞으로 그런 분쟁이 안 생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들여다보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그다음, 체불제로서비스팀을 운영하고 있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최봉홍 위원 민간조정관에서 진행하고 나중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에게 송부되고 있습니다.

또 도산 시에는 체당금제도가 있습니다마는 체당금제도가 최대 기일 90일까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실지 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는데 상당히 너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이것 좀 간소화하는 방안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이 체당금 자체가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체불이 생기면 민간조정관하고 근로감독관하고 합동팀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체불임금 관련해서 지금 현재의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개선해야 될 부분은 적시성하고 신속성이라고 느꼈고……

○최봉홍 위원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빨리 근로자들에게 어떤 긴급생활보호라든지 할 수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안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최대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그리고 체불임금 청산 과정도 그렇습니다. 체불임금 청산이 맨 먼저 체불에 대한 법이 형성된 것이 박찬중 의원이 70년대 말에 만든 겁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체불임금은 체당금까지 만들고 국세보다는 우선하고 근로당보다는 뒤로 물러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체불을 발생시키고 나면 근로당권자들이 다 달라 들어 가지고 근로자가 임금을 찾으려고 하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근로당권에 좀 우선돼 나가는 것, 예를 든다면 체불임금이 발생한 그 연도가 근로당보다 날짜가 앞서 있을 때는 근로당보다도 발생 시일에 맞춰 가지고 근로당권에 우선해서 근로자들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그걸 포함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임금채권보장기금이 너무 수세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포함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봉홍 위원 임금채권보장기금은 기금으로 주는 것이고, 체불이 생겼으면 체불 발생주가 책임을 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채권단들이 체불임금을 내주고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에 위원 질의합니다.

○한정에 위원 민주통합당 한정에입니다.

모두발언을 하신 것이 정말 구체적이지 않고 내용을 대체적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 놓으신 것 같아서 이것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발표를 하신 모두발언 중에 보면 ‘일자리 문제는 어떤 정책보다 우선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하셨는데, 어떤 정부도 일자리 문제가 시대적 과제가 아니었던 적이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특별히 박근혜정부라고 일자리 문제가 더 큰 문제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더 큰 문제는 아닌데 국정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 그 문제……

○**한정애 위원** 일자리 문제는 다 초점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자리라도 일자리를 만들면 된다고 하는 것에 방점을 뒀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일자리의 질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만 급급했지 그 일자리의 질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정말 4대 보험의 사각지대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조차도 케어를 하지 못하는, 그래서 더 이상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오죽했으면, 지난 정권에서 노동부장관이라는 사람이 ‘비정규직 100만 대란설’ 이런 얘기를 유포하고 다녔습니다. 이게 해당 부처의 장관으로서 적합한 얘기였는지 저는 정말 의심할 수밖에 없지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 중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된다고 하면 기본과 원칙을 세워 지키면서 그간의 정책과 제도를 세심히 다듬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고용노동부의 기본과 원칙은 뭐니까? 기본과 원칙을 뭐를 세워서 지키셔야 되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정부는 정책과 행정……

○**한정애 위원** 고용노동부가 왜 존재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주어진 업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존재 이유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정애 위원** 고용노동부의 기본과 원칙을 세워 지키겠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어떤 기본을, 어떤 원칙을 세우고 지키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말 그대로 기본과 원칙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정애 위원** 세부적으로 이것 사실 별로 고민하지 않으시고 좋은 말만 계속해서 이렇게 나열을 하시다 보니까 그렇고요.

여기 ‘생애주기별 맞춤형 취업 지원’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취업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도 없고.

기본과 원칙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하나만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 판결조차도 무시하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고심에서 나온 판례 중에 이런 게 있지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수당은 통상임금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노동부는 여전히 본인들의 행정해석상에 이것을 집어넣지 아니하고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으시지요?

그 이유를 물어본 것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답변에 이렇게 했습니다. ‘판례와 행정해석상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산업계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자, 그래서 다시 고용노동부의 기본과 원칙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정부조직, 정부 부처가 대부분 다 산업계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아무도 노동자의 손을 들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은 단 하나의 부처, 노동부만이라도 일하는 사람들이 좀 기댈 수 있는 부처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저는 그게 기본과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존재하는. 그런데 노동부마저도 산업계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최고심에서 최종 법해석의 최종 권한, 하나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행정부에 있습니까, 사법부에 있습니까? 법의 최종적인 해석 권한이 행정부에 있습니까, 사법부에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제가 법쪽은 잘 모릅니다마는 양쪽에 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정애 위원** 양쪽에 다 있는 것으로 진행을 하다가 그게 고소 고발이 진행되거나 해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최고심에서 판결이 나오면 결국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그것을 정리하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그럴 것 같습니다.

○**한정애 위원** 거기에 따라서 행정부가 다시 또

그것을 조정해야 되는 게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한정애 위원** 그런데 이상하게도 노동부는 노사관계에 해당되는 일이 최고심에서 결정이 나면 대체적으로 행정해석을 고칩니다. 잘하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비용과 관련된 부분, 임금이라든지 고용과 관련된, 불법 파견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절대로 행정해석을 고치지 않습니다. 왜? 산업계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은, 노동자들은 늘 사법부의 판단에다 기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이틀 만에 나오는 건가요? 이번에 GM대우 몇 년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까? 10년 걸렸습니다. 10년 걸려서 벌금 700만 원 맞았습니다,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 결국 노동자들 보고 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법에도 기대지 말라는 얘기이고, 최후의 보루인 고용노동부가 그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고용노동부가 그 기본, 그 원칙에 입각해서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 현대자동차 최병승 씨 얘기 많이 하셨는데, 대법원의 판결을 읽어 보면 그게 꼭 최병승한 명에게 내린 판결입니까? 최병승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위치에, 그래서 그 사람이 최병승한 명인가요, 그런 분들이 현대자동차에?

한 명이 아니라고 국회에서도 수십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요. 고소 고발된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노동부가 그러면 있을 필요가 없지요.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부에 기댈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후보자께서 얘기하는 기본과 원칙을 세운다고 하는 게 대부분의 정부부처가 하고 있는 산업계의 편을 들어 주고 있는 것…… 한 개의 부처 정도는 일하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 주는 것이 맞다, 그것이 기본이고 그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일하는 사람들이 고용노동부의 중요한, 섬겨야 될 정책 대상이고 또 그분들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들어야 될 부처라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법적인 정확한 행정해석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고용노동부

의 입장에서도 만약에 사법적인 판단들하고 행정적인 해석이 괴리감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과 사회적인 여론 수렴을 통해서 좁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전문가의 의견과 사회적인 여론 때문에 한 번도 노동부가 산업계의 눈치를 보지 않고 행정해석을 변경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말씀을 또 하고 계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법원의 최종판결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래서 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법원의 판결의 최종심을 말하는 겁니다. ‘판결에 부합하게끔 행정해석을 고칠 의향이 있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몇 가지 중요한 사안들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제가 장관으로서,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가지고 있는 법적 도구들을 동원할 수 있으면 그러한 격차들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답답하네요.

여기 그리고 자료에 또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은 좋은 일자리를 나쁜 일자리로 대체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때까지 노동부는 그러면 뭘 했습니까?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계셨다는 것밖에 안 되지요, 지금 이것 모두발언 보면? 그렇게 남용함으로써 차별이 진행되는 것을 그냥 보고 있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그러면…… 그리고 그 밑에다가는 ‘합리적인 비정규직의 활용은 인정하되……’ 어떻게 합리적인 비정규직의 활용을 인정해야 됩니까, 합법적이어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불법적인, 불법파견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여기에는 하나도, 모두발언에 하나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정리해고로 대변되는 쌍용자동차, 콜트콜텍, 비정규직의 대명사처럼 되어 있는 현대자동차 비정

규직 문제, 이게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문제이고 지난 5년 동안 밀린 숙제이기도 한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하나도 표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무 좋은 말만 많이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묻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지금 부족하고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그래서 위원님, 제가 그 밑에 보시면 ‘비정규직 사용의 무분별한 남용과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공공부문부터 앞장서고 민간기업의 고용 관행도 바꾸어 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한정애 위원** 지금까지 노동부가 잘못했던 것에 대한 반성이 먼저 있어야 되겠지요. 노동부가 자기 역할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하신 기본과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은 처절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그런 위원님의 취지를 제가 만들어서 과거에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더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계륜** 한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서울 강서구를 김성태 위원 질의합니다.

○**김성태 위원** 새누리당 강서을 김성태 위원입니다.

후보자, 점심 잘 드셨습니까? 소화 잘 안 되지, 뭐.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소화는 잘 안 되는 상태입니다.

○**김성태 위원** 그렇지요?

(웃음소리)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학자가 이 사회현상에 대해서 비판하고 새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생명력이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사회과학 학자로서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도 한때 제가 기대를 많이 한 교수가 강의하는 강의를 제가 신청해 놓고 막상 가서 강의를 들었는데 전혀 기대하고 달랐을 때 저는 그냥 딱 한 번 듣고 그다음부터 그 강의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현실은 연구원의 눈으로 읽을 때와 지금은 너무나 크게 달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장관후보자로서. 인정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제가 배워야 될 일이 많고 오전에도, 사실은 처음이라서 상당히 많은 부분 당황스럽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들에 대해서 제가 성심껏 하려고 그랬지만 진정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잘 전달되지 않았다면 더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태 위원** 본 위원도 오전 질의를 마치고 오찬 장소에서나 또 개인적으로, 특히 우리 새누리당 위원들조차도 오전의 답변이나 또 자세, 태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금치 못하는 위원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본인도 상당히 마음이 편치를 않았어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저의 진정성하고 좀 다른 결과를 낳았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관내정자 같은 경우는 타 정부부처 장관내정자들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의 소신과 결기는 분명히 타 부처 장관내정자하고 달라야 됩니다. 왜 달라야 되느냐,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산업현장의 노사 간의 균형을 또 지켜 줘야 되고, 이런 많은 일들을 해 내려고 그러다 보면 박근혜정부,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그냥 무조건 ‘예스’만 답하는 그런 장관인 것 같으면 여기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타 국무위원들은 전부 ‘예스’라고 그럴 때 그래도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라고 답변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결기가 있어야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방하남’이라는 사람이 정부 산하 공기업의 원장이나 기관장 한 번 하지 않고, 국회의원 한 번 안 해도, 노동부 관료 출신 아니라도 ‘아, 저 사람 소신 있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신뢰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답변하는 자세나 태도, 내용을 보고…… 내가 어제도 국회 의원회관에 1시 반에 도착해서 좀 자료를 검색하는데, 아까 질의 답변 나온 것 보고 정말 놀라서 30분 만에 제가 그냥 지역으로 가 버렸습니다, ‘볼 게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답변마저도 오전에 그런 형편없고 성의 없는 자세로 일관한다 그러면 힘들어지

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래도 장관내정자로서 평소 ‘아, 저런 문제는 내가 장관 되면 한번 소신 있게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 때로는 야당 위원들의 원성이 나오고 지탄이 터지더라도 그런 소신을 밝힐 때 밝혀야 되고 또 그동안에 잘못된 정부의 관행이나 그런 노사관계의 문제가 있더라도 바로잡아 보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팬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팬이 없어요, 여야 양쪽 다. 앞으로 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의 경우……

○김성태 위원 잘못됐지요, 서면답변이?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제가 최종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잘못된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김성태 위원 대단히 크게 다시 한번 사과해 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 모든 것들을 꼼꼼히 살펴야 되는데 살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오후에는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힘을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적극적으로 하세요, 적극적으로. ‘예스’도 좋고 ‘노’도 좋으니까 적극적으로 하세요.

본 위원은 지난번 대선을 앞두고도 특히 정치권에서 총선이든 대선이든 노동계에서 정치권에 줄서기 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잘못된 거다, 오늘날 노동운동의 위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특히 정치권에 빌붙을 생각만 하는 그런 일련의 산업현장의 노동운동 지도자를 저는 국회 본회의장에서든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여야 정당, 대선 앞두고 절대 노동계 줄 세우지 말자 그런 요구도 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래서 저는 폴리유니언이라는 말을 제가 지난 대선 공간 전에 한 적이 있거든요.

‘폴리유니언’이라는 말 들어 본 적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제가 지금 들어

보니까 아마 폴리페서(polifessor)나 이런 걸 유추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노동운동을 앞으로도 어설픈 정치적 편향이나 어떤 정치권에 빌붙는 그런 노동운동의 행태보다는 한마디로 노조운동이 자주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가운데 기존 정치세력들 간에 건강한 긴장감을 형성하고 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집단으로서 올바른 노동운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이게 장관이 똑바른 소신이 있어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은 지난번 정부에서 제3노총이 출범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노동운동이, 제3노총이 서지를 못해서 노동운동의 위기가 생긴 것 아니에요. 산업현장 평화 안 나오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복수노조나 노조전임자 문제에 대해서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내정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제가 알기로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상당히 오랜 진통 끝에 만들어졌고 지금 현재 복수노조나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시행된 지가 한 2년, 길게는 3년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본적인 취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현장에서, 기업현장에서의 어떤 정합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제도나 법을 고칠 용의가 있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으로 알고, 그런 부분들은 저는 언제든지, 법과 현실이 괴리가 있다면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서 법을 고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도 국회에서 추슬러 나가시겠지만 정부 입장에서 어떤 의견이 있으면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가령 복수노조 같은 경우도 2010년도에 도입될 당시에는 이것은 정치적 의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전임자 임금과 복수노조는, 본 위원도 노사관계에 항상 협상 당사자라도 많이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제도는 항상 맞물려 왔습니다, 십수 년간. 그래서 정치의 부산물인데, 지금 대한민국 산업현장에서 복수노조가 되지 못해서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가 구속되고 훼손되는 경우는 나는 그렇게 없다고 봐요.

대신 그보다는, 지금 현재 복수노조는 노노 간

의 갈등, 특히 노사관계에 있어서 편법 이것만 산업현장에 난무한 복수노조가 되어 버렸어요. 그렇다면 복수노조는 저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장관내정자로서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명확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현재 복수노조 관련해서 말씀하신 두 가지 혹은 세 가지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마찰들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만약에 법 제도를 개선할 것이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알기로는 사용주의 지배 개입에 의한 노조 결성과 관련된 불법행위들이 몇 군데 사례들이 발견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당노동행위이기 때문에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서 해소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좋습니다.

지난번 대선 공간에서도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겠다고 공약한 게, 여기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 저하고 같이 그때 당시 많은 대선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근로시간면제제도나 복수노조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쟁점들에 대해서 결론은 사회적 논의 형태지만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합리적인 제도적 방안 도출이 시급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되겠다’ 그런 평소의 생각하고 또 소신이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원래 법 자체를 제가 알기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노조가 약간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근로시간 면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호혜가 갈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전임자든지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재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사정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들을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적절한 조치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 부천 부평을 홍영표 위원 질의합니다.

○홍영표 위원 민주당 부평을 출신 홍영표 위원입니다.

방하남 장관후보자에게 제가 오전에 질의를 하면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그 토대 위에서 또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방하남 장관후보자의 답변을 제가 종합해 보면 저는 도대체 노동문제, 고용정책, 고용노동정책 전반적으로 너무나 업무 과약도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제가 이 답변을 듣다 보니까 꼼꼼하게 살펴보고, 세세하게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만 하시는데 지금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마트 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을 국회에서 2년 전, 3년 전부터 이런 불법파견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특히 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 대법원 판결난 것까지, 그런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이마트도 지금 와서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서 어떤 적극적인 행정조치와 법적인 처벌 이런 것이 예상되니까 지금 기업에서 1만 명을 하루아침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방하남 장관후보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이런 고용노동정책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서 방치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한 게 사실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이슈들이 여러 가지 평가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잘못된 부분도 있고 잘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이마트라든지 현대차, 특별히 고용의 안정성 그리고 비정규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근로자의 어떤 고용안정이라든지 권익보호, 차별시정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국정 차원에서 혹은 행정 차원에서 추슬러 가야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법적인 어떤 지원이라

든지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노위의 여러 국회의원들께서 관련법들을 국회에 상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법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추이를 지켜보고 또 정부의 입장에서 이런 방향으로 조금 더 법이 입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 저는요 장관후보자님의 답변을 들을수록 저분이 과연 박근혜정부의 새로운 고용노동정책에 어떤 변화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분인가 하는 의문이 계속 듭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명쾌한 문제에 대해서도 소신도 없이 철학도 없이 지금 답변을 빙빙 돌아가면서, 아니 불법과건 문제 법적으로나 지금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이렇게 이마트처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고용노동부나 정부에서 조금이라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으면 이런 것들이 이미 1~2년 전에 다 해결될 문제 아니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영표 위원** 그렇게 명쾌한 문제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지금 무슨 답변을 하시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아닙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비정규직 관련해서 정부가……

○**홍영표 위원** 제가 비정규직만 물어봤고요, 비정규직 문제도 광범위하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불법과건 문제 얘기했습니다.

명확하게 우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그간에 정부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외면해 왔고 대기업 편만 들어왔고 그것을 제대로 평가하면서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대가 됐으니까 바뀌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장관후보자한테 기대를 하는데 제가 그런 정도의 어떤 답변 태도로 봐서는 어떤 의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법과건이라든지 비정규직의 문제, 남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정부는 확실하게 법과 원칙을 세워 가면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쟁겨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대선 공약하고 그다음에 인수위에서 정리한 노동정책의 중요한 방향이 굉장히 달라졌고 후퇴했다는 것을 아까 후보자도 인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후퇴한 것보다도 여러 가지 방법상의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홍영표 위원** 방법상의 문제가 아니고 후퇴한게 명백합니다, 비정규직을 비롯해서 중요한 고용노동정책에 있어서.

그 부분을 아침에 인정하셨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위원님이 보시기에 어떤 후퇴한 부분이 있다면……

○**홍영표 위원** 지금 벌써 시작도 하지 않아서 우선 대선공약에 대해서 심각한 후퇴를 했습니다, 노동정책 쪽에서 보더라도.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장관후보자께서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도 답변도 제대로 못 하고 소신도 없는 이것에 대해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제가 하나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법과 원칙을 입만 열면 말했습니다.

그 결과가 노동자들의 어떤 노동권은 심각하게 제약하면서 불법에 이렇게 노출되도록 방치하면서 대기업 편만, 대기업 편들기만 해 온 것이 이명박 정부의 법과 원칙 아니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어떤 정부든지 위원님께서……

○**홍영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선,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초기에는 공공부문의 공기업 선진화 이렇게 해서 실제로 어떤 공기업 노조나 이런 것을 파괴하는데 앞장섰고요, 발전노조의 사건들 아시지요?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홍영표 위원** 그다음에 쌍용자동차 회계조작에다가 기획 부도를 내서 2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쫓겨나는 과정에서 정부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다음에 최근에 폭력용역 사태, 창조컨설팅이라든지 컨택터스라든지 이런 불법들이 전국에서

횡행하고 있는데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정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법과건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방치해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법과 원칙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대기업이나 힘 있는 사람들 쪽에만 적용되는 법과 원칙을 얘기하지 말고요.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 편에 서서 그리고 수백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런 쪽에 서서 생각하는 장관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과 원칙,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불법적인 상황들에 있어서 거기에서의 법과 원칙이라 함은 사용자나 기업에서 어긋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법과 원칙이 사용자나 기업에 적용이 돼야 되고, 만약에 노동계에서 노동조합에서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법과 원칙은 노동계에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균형을 맞춰 나가는 것이 정부의 어떤 기본적인 책무가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서 드린 것입니다.

○홍영표 위원 그것은 뭘니까, 교과서적인 말씀하시지 말고요. 그렇게 기계적 균형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상은 대기업 편들기만 해 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노동조합의 설립과 관련해서요, 지금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 내주고 있지 않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홍영표 위원 설립 허가 하고 있지 않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영표 위원 그다음에 또 일부 언론에 보면 전교조, 지금 이게 합법화된 지가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부수적인 어떤 이유를 대면서 전교조도 지금 불법화할 움직임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불법화·합법화 얘기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동안에 이제……

○홍영표 위원 아니, 의견을 말씀해 보시라는 겁니다, 장관후보자로서.

ILO 국제조약이나 우리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권고 그다음 우리 헌법 여러 가지 비추어 봤을 때 지금 현재까지의 고용노동부 조치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못 했다 이렇지 마시고……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아니, 아닙니다, 위원님.

○홍영표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장관후보자로서의 어떤 철학과 이것에 대한 판단을 묻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3권은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소위 전공노 그다음에 전교조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현행법상의 어떤 적법성에 위촉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의 어떤 진행된 사안이라든지 진행 과정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고용노동부 입장에서, 실제로 이제 사회적인 영향력이라든가 의미성이 있는 두 부분의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홍영표 위원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을 재검토하고 전교조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판단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제가 가지고 있는 정부의, 고용행정부의 장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판단과 그런 것들은 반드시 현재 있는 법의, 법령의 그 한도 내에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지금 현안 문제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도 전공노든 전교조든 실제로 그쪽에서 현재 스스로 판단해서 법에 저촉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해소하고 적법한 노조로서 또 대화의 상대자로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아직 정확하게 현황과 지금 실제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아마 제가 듣기로는 통보도 몇 번 하고 그랬다고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그 전말을 다시 한 번 제가 보고를 받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의 어떤 판단과 입장을 내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영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를 하시는데 ILO 기준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 그리고 우리 헌법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새로운 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냐고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법과 원칙의 기초 위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홍영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그 말을 해석을 잘하면 돼요.

장관후보자에게 홍영표 위원이 질의한 것을 조금 다시 물어볼게요.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장관이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법을 준수하게 하고 원칙을 준수하게 하는 것은 책무입니다. 그것을 따지는 것을 불법을 방치하라 하든가 이런 뜻은 아니고요.

다만 노동부장관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인데 예를 들면 전국공무원노조가 해고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다 말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조합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세계적인 사례를 보면 그렇지 못한 나라들도 훨씬 더 많지요,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발전적으로 볼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이 소신을 갖고 있더라 이런 얘기로 들리고요.

또 하나는 현행법을 준수한다 하더라도 현행법 내에서 노조활동이 대개 노동부가 지도하는 것은 노동부 임무 중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그 노조가 법 테두리 내에서 현행법 내에서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업무를 지도해 줘야 한다 이런 말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그런 것이라면 저는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소신을 갖고 있고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노조 필요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요. 공식사회를 맑게 하고 또 공무원노동조합이 가진 부정적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 내부의 청량제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범외노조로 되어 있는 전공노 문제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점진적으로 고려하고 검토해 나가고 노동부가 지도하겠다 이런 것과는요.

또 하나 봅시다.

전교조는 이미 법내노조인데 범외노조로 될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노동부 공문을 세 번인가 보냈지요? 해고자 문제입니다, 거기도. 이것도 그 사람들이 충분히 생각하고 판단할 시간을 더 주면서 설득해 나가면서 정부와 정면 대립이 되지 않도록 하는 임무 또한 노동부장관에게 주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법과 원칙을 준수해 나가되 그러나 이런 방향에서 사회적 책임, 정치적 파장, 이런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하면 전교조가 그동안 합법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해고자 문제로 불법적 지위가 된다, 투쟁이 벌어진다, 전체가 싸움이 벌어진다, 이게 상당히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장관이 가질 수 있는 정무적 기능, 사회적 판단에 대한 어떤 나름의 어떤 소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에 그 사회가 좀 더 안정적으로 가고 합법적으로 모색이 되고 그렇게 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아듣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예, 그래서……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그래서 그런 취지를 살려서 제가 취임하면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홍영표 위원님이 질의를 하다 마쳐서 제가 조금 보충질의 했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위원 질의합니다.

○**김상민 위원** 새누리당 김상민입니다.

장관후보자님, 사실은 청문회 시작 전에 우리 후보자님에 대한 평은 상당히 다른 장관후보자님들에 대한 의혹 제기라든지 기타 등등 많은 이야기에 비해서 조용하고 또 좋은 평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학자로서 전문성이 뛰어나고 특히 통계에 밝다, 모 위원님께서 그렇게 밝혀 주시기도 했고, 신문사를 통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또 2월 18일 노동뉴스에 보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정치적인 스타일이 아니지만 합리적이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할 줄 아는 인물이다, 기타 등등 이런 좋은 평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이제 살아오시면서 어떤 개인적 소신적 활동도 많이 하신 것이고 그리고 또 업무적 평가 능력을 충분히 받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장관후보자로서 서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전에 질문을 드렸을 때는 아침에 좀 긴급적인 문제도 있어서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 문제를 토대로 해서 우리 후보자님이 어떤 불산 유출 사건 또 이런 대기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후보자의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지를 여쭙어 봤습니다.

이제 우리 후보자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지금 장관후보자로서의 경쟁력이 뭔지, 그리고 또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연구와 과정을 토대로 해서 장관이 되신다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바꾼다든지 또 조정을 한다든지 또 이루겠다라는 비전이 있으시겠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장관후보자로서의 역량을 이제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아마도 제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동안 오랜 기간에 고용·노동 그리고 복지 분야에 두루 연구를 하고, 또 실제로 이제 책상에서만 연구를 한 게 아니라 과거 수십 년을 실제로 이제 고용노동부, 노동부의 정책 입안 과정이라든지 평가에 여러 방면으로 참여를 해 왔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새로운 새 정부의 화두인 근로빈곤층하고 취약계층을 자활시키고 자립시키고 중산층으로 올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정책 패키지로 이제 고용복지의 연계를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지금 취업서비스라든지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에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혁명적인 어떤 개혁이 이루어질 복안들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단 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동의 현장 혹은 노동의 현안들에 대한 어떤 감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고용정책을

연구할 때 노동을 연구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제출했습니다마는 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활동도 했었고 또 사실은 한 4년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노동분과위원으로 활동도 했습니다.

또 저는 한 번도, 고용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노동의 문제가 소외되거나 무시되고 연구가 된다면 그것은 고용정책이 반쪽의 고용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가장 여러 분야로 아주 예리하게 지적해 주신 문제들이 지금 비정규 문제로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간접고용의 문제들로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고용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도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제가 특별히 역점을 둘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정규 고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용정책적인 문제들 그리고 노동 관계적인 문제들을 제 열심 성의껏 다해서 여러 전문가들과 양측의 의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두루 듣고, 아까 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모자라면 현장을 뛰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청년층의 문제입니다.

‘고용률 70% 달성’, 이 목표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떠나서도 제가 지금까지 고용정책을 연구해 오면서 가장 아프게 생각했던 부분이 정말 학교를 나와서 1년, 2년 제대로 된 직장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런 청년층에 대한 상당한 마음의 어떤 끝림이 있고, 또 실제로 제가 정년 연장 관련해서 얘기했던 것은 고령화시대에 또 산업 역군인 베이비붐 세대가 지금 엄청난 숫자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고용정책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금 확실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고용정책·노동정책을 이끌어 나갈 때 그 두 계층에 대한 관심을 끝까지 놓지 않고 뭔가 실효성 있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

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상민 위원** 후보자님, 진심으로 그렇게 현장에 실효성 있는 정책을 꼭 실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후보님의 자녀 되신 분도 청년 취업 관련해서 같은 입장 속에 놓여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 같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장관직을 수행해 주신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이어서 비정규직 말씀을 하셨으니까, 오전에 제가 학교 비정규직 대량 해고 사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김상민 위원** 지금 굉장히 많은 해고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6475명 안에는 무엇이 없느냐 하면 기간제 교사의 숫자는 또 빠져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가 정규직 교사의 약 10% 부분인데 아시겠지만 1년, 2년 하다가 또 고용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직하는 사태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지금 이마트의 비정규직 운영 실태와 교과위 차원, 또는 책임자는 교장선생님이나 또 교육감이 사용주체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비정규직 운영 실태학교의 차이가 도대체 뭔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마트는 1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켰는데, 이것이 지금 정부부처에서 또 교육감 주체에서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해 가지고 몇 년 쓰고 또 해고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근로자로서의 대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장관후보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또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제가 지금까지 정확하게 파악한 바로는 학교의 경우에 일단 교

육부라는 행정부처하고 연관이 되고 또 지금 교육자치 관련해 가지고 시·도교육감이라는 어떤 관리운영체계, 감독체계하고 실제로 이런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나 조리사, 수위 이런 부분의 고용들이 실제로는 학교장의 지휘 감독하에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제일 심각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실제로 사용종속성 관련해서 이런 어떤 법상의 해석 문제도 있다고 그래서 그동안에 교과부하고 고용노동부가 좀 의견을 달리했던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상민 위원** 후보님, 이 부분 잘 챙기셔야 될 부분이에요. 여기서 청년실업의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다 약자들입니다. 힘없는 약자들이에요. 기간제 교사로 들어가서 어떻게든지 정규직 교사 되려고 잘 보이고 또 정규직에 비해서 담임 맡고 굶은 일 어려운 일 맡는 젊은이들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기댈 곳 없이 이곳에 들어갔다다 다시 부당하게 해고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 강력하게 부처 간에 조율하고 또 장관후보자님께서 꼭 챙기셔야 될 부분이고요.

하나 더, 아침에 이것 잘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하나 더 알려 드리겠습니다.

PPT 금방 보여드리겠습니다. 불 좀 꺼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구체적인 숫자까지 썼는데요. 이게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 둘러싸여 있는 인구분포도입니다. 이게 지금 총 해서 학교가 6개, 아파트 세대수는 8576세대가 있고요. 이것 1.5km 반경이고, 그 이상의 반경을 보면 3km 반경에는 27만 4000명이 거주하고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해 뭐냐 하면, 불산 유출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하면 아파트 대단위 지구 한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후보자님께서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문회를 하신다니까 제가 오전에 사실 마음속에 아주 불끈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 거대 대기업을 향해서 어떤 특별한 항의라든지 또 얘기도 못 하는 상황에 있고 또 그것을 얘기한다 그래도 아주 소규모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정부에서 대변해 주지 않고 그리고 강력한 조치들 취하지 않는다면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누구를 믿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게 단순히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삼성 전체, 그

리고 또 대기업,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반적인 유해물질 관리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특별 조사·감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유해물질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차원에서 특별한 조사나 실태조사 또 예방적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오전에 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 보니까 아마 그 지역에서의 민간 배상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챙겨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다른 부처에서 해야 될 부분인지는 그것은 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이것 지금 불산 유출이 양이 얼마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왜 고용노동부 차원이나 또 경찰 차원에서 이것을 얘기를 안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주변에 있는 지역의 분들은 다 알고 싶어합니다. 이게 얼마만큼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내용인지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역학조사가 필요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지금 이 주변의 많은 곳에서 유해물질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 주변 학교가 몇 개입니까?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27만 명, 삼십몇 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주 가까이 3km 가운데 살고 있어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아주 위험하게……

○**김상민 위원** 제가 이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역학조사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주민에 대한 어떠한 배상 체계, 이런 부분들까지도 특별감사나 조사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그것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꼭 좀……

○**위원장 신계륜** 김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정 위원 질의합니다.

○**심상정 위원** 경기도 고양 덕양갑 심상정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후보자께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장관후보자로서 기본자세가 문제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오늘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로서 국민들에게 첫선을 보이는 날이고, 또 백척간두로 내몰린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오늘 후보자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긴장감과 철저한 준비를 가지고 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답변서를 관료들한테 맡기고 스스로 점검도 하지 않으시고, 오늘 위원들 질의에 대해서도 상투적인 얘기, 추상적인 얘기로 대충 이렇게 때우는, 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고 안이한 자세로 과연 고용노동부장관이라는 중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제가 상당한 회의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답변의 대부분이 ‘법에 따라서 처리하겠다’ 또 ‘앞으로 파악해서 또 검토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법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지요. 법에 따라서 하면 행정부 필요 없습니다. 사법부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파악해서 또 검토해서…… 더 검토를 하셔야 될 일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보는데 그러나 적어도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로서 이미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굵직굵직한 현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이 자리에서 나오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런 문제들이 검토조차 안 됐다면 장관후보자로서 자격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좀 드리고, 검토된 후보자의 소신을 분명하고 뚜렷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서면답변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검토 안한 게 아니라 했는데 양이 많다 보니까 철저하게 못 한 부분들이 있는 것 사과드리고, 답변 관련해서도 저는 제 나름대로……

○**심상정 위원** 아니요, 그 답변을 제가 다시 듣고 싶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문제인식을 정확하게 전달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진정성……

○**심상정 위원** 대충 오늘만 넘기면 장관 되는 것이다 이런 안이한 자세는 안 되겠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기왕에 아까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어서 제

가 공무원노조하고 교원노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노조가 2009년 이후에 이명박 정부 하에서 세 차례 설립신고를 냈는데 반려됐고 또 전교조가 14년 동안 멸절된 노조로 활동을 해 왔는데 한순간에 지금 임의단체로 전락할 위기에 있는데 그 이유가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 때문에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래서 지금 공무원노조법이나 교원노조법에 해고자를 조합원 자격으로 인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특별법에 그렇게……

○**심상정 위원** 현행법하고 충돌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심상정 위원** 그러나 아까 위원장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법은 언제든지 시대적 요구와 또 국제적 기준과 또 상황 논리에 따라서 끊임없이 개정해 왔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년에도 몇천 건씩 지금 법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단결권의 제한이 시대적 상황에 적합한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가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루고자 하는 경제부흥, 중산층 70% 목표 도달에 부합하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후보자의 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소신에 따라서 저희가 법도 함께 개정하고 만들어 가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외 선진국 사례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경제 10위 대국인데 선진국 사례에서 해고자에 대한 노조 가입 제한을 두고 있는 나라, 떠오르는 나라 있으세요, 혹시?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심상정 위원** 영국,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ILO에 우리가 가입한 지가…… 1991년도에 가입을 했지요. ILO 결사의 자유, 위

원회에서 누차 바로 이 조항 때문에, 해고 노동자와 실업자의 노조 자격을 금지하는 이 법조항 때문에 계속 지금 ILO에서 이 법을 폐지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97년, 2002년, 2012년. 그리고 이 조항 때문에 대한민국이 노동 후진국으로 노동 탄압국으로 계속 규정되어 왔던 것을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그 비준 관련해서 알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더 나아가서 2004년도에 대법원이 판결을 했어요. ‘대법원이 일시적인 실업 상태에 있는 자, 구직 중인 자, 해고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가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또 전교조의 정상적인 활동을 보장하는데, 어떤 근거가 더 필요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아까……

○**심상정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제 경제 부흥과 중산층을 두텁게 하려면 노동선진국이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제가 장관이 되면 장관으로서 노동선진국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경제 부흥 일으키겠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강한 노조가 없다면 강한 중산층은 불가능하다’ 이것 누구 말씀인지 압니까? 오바마 대통령 말씀이세요. 대체로 선진국의 지도자들이 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공무원노조 인정 문제, 전향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제가 후보자로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의 여러 가지 취지의 발언도 계셨습니다마는 해고자하고 또 특별히 해고자도 중요한 이슈이지만 구직자나 실업자의 노동3권, 그런 문제도 다 얹혀……

○**심상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현행 공무원노조법하고 교원노조법에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배치되기 때문에 안 된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심상정 위원** 법을 지켜야 되지요.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법은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어요. 장관의 의지에 따라서 당장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환노위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적인 기준에서 보더라도 지금 ILO 87호 단결권 협약을 비준 안한 나라가 몇 개 나라나 되는지 아세요, 혹시?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

○심상정 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183개 회원국 중에 한국, 중국, 브루나이, 피지, 몰디브, 마셜제도, 투발루, 이 7개 나라밖에 없어요. 장관, 이렇게 노동3권의 가장 기본적인 단결권조차 제한되어 있는 노동후진국의 오명을 장관의 의지로 이것을 해결하겠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노동선진국으로 가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경제 부흥으로 가는 길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위원님의 말씀이 노동 문제 해결 없이는 경제 부흥이 어렵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심상정 위원 저도 노동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인데요, 국제회의에 가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드렸지요? 브루나이, 피지, 몰디브, 마셜제도, 투발루 이런 데 빼고 87호, 98호 결사의 자유 조항을, 그 협약을 비준 안한 나라가 없어요, 대한민국밖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공무원노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앞으로 공무원노조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제 생각에는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공무원노조 어떻게 할 거냐는 현행법에 대한 제 입장을 바로 밝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고, 단지 앞으로 우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노동관계라든지 노동3권 보장에 관련해서 우리가 국제 기준에 한 단계 한 단계 더 근접해 가야 된다는 큰 원칙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심상정 위원 국제 기준을 수용하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국제 기준을 수렴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국제 기준을 일반론으로 전부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심상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제 기준에 뒤떨어진 지가 한참 됐어요.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그래서 그런 부

분은 여러 가지 필요한 노력들을 다 하면서 수렴해 나가야 되겠지만, 일단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해고자라든지 실업자·구직자의 노조 가입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나 협의 또 구체적으로 여러 이해 당사자의 의견들을 들어서 이 부분들을 전향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기초해서 이제 우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노동법도 좀 선진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개선하겠다 이런 어젠다가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상정 위원 그러니까 눈치 보고 뒤통무니 쫓아가겠다 그 말씀이세요, 일단은 지금 하신 말씀은?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아니, 위원님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심상정 위원 지금 장관후보자께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선도하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그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해결해야 할 문제, 해고자라든지 구직자 실업자의 어떤 노조, 노동법과 노동관계법상에서의 어떤 법적 지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제 국제적인 기준도 있고 또 외국의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전문적인 혹은 합리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자. 그것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어떤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노동법을 고칠 것이냐.

노동법을 고치되 어떻게, 그다음에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사회적인 비중이 있는 특정한 어떤 노조의 합법성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수 있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상정 위원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는.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위원장 신계륜 심상정 위원님, 조금 쉬면서 뭘 말을 했는지 생각을 해 보시도록 합시다.

조금 휴식을 위해서 정회했다가 4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계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서용교 위원 질의합니다.

○**서용교 위원** 새누리당 서용교 위원입니다.

후보자님께서서는 인수위 정무위에서 MBC를 비롯한 개별 언론 문제를 다루었다고 아까 답변하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제가 다른 게 아니고 저는……

○**서용교 위원** 정무위에서 다루었다고, 정무분과에서 다루었다고……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서용교 위원** 예,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한명숙 위원님 질문에 정확하게 다시, 재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확인해보시면,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문제는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전 언론사가 주목을 하고 있고, 특히 MBC, KBS, YTN, 연합뉴스Y와 서울신문 같은 데에서 되게 주목하는 내용인데 후보자께서 이런 부분들은 말씀을 하실 때 특별히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용교 위원** 오전에 제가 일자리 만들기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일자리 지키기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만들거나 일자리 질을 올리는 것은 대부분 기업과 노조 이런 문제이고 정부가 할 것은 보조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사측은 고용의 유연성을 이야기하고 노조 측에서는 고용의 안정성을 이야기하는데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사회적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 고용의 안정성을 주로 이야기해 왔더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고용의 안정성을 비롯한, 안정성뿐만 아니라 이게 복지로 확대되어지고 다시 기업경쟁력으로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심한 조정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일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어떤 하나의 제도 문제만은 아닙니다마는 정리하고 같은 경우에 지금 일자리 지키는 데에서 핵심적인 내용인데 정리해고가 대규모로 시행된 지역 같은 경우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몇몇 사업장은 노사관계가 극단으로 치닫는 등 어느 쪽도 수용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그동안에 기업 수준에서, 현장 수준에서 노사 간에 신뢰를 쌓아 온 것들이 상당히 빈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되돌아보면 노사 간에 어떤 진정성 있는 대화와 합의를 통해서 어떤 문제들을 순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부분도 조금 그런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증폭되고 그래서 나중에 건잡을 수 없는 그런 문제로 발전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서용교 위원** 그동안은 신뢰가 있었지만 이 신뢰가 왜 깨지는가 하면 사실은 오랫동안 우리는 평생직장 관념이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 정리해고에서 당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자기 삶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망이 확충되지 않기 때문에 이 신뢰가 깨지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크게 이 두 가지 이유로 보는데, 하나는 평생직장이라는 관념은 이것은 정부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이전에 한 가지 기술이나 적성으로 한평생 직장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전 생애를 보냈던 것하고는 다르게 경제 환경이 바뀌어지고 또 기업이, 번창하던 기업이 사양산업이 된다는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일자리 자체가 매우 유동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 사회적으로 이런 관념들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인데, 우선적으로 정부가 해야 될 것은…… 이 정리해고 자체에 대해서 불안한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정리해고를 하는 데 있어서 불법성 내지는 부당성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정리해고가 벌어졌을 때 자기 삶의 가장 기본적인 안정 문제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도 경쟁했던 모든 후보님들이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이제 사회안전망을…… 그

부분은 다 그렇게 합의를 했지만 이 사회안전망 부분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다 재교육이라든지 재취업이라든지 지금 특히 인수위 작업에서는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대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정리하고 요건들을 공약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하면 언제까지 정리를 할 것인지, 그다음에 기존의 사업장에 대해서, 특히 쌍용자동차를 비롯한 몇몇 사업장의 정리해고가 광범위하게 진행된 곳에 대해서 혹시 불안들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우선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법적인 판단들을 기다려 보고, 위법한 사항들이 있으면 법에 따라서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리해고를 최대한 최후의 수단으로 가져가는 방향으로 정부는 지도 감독을 할 것이고, 실제로 정리해고를 하더라도 이번 새 정부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해고 회피 노력을 최대한 사용주가 해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판례로만 이렇게 정당하게 인정되던 해고 회피 노력들이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데에서 명시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이런 정책 제안들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는 향후에 관련된 법, 필요한 법의 개정들을 사회적 합의라든지 여론들을 수렴해 가면서 챙겨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용교 위원** 만드시 명문화하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서용교 위원** 판례로 어느 정도 굳어진 부분들은 법조문화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외국의 사례라든지 국내에서 다양한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을 좀 제대로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하나……

지금 정리해고 요건이 강화되면 기업은 사람을 덜 뽑게 되겠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서용교 위원** 그러거나 또는 비정규직에 대한 유혹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서용교 위원** 그다음에 외국인이 국내 투자는 좀 덜하게 되겠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그런 부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용교 위원** 예,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특히 작년에 OECD 같은 경우에 ‘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제언’에 보면 기존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 보호 수준을 더욱 완화해야 된다는 그런 제안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서로 상치되는 내용들인데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준…… 만약에 예를 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무엇을 만들어 낸다든지 하는 그런 대안들을 만들어 내는 것처럼 이 정리해고제 같은 경우에도 완충 장치라든지 상치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정하는 능력도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명문으로 확고하게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해서 보호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또 일부분 완화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효과들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사안들이 뭐뭐가 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리해고 요건들을 강화해서 근로자들의 평생직장, 꿈과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점점 더 보호해 나간다는 기본적인 입장은 이미 밝힌 바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경영상 해고라든지 정리해고 관련해서는 사실은 노사 간에 첨예하게 이해가 대립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또 실제로 고용을 더 보호하고 또 해고의 요건을 강화할 때 그것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고용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지 여러 가지 예상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좀 균형감 있게 어떤 해법을 마련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용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리해고가 벌어졌을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노동자들에 대한 재교육과 재취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복지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아까 오전에 칸막이 없애는 부분들도 이야기했지만 고용노동부 자체 내에서 실제 매년 정리해고자 등 직장을 잃는 사람이 얼마나 발생하고 이 중에 어느

정도가 재취업하고, 소요되는 기간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느 정도이고 직종에 따른 차이는 어떻게 이런 부분들 세세한 통계 자료를 관리하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고용노동부에서 가지고 있는 지금 가장 거기에 가까운 데이터는 아마 고용보험 DB일 것입니다. 지금 고용보험 적용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고용보험 데이터들을 적시에 가공을 하면서 이런 정책의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고용보험 DB상의 분석에 의하면 한 해에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자수, 그 이후로 직장을 나온 해고자 수가 약 8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나와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되는데요.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전에 재취업이 되는 비율은 한 30~40%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용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 경기 부천시 원미구갑 김경협 위원 질의합니다.

○김경협 위원 김경협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 주로 정책질의에 대해서 대단히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입장만 계속 되풀이를 하고 계시니까 내용을 좀 정확히 알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좀 잘 아실 만한 내용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노동연구원 재직 시절 대외활동, 외부 연구용역이나 외부 강의 때 사전에 서면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외부 연구용역은 원칙적으로 개인이 수탁을 못 하게 되어 있고요, 원장의 허가에 의해서만 수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그동안에 재직해 있는 동안 2007년에서 2011년까지의 자료를 보면 연구용역 총 17건, 7100만 원, 그다음에 외부 강의 37건, 3700만 원의 강의료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외부 강의 3건만 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

다. 나머지는 승인 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저는 노동연구원에 근무하면서 연구원의 규정과 규칙에 대해서 최대한 따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청문회 과정에서 과거에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연구라든지 외부 강의들에 있어서 적법하게 신고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몇 군데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향후에 그런 부분들은 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나가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경협 위원 좋습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만약에 신고해야 되는데 안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협 위원 적절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김경협 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잘못된 관행이라도 과감하게 개혁을 해야 하고 적어도 공직자로서 공과 사는 명확히 구분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데에서부터 이렇게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되고 이렇게 공직생활을 해 왔다, 이게 이제 좀 대단히 큰 문제로 보이고 이제 장관이 되시면 훨씬 더 큰 위치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에도 공과 사를 이렇게 제대로 구분을 못 하면 대단히 걱정스러운 일들이 생기지요.

아무튼 좋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보조적인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협 위원 예, 간단하게 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제가 직접 수탁을 받은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참여해서 200만 원, 300만 원 원고료를 받은 부분은 다른 연구기관에서 정부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그 받은 연구프로젝트의 한 일원으로 참여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김경협 위원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지요? 여

기에 지금……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다는 아닐 겁니다. 아마 대부분이 그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협 위원** 예, 그것은 알았고요.

그다음에 강의 수입 중에서 연세대학교 강의로 강의료를 1248만 원을 받았는데요, 이게 어떤 강의인가요? 몇 시간 정도 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그것은 산업체 재훈련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직원들을 학교에 위탁해서 한 6개월 정도 재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담당하던 교수께서 마침 안식년을 가게 돼서 마침 그 과목이 제 전공 분야이기 때문에 ‘좀 해 줄 수 있느냐?’ 해서 했고, 제가 한 것은 야간에 했습니다. 주간에는 한 것이 아니라 야간에 했고, 그때 규정으로는 주간에 대해서는 업무활동 중에 다른 외부 강의나 그것을 금하고 있었지만……

○**김경협 위원** 근무 외 시간에는 괜찮다, 이런 건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하여간 관행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김경협 위원** 하여튼 몇 시간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강의료 수입 중에서 160만 원짜리, 그다음에 100만 원짜리, 1248만 원짜리가 있어서 강의료 수입치고는 강의료를 대단히 많이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상세하게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찌 됐든지 간에 개인 연구과제·외부 용역과제들에 대해서 연구용역비, 아까 노동연구원으로 귀속되어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보니까 귀속되어야 될 것을 귀속 안 한 부분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제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 중에는 경제인문사회에서 발주를 하고 각 연구기관에서 수주를 해서 그 수주한 프로젝트의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는 인센티브를 연구자에게 연구원을 통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아마 몇 군데 있을 것이고……

○**김경협 위원** 승인 여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잘 안 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상세한 내역 자료를 한번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자료는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다음에 정년 관련해서 질의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후보자께서 연구원으로 재직 하던 시에 각종 연구 활동이나 언론기구 등을 통해서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고령화시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해결방법으로 법정 정년제도의, 최소정년제지요. 나아가 정년제도 폐지를 주장하셨는데, 이 주장은 지금도 유효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그 부분은 저하고 같이 공동연구자인 모 대학의 노동법학자가……

○**김경협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 주장이 아니고 그러면 공동연구자의 주장이라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앞에……

○**김경협 위원** 그러니까 이 주장에 대해서 이 주장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하시느냐고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장기적으로는 정년의 폐지도 하나의 정책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런 법적 검토를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경협 위원** 아무튼 최소정년제와 나아가서는 정년제도 폐지……

그런데 지금 현재 노동부 12개 산하기관 모두 직급별로 정년 차등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급 이상은 60세, 2급 미만은 57세~58세, 공무원이 금년부터 직급별 정년 차등을 폐지해서 60세로 통일이 됐는데요.

국가인권위에서도 합리적인 기준 없는 직급별 정년 차별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김경협 위원** 직급별 정년 차등, 옳다고 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지금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그런 차별해소 부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경협 위원** 그러니까 노동부 산하기관……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산하기관은 아

무래도 좀 거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법적인 검토를 해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

○**김경협 위원** 이것까지 법적인 검토까지 해야 됩니까?

본인이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건데……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아닙니다. 공공 부문이라서 공공부문의 TO라든지 예산상의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검토를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이것은 법적인 검토가 필요 없는 사안이고요.

지금 노동부 산하기관의 정년 차등 폐지하는 문제,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국가인권위에서도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부당하면 바로 고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저는……

○**김경협 위원** 이것도 검토하고 고민해 보셔야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아닙니다. 위원님, 그게 아마 법적 검토도 그렇고 실행 관련해서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특별히 행자부, 안행부의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차원에서는 필요하다면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참 대답을 굉장히 어렵게 하시는데, 아까도 계속 얘기하다시피 본인의 소신은 좀 명확하게 표시를 하고,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필요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계속 주장해 왔던 내용들인데 이런 것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대답을 자꾸 애매모호하게 하시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아닙니다. 제가 정책을 제안하는 것하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실행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중간적인 검토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부문은 고용노동부의 의지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경협 위원** 장관의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해결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저는 적극적으로 그 취지에 동감하고 그런 부분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사주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다음, 이완영 위원 질의합니다.

○**이완영 위원** 힘드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아니, 괜찮습니다.

○**이완영 위원** 괜찮아요?

한정에 위원이 아까 노동자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저는 부에 근무하면서 경험한 사람인데요, 사무관부터 장관에 이르기까지 각 부처하고 협의를 해 보면 정말 어느 부처도 없다는 것을 저는 실감을 했습니다. 정말 노동부 공무원이야 말로 그게 무너지면, 예전에는 천만 근로자 그랬지만 이제는 이천만 근로자가 정부 어디에도 기댈 데가 없다, 굉장히 저는 경험적으로 했기 때문에. 어쨌면 저는 그래서 노동계와 가까워졌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노동법이 모든 게 법 목적에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이 조항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이완영 위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국회는 처음이지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많이 왔었습니다.

○**이완영 위원** 이렇게 공식적으로 있는 것은 처음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공식적으로는 처음입니다.

○**이완영 위원** 작년에 우리가 개원을 했는데 상임위 개원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장관후보자께서는 처음, 그러면 환노위하고 노동부의 관계가 뭐냐,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노동정책을 같이 만들어 가는, 오늘 우리 여야 각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 현장의 목소리이거든요. 제가 노동부에 근무하면서 우리 환노위 위원들 때문에 노동부 업무 능력이 많이 올라갈 수 있었다는, 우리 노동부 공무원들끼리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 말씀에 앞으로도 항상 열린 마음으로, 후보자께서 현장에 안 다녀오신 것을 간접적으로 듣는 것이예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런데 가끔 저도 느낍니다마는 우리 직업 전문 관료들은 굉장히, 내가 전문가라는 함정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장관님보다 오히려 직업 관료들이 그 전문지식으로 변화를 안 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수석전문위원 2년 하면서도 우리 노동부 공무원들에게 엄청 그것을 주문했습니다. 내가 2년 동안 위원들 모셔 보니까 여야 위원들 말씀들이 정말 현장의 목소리이고 일리 있는 얘기다, 그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알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칸막이 관련해서 고용서비스, 복지부하고…… 전적으로 동의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저는 이를 위해서 장관직을 수행하게 되면 하루 종일 체험을 한번 하십시오. 예? 피보험자 신고도 받아보고 직업훈련 하겠다는 사람 받아보고 취업 알선 어떻게 하는지 받아 보고, 한번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장관님의 제일 첫째 중점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해 보지 않고서는 정말, 그냥 간부들 말 듣고는 힘들 겁니다, 한번 해 보시고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알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리고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새로운 정책 자꾸 요구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 추슬러야 될 때가 왔습니다, 노동행정이.

지금 효율성도 없고 신뢰성도 없고, 이것을 추스르기 위해서 중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지방청에 출장을 충분히 보내 가지고 개선책을 가져와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고용서비스뿐만 아니라 산업안전·근로감독, 저는 다 마찬가지로 봅니다. 어떠세요, 제 말씀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앞으로 장관으로서 고용노동부를 이끌어 나갈 때 그런 부분들을 명심하고, 저도 원래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니까 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지금 우리 새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들고 나왔는데 경제민주화를 우리 노동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여러 가지 합의

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합의가 있다?

제가 장관님께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저는 경제민주화에 노동민주화도 하나의 축이다, 첫째 중요한 게 노동민주화다 이렇게 봅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아시겠지만 정규직·비정규직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정부 통계로 600만 되지만, 아까 850만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4대 보험 적용률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는 경제민주화에서 노동민주화를 이렇게 봅니다. 비정규직의 남용을 우선 줄여야 된다, 축소를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근로조건을 제대로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려면 저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좀 있어야 되겠다……

지금 노사정위원회에도 많이, 수석전문위원도 하셨는데 저는 일자리, 이렇게 노동민주화 관련해서 노사정위원회를 상당히 개편해서 위상, 역할을 좀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동의합니다.

○**이완영 위원** 제발 좀 그렇게 노사정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구요.

그다음에 일자리 얘기를 죽 하셨는데 저는, 현장에 제가 다녀 본 곳 중에 지금 모든 정책 담당자는 만드는 것을 중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이완영 위원**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주들을 만나 보면 정말 사람 못 구하겠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어떠세요, 동의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제가 과거에 연구를 하면서 현장들 돌아보면 그런 것들……

○**이완영 위원** 그렇지요?

제가 이 문제는 총리님 청문회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제가 정말 엄청나게 중소기업주들한테 듣는데 범정부적으로, 이제 장관님 되시면 진짜 한번 중소기업주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파악해 가지고 채워주십시오. 예? 그것이 진짜 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노동부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그리고 교대제를 늘려 가지고 일자리를 늘리겠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이완영 위원** 알고 계시지요, 지금 해 온?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중요한 정책과제입니다.

○**이완영 위원** 예, 정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딜레마가 하나 있습니다. 실근로시간을 줄이면, 그러면 받는 기존 근로자들의 급여 삭감이 따르는데 급여 삭감이 따른다고 보니까 교대제도 안 늘리려고 그러합니다, 기존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을 안 줄이려고 그러합니다.

그러면 지금 노동계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오느냐 하면 '임금 삭감 없는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주 44시간에서 40시간 갈 때도 사실은 임금 삭감 없이 갔습니다. 이런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지금 현장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떻게 하면 실근로시간을 줄이되 임금 삭감 없는 이런 부분들을 가져갈 것이냐 해서 실제로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형평성 차원에서 본다면 실제로 실근로시간이 단축될 수 있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측에서도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이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동계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냐고요, 설명을 하시려들지 말고.

그런 임금 삭감 없는 실 근로시간을 줄이자 그리고 일자리를 늘리자……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현장에서 협상이 쉽지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경영계는 그렇게 동의를 안 할 거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이완영 위원** 자,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노동부에서도 고민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그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저희 철곡 옆에 구미에서 맞교대제를 3교대제로 늘리려는데 사람을 못 찾고요, 일자리가 500개입니다, 500개.

방금 제가 급여 삭감하고 또 실제로는 500개 할 용의가 있는데 사람 못 찾는 것하고 동시에 지금 겹쳐 있어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자, 직업전문학교 아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알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직업전문학교가 노동부에서 인가해 가지고 4, 50년 동안 노하우를 쌓아왔어요. 이게 계속되 되면서 지금 학교가 정부 믿고 투자한게 다 죽어갑니다.

우리 새누리당에서, 제가 2년 전에 이른바 지식수출산업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한 직업전문학교가 외국인을 데리고 와서 직업훈련을 시키자. 지금 한식요리, 미용 뭐 지금 컴퓨터, IT 배우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때문에 지금 아직 허용이 안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일자리 창출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엄청. 여기서 만약에 외국인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개네들 직업훈련 시킨다면 일자리 많이 나겠지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교사들의 일자리……

○**이완영 위원** 그런데 노동부에서는 이탈할 우려가 있어서 어렵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이완영 위원** 이탈방지만 된다면, 지금 우리 청년들도 프랑스 같은 데 요리직업학교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많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반드시 대학만 가는 게 아니라,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이완영 위원** 이런 걸 우리도 하자……

제가 이걸, 이것은 우리 새누리당에서 2년 전에 추진을 했던 거예요. 했던 건데, 한번 그런 이탈의 방지 대책을 해서 반드시 이것은 장관님 계실 때 실천해 주시길 바라는데,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제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비례대표 은수미 위원 질의합니다.

○**은수미 위원** 민주당 통합당 은수미입니다.

오전에 고용부에서 우리 의원실로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의 주요 내용은 뭐였느냐면 '평택 고용

촉진지구 관련해서 임금체불 생계비 대부사업 총 지원 금액이 저희 의원실에 드린 것보다 조금 더 늘어난 것 같다' 그다음에 '어쨌든 고용부 자체 평가는 평택 고용촉진지구 관련 지원 정책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니 해명자료를 내겠다'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해서 제가 좀 기가 막혀서 웃었습니다.

제가 오전에 후보자께도 말씀드린 건 그것이 순수지원금이 2억이 됐든 2억 5000이 됐든 어쨌든 정부가 한 일이 거의 없다, 3년 7개월간. 그렇다면 사실은 이걸 제대로 평가하고 사과할 일이 우선이겠는데 고용부가 해명자료 내고 책임 면피하겠다 이런 연락을 의원실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MB정부 때 계속 이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특히 노사관계의 현안이 된, 한 10개나 15개 정도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매번 고용부가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저는 MB 코드 고용부라고 봅니다.

그리고 바로 사람이 바뀌면 적어도 그런 코드는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기대를 했는데 오늘 오전 그리고 지금까지 실망스럽게도 후보자의 답변이 거의 과거의 코드의 답변을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MB정부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된 게 노사관계 정책입니다. 노사관계 정책이 왜 문제가 되는가는 후보자도 아실 겁니다. 일자리는 일꾼에게 줄 수도 있고 머슴에게 줄 수도 있지만 또 시민에게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시민의 일자리인지 일꾼이나 머슴의 일자리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노동권이고 노사관계예요. 그런데 이것을 파괴시킨 것이 그 당시 MB정부의 고용부 코드였고 그 코드대로 거의 발언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선 그런 질문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향후에 노사관계 현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질의를 할 거고, 뭐 서면질의라도 할 거고. 그에 대한, 고용부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아마 자기 소신을 좀 더 밝혀 주십사 하는 것보다 더불어, 사실은 저는 이렇게 고용부가 노동권을 좀 보호하고 더 많은 보호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고용부 내부 인적 쇄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위원님들께서 여러 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고용노동부 내

의 그동안 해 왔던 어떤 관행이라든지 또 인적자원에 대한 대점검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다 더 근로자들의 노동권이 보호되고, 또 노동시장의 취약계층들이 더 나은 일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데 있어서 코드를 떠나서 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여전히 답변이 애매하십니다.

청문회 자리에서 후보자 되신 분에게 여야 위원들이 모두 '관료에게 흔들릴 우려가 있다. 과거 정부의 코드하고 변화가 없다. 노동권에 대해서는 소신이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만약 장관이 되신다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는 것이 MB정부와 다른 고용부의 모습을 보이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유념을 해 주시고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알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그와 관련해서 저는 정부가 시작을 할 때, 그러니까 MB정부를 되돌아보면 시작을 할 때 노동권이 파탄 나는 신호가 있었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저의 기억으로는 철도공사 문제나 그다음에 과거 후보자께서 몸담고 있었던 노동연구원 문제가 사실은 신호탄이었습니다.

당시에 단체협약에 대해서 단협 해지를 통보했고 그다음에 직장폐쇄를 단행을 했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복귀하는 조합원들에게 다시는 파업에 참여하지 마라라는 서약서를 강요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민간 기업에서는 용역까지 침탈을 시키는 노조파괴로 갔고. 그래서 민간 부분 노사관계에서는 이것을 노조파괴프로그램이라고 불렀고요, 공공 부분에서는 공공부분선진화프로그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확장되어 오는 이 역사가 사실은 MB정부의 노동정책의 코드가 만들어지는 역사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박근혜정부 때는 어떤 역사가 만들어질 건가라는 것을 이제 지켜볼 수밖에 없고.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전교조 문제가 혹시 또 그러한 새로운 노동권 파괴의 역사의 시작이 아닌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 개정 문제까지, 뭐 그런 얘기는 여러 위원들께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만 여쭙 보겠습니다.

지금 노조법 시행령 9조제2항을 보면,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현행법상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행법상 용인이 안 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한 것은 이미 설명을 했고.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노조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르면 노조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통보 권한을 고용부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2010년 10월 20일 날 삭제할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도 역시 노동조합의 자주성에 심각한 침해가 있다라고 했고요, 한국노동법학회 역시 그런 유사한 의견들을 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당장에 법 개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시행령 부분은 고용부장관께서 손을 대실 수 있는 겁니다. 손대시겠습니까, 아니면 전교조를 불법으로 만들어서 이번에 새로운 노동권 탄압을 시작하시겠습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법 시행령 제9조2항과 관련해서 우리가 국제 기준에 더 수렴해 갈 수 있고 또 우리 한국의 실정과도 맞는 균형감 있는 어떤 차원에서 해고자의 노조 가입 여부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와 대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되면 이제 그다음 단계로 우리가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걸려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그다음 단계로 풀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수미 위원 끊임없이 사회적 대화를 말씀하시는데요. 사회적 대화는 후보자께서 아시듯이 파트너 관계가 형성돼야지 사회적 대화 가능합니다. 아니, 부부 관계는 부부가 서로 인정을 해야지 가능한데 지금 MB정부 때 노사관계는 한쪽이 한쪽을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형태로 아예 노사관계 자체가 파탄이 나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선 주체를 먼저 세워야지 사회적 대화가 가능한데 주체를 세우겠다는 고용부장관의 의지나 정책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 이러면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지금 불법을 자행한 사람들, 그런 경영진이나 혹은 위법한 행위를 한 사람들이 사회적 대화의 파트너로 나올 텐데 이걸 통과해야지 고용부는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오해될 소지가 있느냐면, 소위 그런 얘기를 하지요, 갑돌이가 을순이를 열심히 때고 있는데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하겠노라 이러면 계속 때라 이 얘기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패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관계를 재정립해서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야 되고 그런 점에서 제가 전교조 부분과 관련해서 노조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은 사회적 대화 없이 고용부가 손을 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손을 대서 파트너십을 형성하면 그때서부터 사회적 대화가 가능할 텐데 지금 고용부장관은 계속 그 대답을 회피하시거나 모르시거나 아니면 의지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해고자의 노조 가입 여부라든지 허락 그 이슈하고 전교조 관련된 법적인, 행정적인 지침이나 판단은 조금 분리해서 접근을 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해고자의 노조 가입권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논의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강구해 갈 수 있지만 개념하고 실제 현재 실정법이 적용되고 있는 전교조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은수미 위원 잠깐 1분……

지금 노조법 시행령 제9조2항은 노조 아님 통보와 관련한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고용부장관이 그냥 불법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그 부분은 제가 그래서……

○은수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 달라라는 말씀이었고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그건 제가 취임하고 더……

○은수미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고용정책이나 일자리정책은 어떤 색깔을 가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고용부의 색깔 그다음에 방하남 후보자의 색깔 혹은 고용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반성과 이것을 뒤집어 낼 수 있

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인적 쇄신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 후보자가 돌아가셔서라도 좀 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늘까지의 청문회에서는 그런 내용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그 말씀 취지 자체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새로운 박근혜정부에서의 노사관계, 노동정책들은 새로운 틀하에서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계륜** 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훈 위원 질의합니다.

○**이종훈 위원** 경기도 성남 분당갑 새누리당 이종훈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인수위 활동과 관련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런 이유는 제가 후보자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연구원에 계실 때 연구보고서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최근의 인수위 활동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첫 번째로 최저임금에 대해서, 대선공약에서는 최저임금이 전향적으로 좀 올라갈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하에 어떤 구체적인 기준을 했는데 어떻게 인수위에서는 그걸 더 구체화시키기보다는 합리적인 인상 기준을 마련한다 이렇게 도리어 모호한 기준으로 후퇴를 했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가 무려 10% 이상 저희가 판단되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숫자도 200만 명에 가까워지고 그래서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하는 걸로 다 했는데 그 부분이 또 인수위 안에서는, 국정과제 보고서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인수위에 계셨으니까 왜 이렇게 된 건지 먼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최저임금 현실화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구체적으로 적시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왜 그렇게……

○**이종훈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것은 최저임

금을 지금도 높다고 생각해서 낮출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내포된 겁니까, 아니면 올린다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최저임금 현실화라는 정책과제가 들어오게 된 전체 맥락을 보면 실제로 최저임금을 받는 10%, 약 200만 정도의 저소득 근로계층을 조금 더 중산층에 가깝게 가기 위해서 조금 현실화한 다음에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그런……

○**이종훈 위원** 그걸 구체화해야 될 곳이 인수위이고 그다음에 장관으로 혹시 취임하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이제 행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냥 코멘트가 아니라. 그래야 되는데 인수위 계실 때도 이것을 도리어 모호하게 후퇴를 시켜 놓으시고 개혁적인 안이라고 할 수 있는 징벌적 배상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이 부분은 아예 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 보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인수위에서는 큰 맥락을 잡아 주고 새 정부 들어서면 새 정부 행정부에서 구체적인 추진 방안들을……

○**이종훈 위원** 이쯤 하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두 번째,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요. 고용률 70%가 현 정부의 아주 핵심 공약입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이종훈 위원** 그리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기존의 성장만으로는 안 된다는 건 누구나 지금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 없이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후보자님?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이종훈 위원**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현실화되려면, 근로시간 단축을 현실에서 우리가 직접 이뤄 내려면 첫 번째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고민스러운 문제가 중소기업 근로자입니다. 지금 최저임금 받고 일하시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분들이 연장근로도 하고 휴일에도 일을 해야 월 150만 원 겨우 가져갈까 말까 합니다. 이런 분들한테 근로시간을 단축하자 하면 그것은 정말 배부른 소리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을 제쳐 놓고 대기업만 하자는 것은 안 그래도 노동자들이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는데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것일 테고, 이런 근본적인 고민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사실 일관적인 정책이나 제도를 가져가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소기업의 경우에 실제로 최저임금 근로자 중에 30인 미만이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어떤 형태든지 지원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위원** 예, 이쪽에서는 기업이 그 비용 감당을 다 하기 어려우니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훈 위원** 사실 저는 인수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를 기대했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요.

근로시간 단축은 어떻게 보면 대기업도 노사가 다 반대합니다. 그거는 노사정 대타협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꼭 필요한, 모든 영역이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지만 특히 이 부분에서는 더더욱 노사정 대타협이 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과제가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종훈 위원** 예, 그런데 말입니다, 인수위 국정기획분과에서 대통령자문위원회를 전반적으로 구조조정 하겠다라는 발표가 있는 이후에 노사정위를 비롯한 또는 다른 외곽에서, 다른 인수위 밖에서는 야, 노사정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노사정 대타협 정신을 한다고는 했는데, 노사정 대타협을 하겠다고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노사정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굉장히 불안하다, 노사정위도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던 거는 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종훈 위원** 그러면 인수위에 계셨으면, 더구나 같은 인수위에서 국정기획분과에서 그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고용복지분과에서 노사정위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국정기획분과의 담당 위원들이나 전문위원들하고 많은 얘기를 했고 저는 노사정위원회가 앞으로 사회적 대화의 채널에서 중요한 위치를 해야 된다고 몇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종훈 위원** 이것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울까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아니, 그거를 누구한테 얘기를 했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종훈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장관 후보자……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아, 구체적으로……

○**이종훈 위원** 예, 더구나 인수위 계셔서 그거를 토론하셨다니 그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큰 틀을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서는 어차피 경제·사회 수준의 큰 어젠다나 의제들을 논의할 수밖에 없고 구체적으로 그거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노동 혹은 고용과 관련된 것들은 노사정위원회…… 이름을 어떻게 하든지 그런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어떤 매개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의 시스템보다는 발전적 해체 수준의 새로운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가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종훈 위원** 지금 오후에 오전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이 거의 대부분이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 게 아니고 자꾸 제가 낸 문제를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요.

이 청문회까지는 그렇지만 장관이 혹시 되시면 그다음에는 해법을 꼭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제가 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 부분까지만 물으신 줄 알았는데, 그 해법과 관련해서는 가장 크게 세 가지로 문제점이……

○**이종훈 위원** 예, 얘기해 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하나는 현재 지금까지의 노사정 대화 프레임워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대표성의 제약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종훈 위원** 예, 그거는 알겠고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그래서 앞으로 사회적 대화의 틀을 가져갈 때 조금 더 비정규직이라든지 중소기업 부분 또 실제로 800만에 해당되는 우리 영세 자영업 부분 또 여성·청년층 부분에 대한 어떤 대표성을 어떻게 보강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개선방안이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노사정위원회에서 사회적 의제들을 논의할 때 논의하는 과정들의 실효성 부분들이 굉장히 약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파트너들이 참여할 인센티브가 없고 거기에서 논의하는 것들이 사회적인 어떤 효과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들이 악순환을 가져온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앞으로 새로운 틀을 짤 때 사회적 의제 자체도 노사정이 서로 밑에서부터 위로 올리는 바텀업(bottom up)의 접근 방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을 드렸고요.

○**이종훈 위원** 됐습니다.

마무리…… 한 가지만 여쭙 보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노사정위원회를 지금처럼 독립 법에 의한 대통령자문기구로 유지되어야 된다, 도리어 강화되어야 된다, 대표성도 강화하고 그렇게 제가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맞습니다.

○**이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동위원회 관련 등 몇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추가질문 때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하나 위원 질의합니다.

○**장하나 위원** 민주통합당 장하나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년유니온에 대해서 후보자는 들어 보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들어 봤습니다.

○**장하나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이 부실했다는 내용 계속 지적했는데 저도 이 유니온에 대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2012년에 다섯 개 지역 그리고 2013년에는 대구지역에서 지역청년유니온이 지자체로부터 노동조합 설립필증을 모두 교부 받은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알고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기를 고용노동부와 지자체 간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관한 판단이 다른데 그러니까 고용노동부는 계속 전국 청년유니온에 대한 설립신고를 반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고 했는데 답변이라고 두 줄이 온 것이 ‘청년유니온에 대해 고용부와 지자체는 각각 자체 심사를 거쳐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렇게 했습니다. 이 답변 자체, 일단 부실하다고 동감은 하십니까?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에게 이런 내용을 질문했을 때……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했는데 ‘자체 심사했다’ 이거는 답변하는 태도 자체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런 것도 사실 저는 장관후보자가 장관으로서 자격이 적격한지도 사실 의심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답변이 있었지만 그중의 한 예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혹시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장하나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런 대답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자체가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를 했고요, 고용노동부는 계속 반려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짚어 보도록 하겠고요.

청년유니온도 역시 아까 뜨거운 이슈인 구직자나 실업자 등의 노조 설립 및 가입 여부에 법적 쟁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하나 위원** 예, 맞습니다. 구직자와 실업자에 대해서 이미 대법원 판결과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심상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그 판결 얘기가 나왔는데, 그 판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알고 있습니다.

니다.

○**장하나 위원** 프레젠테이션 같이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알고 있으시다면 구직자와 실직자가 노조 가입을 할 수 없다는 기존의 고용노동부의 일관된 태도에 대해서 다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런 생각 없으십니까, 아니면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을 끝까지 무시하고 가실 것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무시하고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해고자, 구직자, 실업자 노조 설립·가입 여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개념상의 어떤 정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실증적인 실정법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풀어가 보자……

○**장하나 위원** 계속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얘기하시는데요, 지금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현행법을 갖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는 지자체가 설립신고필증을 교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각각 자체 심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어떤 기준으로 반력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체계가……

○**장하나 위원** 보고를 받은 바도 없고 관심이 없으신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아니, 관심은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미처. 그래서 그것도……

○**장하나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직자와 실직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였는데요, 같은 차원의 문제고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그래서 어쨌건 향후에 청년유니온이 노조설립 신고를 한다면 법령상, 현행 법령상의 요건들을 충분히 살펴보고 검토하여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하나 위원** 청년유니온이 어떤 단체인지는 아십니까? 지금 질의 응답을 하다 보니까 놀라운게 사실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단체인지 아시나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알고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어떤 단체입니까? 간단히 약술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대부분은 청년 구직자들로 만들어진 유니온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지금까지 어떤 일들을 해 왔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청년들의 취업 그다음에 일자리…… 특별히 청년들의 또 근로자로서의 어떤 권익, 그다음에 사회적 보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하나 위원** 구체적인 질문을 드렸는데요, 2011년에 청년유니온은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고 있는 부분을 고발해서 카페베네와 사실상 교섭을 했고요. 그래서 약 10억 원 상당의 체불임금을 받아냈습니다. 이런 사실도 못 들어 보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신문에서 들어봤습니다.

○**장하나 위원** 보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장하나 위원** 그리고 최근에는 미용실 인턴 실습생들이 최저임금도 사실상 못 받고 있다며 이것을 또 법원에 고발을 해서 사회문제로 부각시켰습니다.

이런 일들 사실 노동부가 했어야 되는 일인데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청년유니온이 했습니다. 청년유니온이 지금 여기서 아르바이트생이라든가 실습생, 인턴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일도 안 하고 있는 백수고 그저 구직자고 실업자인지? 많은 대학생들이 지금 학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그들을 구직자 또는 직업이 없는 자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다수의 학생들은 생계를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그들을 구직자로 보고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다면 당연히 청년유니온이 마치 백수들의 집단이고 그래서 노조 가입할 수 없다고 하겠지만 사실 그중에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모든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노동자로 보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런 지금 모순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지금 여기서 직장을…… 뭐라고 해야 되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라라든가, 고용을 하라

이런 어젠다를 다루는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아주 외면당하고 있는 청년의 노동 실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 저희 청년유니온의 가입대상자들은 만 15세부터인데요, 만 15세부터 아르바이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장하나 위원** 청소년노동에 대해서 누가 얘기할 것입니까? 청소년들을 그냥 단지 학생으로 보지 지금처럼 청소년을 노동자로 보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청소년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사실 노예 수준의 이런 여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방치된 것 아닙니까?

청년유니온을 실업자나 구직자로 보지 말고 당연히 노동자로 봐야 하고 지금까지 청년유니온이 해 왔던 일들이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한 일들이 아니라 노동자성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계속 특정한 사용자의 관계를 주장하시는 것 같지만 많은 청년들은 아르바이트 여러 개를 전전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직장으로 묶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에서도 일정한 사용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조와 다르게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자 등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서울여성노동조합 판결하고도 일치하는데요. 청년 경우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약자이고 또 노년유니온도 설립이 되었는데 설립신고도 반려되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약자 그리고 노동약자에 대한 노조 신고에 있어서 사실은 지자체에서 반려를 하더라도 고용노동부가 앞장서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필증을 교부했어야 되는데 이게 역행되고 있는 게 정말 부끄럽고요. 장관께서는 아쉽게도 청년유니온 그리고 거기에 따른 노년유니온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잘 파악하고 계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심도 있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얻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물어보는 족족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장관께서 이후에도 고용노동부가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청년유니온의 설립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자세를 고수할 것인지 한 번 더 묻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제가 받아들이

지 않는다고는 말씀 안 드렸고요, 검토해 보겠다고 그랬습니다.

○**장하나 위원** 예, 검토를 물론 하시겠지요. 물론 하실 텐데, 지금 이런 판례에 나온 내용이라든가……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장하나 위원** 지금까지 청년유니온의 활동을 봤을 때 청년유니온의 조합원들이 단지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일 뿐이지, 실업자나 구직자가 아니라 는 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제가……

○**장하나 위원** 그것은 납득이 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만약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면 근로자이지요.

○**장하나 위원** 그래서 특정, 어떤 일정 사용자와의 종속관계라든가……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사용자의 종속성 부분에 좀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본적인 취지를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청년유니온의 노조 설립을 허가할 거냐, 말거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조금 더 현행법상의 여러 가지 고려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하나 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6개 지자체가 이미 설립신고를……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알고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그런 지자체의 판단은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점을 검토해야 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자체는 지자체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중앙 차원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또 관련된 여러 법률에 대한……

○**장하나 위원** 지금 지자체의 설립 신고필증 교부한 과정에서도 같은 동법을 적용한 게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다른 기준이 있는 것 아니지요?

만약에 검토해 봤는데 그래도 안 되겠다는 판단을 만약에 고용노동부가 내려서 전국 청년유니온의 설립을 반려한다면, 그렇다면 지금까지 6개 지자체에서 설립신고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도 시

정 조치하라고 그렇게까지 주장할 자신은 있으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봐야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자체에서 어떤 요건들이나 어떤 판단을 통해서 설립신고를 내 주었는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하나 위원** 저는 장관후보자께서 청년 문제에 지난 고용노동부의 행정보다는 훨씬 더 집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장하나 위원** 지난 5년간 청년정책에만 1조 2000억을 쏟아 부었는데 청년고용지표가 좋아졌습니까? 지금 청년실업률이 8%대에서, 7%대에서 지난 2012년 8월부터는 6%대로 떨어졌어요. 계속 하향 추세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세 번째 질의 때 하겠지만 지금 새 정부에서 내놓는 청년정책도 이명박 정부와 대동소이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고, 가능하다면 청년유니온의 문제를 고용노동부가 이전과는 180도 다른 태도로 해결을 빨리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진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장하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10분 간. 그런데 이제 추가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추가질의를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민주당 소속은 다 원하고, 세 분이 원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질의는 5분을 드릴 텐데요, 그 대신 여러분들이 요약 잘 해 주시고, 또 그것이 부족하면 다음에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질의 전에 자료 요구가 지금 안와 가지고……

○**위원장 신계륜** 말씀하십시오.

○**이완영 위원** 제가 첫 번째 발언 드릴 때 삼성 전자 1934건에 대한 세부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거든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이완영 위원** 빨리 좀 챙겨 주세요.

○**위원장 신계륜** 자료 줄 수 있나요? 자료 빨리 주세요, 있으면. 별로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질의자료를 챙겨 주시기 바라겠고요.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가능하면 중복질의는 삼가 주시고요. 또 장관도 분명한 소신답변을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먼저, 김성태 위원 질의합니다.

○**김성태 위원** 방하남 장관내정자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감사합니다.

○**김성태 위원** 본 위원은 한 가지 내용만 좀, 앞으로 장관에 임명되면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라는 차원에서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들 근로 보호가 상당히 시급한 실태입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이나 또 대학 진학하고도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학비를 벌려고 이렇게 알바를 하는 그런 실태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내용을 보더라도 대학생의 재학 중 취업 실태를 보면 4년제 대학생 4명 중의 1명, 전문대생 3명 중의 1명이 학비를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임시직으로 일하고 있다는 그런 실태 보고를 발표를 했어요.

저는 작년도에도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런 청소년들, 대학생 아르바이트…… 고용노동부에서 바로 이런 문제점들을 위해서 안심알바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겠지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보고받았습니다.

○**김성태 위원** 고용노동부에서도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그 이후에 마련해 가지고 상당히 심도 깊게 이것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에 임명된다면 이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 출범한 알바연대라는 단체에 대해서 들어 본 적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들어 봤습

니다.

○**김성태 위원** 들어 봤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김성태 위원** 지난 일요일에 출범해 가지고 지난 2월 28일 날, 그러니까 며칠 됐습니다.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GS25, 파리바게뜨, 롯데리아, 카페베네 그리고 고용노동부까지 넣어 가지고 ‘알바 5적’으로 선정됐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것이 상당히 안 좋은 내용입니다.

그 알바연대가 아르바이트생의 고향을 빨아먹는 알바 5적으로 프랜차이즈 4개 업체, 프랜차이즈 업체가 선정된 것은 본 위원도 할 말이 없는데 거기에 고용노동부까지 꼽았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고용노동부가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근로 현장에서 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또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고 또 임금체불은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특히 특정 프랜차이즈 대기업들마저도 알바생들에게는 상당한 불법행위가 만연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한번 장관에 취임하자마자 큰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알바생들은 4대 보험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주요 수당까지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대다수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장관내정자로서 알바생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대대적인 근로감독에 나설 그런 소신과 의지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특별히 대부분의 프랜차이즈들이 사실은 대기업에 속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특별히 우리 학생, 청년층을 상대로 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고용노동부 차원에서는 지적하신 근로기준 위반이라든지 최저임금 그다음에 체불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신고센터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번에 기회가 되면 체계적인 실태조사라든지, 또 실태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근로조건들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할 것인가를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장관내정자께서 고용복지 전문가로서 바로 이런 청소년 알바생들의 근로환경 개선도 이 사람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상당

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김성태 위원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한명숙 위원 질의합니다.

○**한명숙 위원** 아까 제 질의에 대해서 서용교 위원께서…… 언론노조가 인수위를 만나서 면담한 내용에서 해고자 문제 실무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는 것은 인수위원회의 국민통합위원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합의된 내용을 언론노조가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지도부도 만났습니다. 아시지요, 그것은? 민주노총 지도부도 인수위 국민통합 위원회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합의된 내용을 이렇게 언론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식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들께서 이 자료를 뽑아서 후보자에게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손배가압류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요. 2012년 12월 21일 날 한진중공업의 최강서 노동자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서에 보면 ‘손해배상 철회하라. 태어나 듣지도 보지도 못한 돈 158억 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고 5년을 또……’ 이런 글을 써 놓고 자결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금속노조 중에서 손배가압류 소송에 휘말린 곳이 열두 곳이거든요. 총금액이 709억 6000만 원이에요. 가압류는 20억 8000만 원입니다. 특히 언론노조 중에서도 MBC노조에 대한 사측 손배 청구가 340억 원인데 개별노조를 상대로 한 최대 규모의 소송입니다. 파업기간 동안에 지급되지 않은 임금 161억 원, 제작하지 않은 프로그램 제작비 90억 원 이런 터무니없는 비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이 손배가압류 문제에 대해서 내정자의 입장은 어떠신지 간단히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노동부가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사용자 측에서 노동조합의 어떤 위법한 행위에 대한 일종의 징벌적인 장치로 손배가압류를 가져가고 있는데 인

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노동 관련된 것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제가 의미 있게 한번 찾아 봤던 자료 중 하나가 2002년에 노사정위원회에서 한 손배가압류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저는 상당히 의미 있게 읽었고 거기에 포함된 것이 첫째로 ‘노동조합은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고 합법한 범위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한다’ 또 두 번째로 ‘사용자들은 과도한 손해배상, 손배가압류들을 자제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또 ‘정부는 그러한 노사관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한다’ 이런 선언이 2002년에, 12월로 기억합니다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명숙 위원** 그 선언이 지금도 유효한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노사정 합의를 통해서 선언한 것들이 없어지고 무효화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한명숙 위원** 지금 노조법에서는 합법 파업에 대해서는 손배 청구를 할 수 없게 제한을 두고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한명숙 위원** 그런데 노조법 개정을 통해서 손배가압류를 더 엄격하게 제한해야 된다, 지금은 너무나 무차별적으로 개인에게 또 집단에게 이렇게 청구되고 있어서 재판도 엄청 많고요. 그리고 판결 후에 자기에게 올 두려움 때문에, 최강서씨의 죽음도 그것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법을 좀 더 엄격하게 해서 손배가압류에 제한을 두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위원님, 기본적인 취지가 이번에 우리가 슬픈 일도 당하고, 그래서 사회적 어떤 인식이라든지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제고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정부 입장에서도 무분별하고 과도한 손배가압류는 최대한 자제하도록 여러 가지 지도 감독을 해 나갈 것입니다.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조법 개정 관련해서는 충분히 그 취지를 제가 이해를 하고 필요한 사항, 이게 필요한지 그것부터 한 번 더 진지하게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국회와 같이 상의를 해서……

○**한명숙 위원** 관심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관심을 가

지고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1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예.

○**한명숙 위원** 한 가지는,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에서 4년 동안 활동하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1기하고 2기에 2년씩 했습니다.

○**한명숙 위원** 1기, 2기, 2년씩 4년 동안 활동하셨는데, 제가 한 서면질의에서는 주요한 경력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사관계 분야의 경험이 취약해서 현장경험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이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으로 노사관계를 접한 경험에 대해서 쓰시는데, 후보자께서 내신 어떤 기본자료에도 이런 경력이 기재되어 있지를 않아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누락됐던 것 같습니다.

○**한명숙 위원** 실수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한명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한명숙 위원** 그래서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의 좋은 경험으로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기본적인 자료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이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좀…… 실수라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협약위원회가 제주도의회와 제주 언론에서는 굉장히 악평이고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제주 해군기지 문제, 영리병원 문제, 카지노, 케이블, 제주 지역사회에서 첨예한 문제들이 여기에서 많이 거론됐었는데 그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그때 제가 활동할 당시에 대부분의 사회적 이슈들이, 사실은 저는 노동 전문가로 들어갔었는데 주로 사회적 이슈라서 저는 회의에 참석을 해서 제가 필요한 부분만 발언을 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한명숙 위원** 소극적으로 하셨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제가 적극적으로 한 역할들은 특별히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사

회협약이라든가 했을 때……

○**한명숙 위원** 현장에도 많이 가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현장에는 많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랬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누락이네요, 기본자료에 경력이 없는 것은?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다음에는 이완영 위원님 질의 합니다.

○**이완영 위원**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위원입니다.

지금 5개월 새에 다섯 번째 불산 유출, 어제 LG실트론 되어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유해·위험 이런 작업을 하청을 줘서는 안 되겠다, 제가 환경부장관에게도 여쭙어 봤는데, 아예 이것은 금지하자, 본사에서 직접 하도록 하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도를 그렇게 바꿀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이번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하도급 관련해서 원청과 하도급 간에 어떤 책임소재들이 불분명하고 대부분 하도급 업체들이 이것을, 아주 위험한 공정들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요. 하도급을 아예 못 주게 한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하도급을 할 수 있는, 어떤 위험한 것은 하도급을 금지하는 방안까지 다 포함해서 법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완영 위원** 같이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대학 진학률 얼마인지 아세요, 후보자님?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 80%까지 갔는데 최근에 떨어져서 한 76%, 72% 그 정도, 낮아졌습니다.

○**이완영 위원** 88%에서 70%까지 떨어진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박근혜정부는 행복, 국민행복, 학교로 말하면 행복한 학교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것

은 과도한 우리 입시경쟁으로 인해서 자살, 폭력, 이런 게 많다고 보는데, 저는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노동부가 국가인력정책을 하는 데 기능인을 우대하는 시책을 확실히 해 보자, 그렇지요?

제가 아까 말한 직업전문학교도 정말 학벌에 의존하지 않고 잡을 빨리 갖도록 우리가 도와주자 이런 취지거든요.

저는 노동부에서 기능인 우대 시책을 한 20년 전에 들어 보고 아직 못 들어 봤어요. 제가 지방청장 할 때도 실업계고교 교장선생님들은 그런 안을 엄청 많이 내놓고 주장합니다.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의사 있으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과잉학력이 노동시장에서 청년층의 어떤 고실업을 유발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박근혜정부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스펙 초월 채용 시스템하고도 연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완영 위원** 총리 인사청문회 때 전관예우로 인해서 과도한 급여랄까 이런 것을 받은 게 상당히 언론에서 이슈된 거 기억나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읽어 봤습니다.

○**이완영 위원** 다른 장관후보자들도 ‘내가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런 발언도 하셨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그 기사 읽어 봤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하나 보니까 미국에서 최근 핫이슈로 맥시멈 웨이지(Maximum Wage)를 해 보자, 소득상한제랄까요? 급여상한제, 처음 들어 보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처음 들어 봤습니다.

○**이완영 위원** 저는 전관예우 차원에서 급여를 한 달에 3000만 원, 4000만 원 받는다면 굉장히 국민적 위화감이 있다고 봅니다. 해서 유럽연합에서 보면 바젤3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맥시멈 웨이지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대해서 도입하고 있어요, 상한을 평균급여의 3~5배 이상 못 주도록.

이게 이번에 굉장히 이슈가 되어 있는데, 저는 차제에 우리 국민적 통합, 사회 대통합 이런 측

면에서 이런 것도 이제는 한번 검토할 시기가 왔지 않느냐…… 느낌이 어떠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저도 위원님하고 정서상으로는 같은 생각입니다.

○**이완영 위원** 그렇지요? 저는 아마 정서상으로 국민들이 매우 반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은행 같은 데는 더 그렇지 않겠어요? 공공성이 강한데. 보너스라든지 스톡옵션 많이 받고,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이완영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서울대 송호근 교수님 강연이 있었는데 제가 직접 참여했습니다. ‘복지는 사회적 임금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복지도 전공하셨으니까…… 그날 ‘임금 양보를 통해서 고용을 증가시키고, 그래서 고용이 안정되면서 기업도 경쟁력이 높아진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대임금을 해야 된다’라는 송 교수 주장에, 저는 이미 산별노조가 되어 가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산별노조가 이렇게 증가하면서 제가 산별노조에 연대임금 해야 성공한다 이런 얘기를 벌써 10년 전부터 주장해 오고 있는데요, 연대임금이 만거 아닙니다. 대기업에서, 그렇지요? 높은 임금을 자체해 주면 그게 협력업체나 하청한테 임금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주지요. 그런 만큼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소득이 높아지니까 또 소비가 늘고 내수가 진작되고,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이완영 위원** 글썄, 이게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거냐 하는 것은 저도 쉽지는 않을 거라 보지만, 어쨌거나 정책적으로 권장해 볼만한 사항은 아닌가…… 어떻게 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연대임금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의미나 어떤 장점들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마 지금 제가 듣기로는 노동조합 차원에서 먼저 어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완영 위원** 정부에서 이렇게 권장을 하면 좀

따라올 수 있는 여지는 있거든요. 주도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권장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완영 위원**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알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장관후보자께서는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어떤 차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제가 타는 차는 볼보960, 1996년식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볼보 차는 어느 나라 차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스웨덴 차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스웨덴 차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위원장 신계륜** 그런데 그건 좋은데 웬 체납을 그렇게 많이 하시고 압류를 많이 당하시고 그랬네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제가 좀 바쁘다 보니까 그때그때 인터넷으로 통지가 오는데 그걸 챙기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불찰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그래도 한두 번이 아니어서 왜 이리 많나, 압류까지 당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한 번, 두 번째인가 너무 이렇게 그걸 해태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게 나왔었는데, 저도 그래서 그걸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저도 과태료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한 경우에 제가 운전할 경우에도, 그런데 그게 계속 체납된 게 보니까 거의 일곱 번입니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그래서 ‘아, 이분이 체납하는 데 조금 재주가 있으신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예, 알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재산이 별로 없잖아요.

○**위원장 신계륜** 재산이 없는 것하고 체납하는 건 다르지요. 아무리 적은 거라도 국가가 발행하

는 것인데.

다음, 한정에 위원 질의합니다.

○**한정애 위원**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서 삼성 불산사고 관련해서 유해작업 도급 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인가기준 등을 강화하는 것을 재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협력업체, 하청업체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이들이 또 매년 계약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바로 도급 금지 대상을 확대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물질들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고요.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급하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 상황인데 해당 하청업체나 협력업체가 안전관리 부분들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그래서 원청업체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청업체…… 이번에 사고가 난 상당히 많은 여러 요인이 있지만 또 구조적인 요인들은 원청 하청 간에 있어서 원청업체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어떤 책임의식……

○**한정애 위원** 이 주요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정애 위원** 왜냐하면 결국 하청업체나 협력업체는 생산공정을 스톱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그렇습니다.

○**한정애 위원** 원청에서 오케이 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맞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래서 원청업체의 책임과 의무가 좀 더 포괄적으로 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구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그런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스펙 초월 채용시스템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의무교육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는 청소년이 매년 1만 명이 넘고, 고교 미진학 청소년과 고등학교에서 중도 탈락하는 청소년이 또 한 3만 5000여 명, 매년 이렇습니다. 일추 대충 계산해도 1년에 약 4만 5000명씩 의무교육 플러스 흔히 말하는 고등학교까지도 졸업하지 못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스펙 초월한 채용시스템을 통해서 흔히 말해서 4대 보험을 적용받는 사업장, 반듯한 일자리를 가지게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중간에 탈락하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렇지요? 결국 이런 분들은 반듯한 일자리를 가지게 될 확률이 거의 전무하다고 봐집니다. 우리 사회양극화의 한 축을 지속적으로 이루고 있는 한 계층으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교육부에서도 학교 청소년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방치되고 있고, 노동부의 직업훈련 시스템 어디에서도 이 사람들을 안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예는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나주에서 있었던 성폭행범 고모 씨의 경우에도 스물네 살이었는데 불우한 가정환경 때문에 중학교를 중퇴하고 집을 떠나서 그 어린 나이에 공사현장을 전전하면서 그냥 먹고살기 바빴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제대로 된 직업훈련을 받아 본 적이 없고 한테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을 해서 ‘스펙 초월한 채용시스템이 있으니 여기서 어떻게 한번 해 보세요’라고 한다고 과연 그 시스템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위원님, 스펙 초월 시스템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고요……

○**한정애 위원** 예, 해결할 수 없고……

그런데 이분들은 저는 결국은 교육부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하고 또 하나는 노동부가 역시 마찬가지로 직업훈련과 관련된 부분은 좀 책임을 져서 어쨌든 의무교육 정도에 해당되는 교육은 받게 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직업훈련 시스템에서 이분들을 소화를 시켜서 그야말로 성인이 되어서 열여덟 살 이후에 사업장으로 나올 때는, 우리 사회로 나올 때는 그래도 어떤 일자리에

갈 수 있을 정도의 훈련을 시켜서 내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4만 5000명이 매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깐 그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야라고 방기하는 것은 저는 정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취업성공패키지나 이런 프로그램이 잘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정애 위원** 잘 가동되지 않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몇 군데 공공직업훈련기관들하고도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직업훈련시스템을 통해서 자리를 잡아 가는 경우가 많이 드뭅니다.

그래서 원래 있었던 공공훈련기관이기도 했던 대한상의 인력개발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공공훈련 인프라였습니다. 2000여억 원에 해당하는 국가자산 8개 훈련원을 그냥 민간에다 준 것 아닙니까? 그런 공공훈련기관들, 인프라가 잘 돼 있는 그런 훈련기관들에서 이런 분들을,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 청소년들을 좀 받아서 기본적인 교육과 더불어서 직업훈련을 좀 시켜서 우리 사회에 반듯한 사람으로 나와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끔 하는 역할, 이것을 고용노동부가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차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어디 갔다 와서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오래 쓰던 것을 제가 새 차를 살 돈이 없어 가지고 사실은 물려받아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너무 이름만 가지고 판단을 해 주시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참고로 시가는 96만 원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그런데 제가 불보를 타신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 차로 주·정차 위반해서 과태료 부과했는데 그것을 납부를 안 하셔서 가지고 압류까지 당한 현실에 대해서, 그것도 두 번이나,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신중치 못한 처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예.

그다음에는 이종훈 위원 질의합니다.

○**이종훈 위원** 비정규직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문 겸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정규직으로 많이 전환해야 되는 숙제가 가장 어렵지만 또 꼭 해야 되는 숙제인 것 같은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핵심 요소는 가능하면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으로 쓰는 게, 이 사회에서 그런 관행이 정착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관련해서 공공부문에서라도 상시지속적 업무는 기간제근로자를 쓰지 않겠다라는 것이 핵심 공약인데, 지금 학교 비정규직 문제에서도 나오지만 문제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당부 말씀이자 질문도 될 수 있겠는데요, 이게 결국 기재부를 설득해서 돌파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요? 정치력도 발휘하셔야 되고 맷집도 좋으셔야 되고 이것은 다른 복지 소요 예산이 요새 많이 책정되면서 도리어 밀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버티어 주시고 관철을 시켜 주셔야 된다는 제 당부 말씀 드리고, 혹시 마음에 두시고 있는 무슨 묘수라도 있으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묘수는 없고 진정성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사실 이번 정부의 큰 기조도 지금 말씀하신 그 기조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과 또 공공부문 TO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풀어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위원** 그러면 안전행정부하고도 투쟁을 하셔야 될지도 모릅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알겠습니다.

○**이종훈 위원** 두 번째로 이것도 관련된 내용인데, 이제 공공부문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대기업에서 이런 관행이 같이 정착됐으면 좋겠다 해서 고용형태 공시제라는 것이 총선 공약으로 나와 있고 입법 발의도 이미 돼 있는…… 통과도 됐지요. 제 기억에는 통과했는데, 이것으로 잘 안 될 때 그다음 단계에서는 뭘 정부가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심각한 고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지금 대기업, 민간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장기적인 차원에서 고민을 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최근에 선진국도 그렇습니다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제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그러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나,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과제입니다만 공시제도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과제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점수화하고 그것을 평가할 수 있다면 그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마 고용 안정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종훈 위원 저는 그것보다는 좀 더 강력한 규제를 생각하셨는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요. 나중에 그것은 다시 한번 토의해 보기로 하고요.

기간제에 대해서 이렇게 규제가 들어가면 상시 지속적 업무를 아예 도급으로 뺄 수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그런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종훈 위원 그럴 때 제조직에서는, 생산직에서는 현대자동차가 문제됐고요, 판매직에도 지금 문제가 된 게 이마트이고요, 그다음에 근로자 안전 문제 된 게 삼성전자, 그렇지요?

그래서 결국 파견과 도급의 결정적인 차이는 지휘 감독 여부라는 것은 후보자님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휘 감독이 불가피해 보이는 그런 직종들을 잡아서 사내도급 자체를 불허하는, 최소한 어디어디에서는 안 된다는 네거티브리스트로서 규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지금 해법 중의 하나로 그런 논의들이 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아마 파견근로자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어떤 것이 불법파견이라는 지침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은 이미 내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명시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많은 민원이 국회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해서 그런데 노동

부와고 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잘하면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노동위원회의 역할을 확실히 격상시키기 위해서 자본에 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있고, 상품시장에 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듯이 노동시장을 전체적으로 규율하는 노동위원회를 노동부 산하에서 떼어서 국무총리 산하로 옮기고 완전히 별도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 격상시키자라는 주장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노동부장관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이번에 노동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이 공정한 중재자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원칙 중에 실천적인 방안으로 노동위원회의 역할 강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노동위원회의 위원, 특히 상임위원들의 업그레이드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제안을 넣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모자라서 실제로 조직이나 직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의견을 내주셨는데 만약에 그것들이 더 도움이 된다면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 볼 수 있고 또 관련 부처와 같이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영표 위원 질의합니다.

○홍영표 위원 민주당 인천 부평을 출신 홍영표 위원입니다.

지금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났지요? 열흘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홍영표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정부 출범하자마자 오늘 사실 노동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과정에서 대선 공약이 이렇게 심각하게 후퇴된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시겠지만, 이게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 공약집입니다, 공약집. 이게 공약집인데, 이 공약집하고 그 뒤로 지금 인수위에서 국정과제로 정리한 것들 아주 중요한 문제들은 대부분 삭제되어 버렸고요. 삭제된 것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장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위원님께서 더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홍영표 위원** 예를 들어서 임금피크제와 연계하여 실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겠다, 이게 지금 국정과제에서 빠져 있지요? 이유가 뭐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빠져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영표 위원** 삭제되어 있습니다, 국정과제에.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그 부분은 제가 아는 것하고 좀 다릅니다.

○**홍영표 위원** 그러면 분명하게 약속을 하십시오.

지금 본 위원이 이미 정년 60세 의무조항을 포함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마는, 그대로 이행하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정부의 입장도 반영하면서……

○**홍영표 위원** 아니, 후보자 입장은 평상시에 정년 연장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있는데, 장관이 되신 이후로도 그것을 반드시 지키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지금 공약에 있는 정년 60세 그 부분은 반드시 지켜질 것입니다.

○**홍영표 위원** 반드시 지켜집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공약에 있는 대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홍영표 위원** 그러면 아무튼 정년 연장은 우리 사회에서 지금 조기퇴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고,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미래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정부 쪽에서 반대를 해서 제대로 법이 개정되지 않았는데 오늘 분명하게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바로 이행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그 계획에 따라서 이행을 할 겁니다. 공약은 공약입니다.

○**홍영표 위원** 그러면 지금 원래 계획은 3년 후부터, 2017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단계적으로……

○**홍영표 위원**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홍영표 위원** 그리고 또 임금피크제를 조건으로 해서 시행하겠다는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임금피크제 등’ 이렇게 아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영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는 이제 하나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 임금피크제를 정년 연장에 연계시켜서 도입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 데서 어떤 정부의 의지뿐만 아니라 노사 양쪽의 다 동의를 얻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게 이제 어떤 사회적 대화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가능할 텐데 기존의 이명박 정부에서 해 왔던 대로 노동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 확실한 태도의 변화를 어떻게 약속할 수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노동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어떠한 사회적 타협이나 대화도 불가능할……

○**홍영표 위원** 아니,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박근혜정부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영표 위원** 그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저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 저는 그게 전제되지 않고는, 지금 제가 정년 연장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장시간 근로 개선이라든지……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맞습니다.

○**홍영표 위원** 지금 이 장시간 근로 개선도 202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이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국정과제에는 빠져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영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 확인을 했는데 이런 모든 사안들이 사회적 합의가 토대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맞습니다.

○**홍영표 위원** 그래서 저는 아침부터 계속 장관 후보자에게 주문을 한 것이 분명하게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그런 잘못된 고용노동정책을 평가하고 그 토대 위에서…… 지금 저는 고용노동부가 위기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존처럼 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국민의 신뢰도 얻지 못하고 이것은 도대체 대기업 편들기만 하는 그런 부서로 전락되어 있다, 이런 비판이 많은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완전히 해소시켜야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신뢰의 토대가 생기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장관후보자께서 특별히 유념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위원님의 고견을 자주 듣고 국정 운영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다 하셨나요?

○**홍영표 위원** 예.

○**위원장 신계륜** 민주당 위원님이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실천되기를 아주 간곡히 바라고, 혹시 빠질까 봐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심상정 위원 질의합니다.

○**심상정 위원** 우리 홍영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런데 후보자께서 지금 공약하고 인수위에서 발표한 국정과제하고 좀 정확히 지금 이해하고 계신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저는 다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 국정과제 테이블을 가지고 있는데 정년 60세 연장은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전체 고용노동분야 18개 공약 중에서 8개가 삭제되고 1개가 후퇴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문건이 어떤 건지를 제가 정확하게 지금……

○**심상정 위원** 아니, 국정과제 백사십몇 개 발표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아, 인수위에서……

○**심상정 위원**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뜻을……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2월 20일 날 발표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상정 위원** 예, 일단 거기서 후퇴되거나 삭제된 것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큰 관심을 가졌던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월 130만 원 미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고용보험, 국민연금 100% 지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공약 때? 이게 절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쭉 꺾였습니다, 50%로.

그런데 문제는 이 50% 지원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가 거의 어렵다고 보거든요.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여러 가지 재정적 어떤 상황들을 고려해서 아마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그렇게 했고, 현재 50%로 하게 된 것은, 그 전에는 이제 기업 규모를 제한을 했는데 이제는 기업 규모보다는 임금 수준으로 단일화해서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서……

○**심상정 위원** 노동자가 내야 될 것을 100% 하고 사업장 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런 보도를 봤는데,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지 않으면 사회보험 가입률이라든지 고용유인효과는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오래된 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세 사업주들한테 지원이 없으면 오히려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꺼리지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사업주가 지원받기 위해서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는 순간에 그 전까지 안 냈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다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생색만 내는 형태로는 사회보험 가입 촉진하기 어렵다, 사실상 약속을 백지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장관후보자께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이 부분은 50%에서 출발해서 향후에 10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현재 이제 10인……

○**심상정 위원** 예, 빠른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빠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두 번째로 최저임금을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에 위반사업자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 이것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인수위 정책과제에는 빠져 있거든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최저임금을 반복적으로, 악의적으로 어긴다면 그것은 반드시 법에 의해서 엄중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은 공약……

○**심상정 위원**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원래 이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공약에 없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대선공약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대선공약에 있지만 인수위 과정에서는 아마 빠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왜 빠졌어요, 그게?

제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보면서 최저임금에 대해서 박근혜정부가……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심상정 위원** 의지가 사라진 것으로 이렇게…… 실망이 큰데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대부분이 다 영세기업들이기 때문에 그 정책의 실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 또 부가적인……

○**심상정 위원** 그러니까 일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안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국정과제에 빠져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국정과제에 60세 정년도 빠져 있는데 그것은 단계적으로 하시겠다고 아까 답을 하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아닙니다. 국정과제에 빠져 있는지, 안 빠져 있는지 확인을 제가 아직 못 해서, 저는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심상정 위원** (간부석을 바라보며)

지금 뒤에, 보고를 해 드리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심상정 위원** 잠깐만요. 후보자께서 내용을 모르고 자꾸만 답변하지 마시고, 60세 정년 부분도 국정과제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하실 때에……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아닙니다. 국정과제 63번에, 지금 제가 그 자료를 받았는데요, ‘장시간 근로개선과 정년연장으로 일자리 나누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아니, 그것은 추상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원래……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아닙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보시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심상정 위원** 이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더 주세요.

그다음에 ‘산재고용보험 적용 확대 방안 추진

하겠다’ 이렇게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 얼마나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조만간 우리가 법안심사소위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다루게 될 사안이 지금 이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조법·산재법 적용 관련 사안이거든요, 우리 환노위에서.

장관후보자께서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산재법 전면 적용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특수고용 직종들이 약간 다양하고, 실제로 산재라는 것은 사용주의 책임보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현재 6개 직종에 대해서 이미 하고 있으니까 또 다른 직종에 대해서 확대 적용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심상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더 하십시오.

○**심상정 위원**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신계륜** 예.

○**심상정 위원** 다른 분들 하시고 나서 또……

○**위원장 신계륜** 또 하실래요?

○**심상정 위원** 예.

○**위원장 신계륜** 아예 다 하시지요.

○**심상정 위원** 하면 한 1시간 해야 되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물어볼 게 많은데요.

○**위원장 신계륜**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하십시오.

○**심상정 위원** 아니, 발언을 하려면 지금 좀 더 해도……

○**위원장 신계륜** 아닙니다. 지금 이어서 하실 것 같은 모양을 보이셔서……

다음, 김경협 위원 질의합니다.

○**김경협 위원** 후보자께서 아까 모두발언에서 ‘대안적 일자리 창출 모델로 사회적기업의 제3섹터의 확산’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방향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방법이 전혀 나와 있지를 않아서, 이게 서면질의도 있었는데 보니까 특별히 대안이 별로 없어요.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하고 사업개발비 보조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효과를 좀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지금 초기단계

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사회적기업은 상당히 많이 숫자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청년 등 창업 사회적기업, 이 부분에서는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조금 더 효과를 살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협 위원** 지금 현재 이게 운영되는 현장의 모습을 보면요,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은 일종의 대학에서 주로 담당을 해서 하면서 대학의 부수적인 사업, 이렇게 돼 있고,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정말로 이게 R&D, 브랜드개발비, 홍보 마케팅 비용, 이런 걸 지원하는 건데, 코끼리 비스킷입니다.

실질적인 효과가 있느냐? 거의 효과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몇 푼 안 되는 이걸 따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서류가 훨씬 많고요. 그 서류 준비하는 시간이면 한 사람 인건비 다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질적인 효과를 거의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이것 관련해서 사회적기업 육성의 대안으로 과거에 벤처기업육성센터와 같은,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와 같은 사회적기업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는 문제를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별로 이게 노동부 차원에서도 더 이상의 고민이 없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과거에 벤처기업육성센터 할 때 벤처기업 성공률이 1%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의 현재 창업 과정을 보면 훨씬 높습니다, 성공률이.

그런데 문제가 현재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퇴직자들도 있고 물론 청년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가장 큰 어려움이 사회적기업을 처음에 창업하면서 공장이든 사무실이든, 건물이나 사무실 얻는 비용, 기본 여기에 대한 투자, 이 투자에 대한 위험이 크다, 실패했을 경우에. 그래서 이러한 창업보육센터를 통해서 아주 좀 저렴하게, 실질적으로 창업을 용이하게 해 주고 일정 정도 기간 보육을 시킨 다음에, 3년이든 5년이든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자립기반이 생기면 내보내는 이런 방식의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위원님으로부터 들은 전반적인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김경협 위원** 한번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서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후보자께서는 주로 기업복지, 특히 퇴직연금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는 게 산적해 있는 노사관계의 현안이나 비정규직 문제, 산재 관련 여타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참 걱정스런 시각도 많이 있는데요. 어찌됐든지 전문 분야가 퇴직연금 분야인데, 기업복지 중에서 퇴직연금 외에 우리사주제도라는 게 있는 것 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알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런데 이 퇴직연금 제도도 그렇고 우리사주제도도 그렇고 지금 모양이 거의 비슷합니다. 아주 침체되어 있지요. 실질적으로 거의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퇴직연금은 지금 꾸준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발전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김경협 위원** 그런데 현재 퇴직연금도 그렇고 우리사주제도도 목적이나 법·제도 운영, 문제점 등에서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퇴직연금 부분을 오랫동안 연구를 해 오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사주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우리사주제도가 가지고 있는 원래 목적, 그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협 위원** 그렇지요? 이후에 아마 경제민주화 관련해서도 우리사주제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퇴직연금만큼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사주제가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근로자의 어떤 재산 형성이라든지 경영에 대한 노동 참여의 중요한 기제로 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더 혜택이 가야 될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편중이 되고, 또 장

기간 이것을 보유함으로써 재산 형성이 되어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어떤 일정기간 지나면 다 매각을 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문제점들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해소가 된다면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진 정책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협 위원 법이나 제도를 정비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 관련 법만 가지고 안 되고 제가 알기로 이쪽 금융 쪽의 법들도 같이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협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가 이 관련된 정보를 한국증권금융에 의존을 하고 있고요. 의무예탁기간이 1년에서 4년 경과하면 다 팔아치워서 재산 형성에 전혀 기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정부의 세제지원 정책도 없습니다. 아주 대단히 약하지요. 미약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퇴직연금제도와 함께 우리사주 제도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법 개정안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제도개선안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만하고 다음에 할까요?

○위원장 신계륜 김경협 위원님은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마이크를 안 대면 더 아주 명료하게 들립니다.

○김경협 위원 그러면 마이크 안 대고 계속할까요?
.....

○위원장 신계륜 여야 간사 간에 이야기된 것도 있고 하니깐 일단 진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은수미 위원 질의합니다.

○은수미 위원 민주당 은수미입니다.

아까 질문한 내용을 연결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어 보겠습니다.

전교조에 대해서 고용부가 이달 30일 시정명령을 내고 ‘노조 아님’ 통보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후보자께서는 “사회적 대화까지 진행하면서 ‘노조 아님’ 통보 제도 유지 혹은 폐지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어쨌든 전교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30일 날 시정명령을 내서 ‘노조 아님’ 통보를 할 계획에 대해서 유보 혹은 재검토 의사라고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지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위치까지 와 있는지를 정확하게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고, 그런 소문이 있다고 언론에서 언급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취임을 하면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짚어 보고 그 이후에 신중한 판단을 해서 제 입장을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수미 위원 어쨌든 박근혜정부의 고용부가 노동을 탄압하는 신호탄으로 전교조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를 저는 희망을 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알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제가 아까서부터 왜 노동권리 혹은 노사관계가 그렇게 중요한가가 바로 박근혜정부가 얘기하는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프리젠테이션 화면을 잠깐 봐 주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150만 개 일자리라면..... 아니, 300만 개였나요, 이 박근혜정부가..... 아, 고용률 70%를 하려면 연평균 한 5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MB정부 때 어땠나를 살펴보면, 그냥 취업자 증감률만 보시면 2009년 37만, 10년에 48만 8000, 2011년 43만, 2012년 35만 해 가지고 연평균 41만 일자리, 그냥 증가 추이입니다, 이것은. 일자리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고용률이 늘었어야지요. 한 40만 개 일자리가 는 겁니다. 고용률은 제자리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청년 고용률을 보시면 2009년 39.5%에서 2012년 10월에 39.4%입니다. IMF 때 40.6%였어요. 이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지금 일자리가 40만 개씩 늘었는데.

그런데 여성 고용률도 보시면 2008년에 48.7%였는데 2011년에 48.1%, 늘지를 않고 오히려 주는 추세가 아닌가라는 우려까지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일자리가 그달 늘면 그다음에, 혹은 그다음 달 곧바로 줄거나 더 줄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시겠지만 허드레 일자리가 많기 때문

에, 나쁜 일자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용률 70%를 하려면 권리가 있는 일자리, 지속가능한 일자리, 머슴이나 혹은 일꾼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용부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않는 한 고용률 70%,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한 가지 더 보시면, 고용보험을 상실하는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고용보험을 취득했다가 그다음 일자리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용보험이 없는 사업장에 취업할 경우 고용보험을 상실하게 되는데 그게 2007년 45%에서 2011년 51%예요.

그러니까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지원책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가입하는 사람이 한 2% 정도밖에 안 된다, 이것은 드러난 통계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효과도 없는 겁니다.

이것은 아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전혀 지원을, 영세 사업자에게는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영세 사업자에게, 그러니까 노사 모두에게 지원을 하지 않는 그러한 사회보험료 지원책은 소득 보장을 조금 해 주는 것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정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적어도 고용보험은 가입되어 있는 그런 좋은 일자리를 늘리지 않는 한 고용률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현상의 분석에 대해서는 저도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동의를 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사업인데 그 효과성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평가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사중손실의 효과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려고 그러합니다.

하나는 지원을 하되 실효성을 반드시 높여서 원래 있는 사람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원이 없었으면 들어오지 않을 그런 사업장과 근로자들을 타기팅(targetting)을 정확하게 하고, 두 번째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하게 가입하려는 인센티브가 생길 수 있는 정도의 지원 수준이 어떤지를 향후 면밀하게 평가해서 관련된 제도 개선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1분만……

○위원장 신계륜 예.

○은수미 위원 제가 사실은 두 가지 부탁을 드린 건데요, 하나는 노동권이 보호되는 일자리가 최소적인 기준이지 않으면 고용률 70%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MB정부에서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41만 개씩 늘었습니다. 그 일자리 곧바로 날아가 버려요. 이런 일자리는 안 되기 때문에 노사관계, 노동권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헌법과 노동법을 수호하고, 더 많은 보호를 제공하는 고용부로서의 정체성을 좀 분명히 해 달라,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여전히 답변을 제대로 안 해 주시고 있고 두 번째,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사업주 가입 부분, 사업주를 가입시키지 않는 한 이걸 사각지대 해소효과가 없다, 이것이 여러 연구자들이 하는 얘기이고 실제 나타나는 겁니다. 영세사업자가 무슨 돈이 있어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고려를 하라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계륜 추가질의 마지막으로 장하나 위원 질의합니다.

○장하나 위원 민주당 장하나 위원입니다.

제가 청년유니온뿐만 아니라 청년고용 문제가 심각해서 그에 대한 질의를 좀 많이 드렸고,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다 읽어 봤더니 다행히도 많은 위원님께서 또 청년 문제를 다루어 주셨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심에 대해서 느끼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지금 고용노동부가, 새로운 박근혜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청년고용 정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알고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학력화 관련해서 미스매치 문제가 심각해서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만드는 것 하고, 두 번째는 국내에 있는……

○장하나 위원 명칭만 좀 알려 주셔도 저도 내용을 잘 압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케이무브(K-move) 사업들하고 관련된 다른 청년인턴제들을 조금 더

실효성 있게 바꾸어 나가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케이무브, 스펙 타파,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그 정도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장하나 위원** 그리고 답변서에는 창업정책도 써 놓으셨는데, 물론 직접 쓰신 게 아니라 잘 모르시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아닙니다.

○**장하나 위원** 알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창업 관련해서 특별히 사회적 경제 쪽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정책들로 청년고용의 어떤 지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면밀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하나 위원**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이런 청년고용정책에만 쓰인 돈이 1조 2000억입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청년고용지표는 담보하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글로벌취업지원 정책이 이름만 바꾼 게 케이무브이고 또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도 사실상 형편 없는 결과를 보여주었고 또 창업정책은 고용정책의 주요한 정책이 될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하는 데 하나의 큰 어떤 프로젝트로 들어가 있는 것 자체를 저는 좀 인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장관후보자께서 새 정부의 고용정책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것은 누가 봐도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기존에 해 왔던 것을 담보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케이무브사업을 가지고 청년고용정책에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 이런 얘기도 간단히만 해 주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용률 70% 달성에서 가장 어려운 그룹이 청년하고 기혼 여성들입니다.

○**장하나 위원** 케이무브가 어떤 효과를 가져오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케이무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했던 글로벌 인재 양성

하고는 완전히 다른, 정말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청년들이 해외에서도, 우리 청년들 굉장히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장하나 위원** 저는 케이무브사업에 대해서 이게 청년고용정책으로 존속되어서는 안 되거나 아니면 이것을 제발 다음 정부는 주장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유가, 지금 청년실업 문제가 한국만의 문제입니까,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장하나 위원** 우리가 청년을 케이무브, 밖에서 일자리 찾으라고 보냈는데 그 나라들도 청년들 실업문제가 대한민국과 대동소이하지 않겠습니까? OECD 국가 전반적으로요.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지요?

거기 가서 어떤 좋은 일자리를 우리 한국의 청년들이 얻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도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문제인데?

이것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자리를 늘리지 않고 기업이나 공공부문에서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취업하기 어려운 청년들을 나라 밖으로 내쫓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또 4년간 5000억 정도 예산을 쓸 것이라고 해 놔는데, 청년들이 일자리를 밖에서 찾으라고 쫓아 보내는 게 과연 상식적인 기준에서만 봐도 말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우려하는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쫓아 보내는 것 아니고요, 국내에서 최대한 청년 고용대책을 가져갈 겁니다.

그런데 국내에서의 수요가 한정적일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밖에까지……

○**장하나 위원** 지금 말씀하신 청년고용정책에 일자리 늘린다는 게 없지 않습니까?

외국으로 보낸다, 중소기업 인턴을 청년들을 취업시키면 월급을 받을 대준다, 그것도 정규직 전환율 80%라고 서면질의서에 해 놔는데 지금표를 한번……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페이지 좀 보여 주시지요.

그 전 것 보여 주세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1년, 맨 뒤쪽 칸을 보아 주시면 ‘고용유지인원’ 해 놓고 ‘1년 6개월 시점’이라고 해 놔습니다. 이 이유는 첫 번째, 6개월 동안 인턴과정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정규직 전환하면 또 월급의 반 정도를 국가에서 대주는 정책인데요. 그러면 이런 국가 지원이 끝났을 때는 얼마큼 일하고 있느냐를 봐야 유의미하겠지요?

처음에 3만 명이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1만 명 정도…… 저기 보시면 32%, 37% 이 정도 수준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온갖 답변서라든가 아니면 고용부에서 실적을 보도자료를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공표할 때는 처음에 청년인턴으로 3만 명이 들어갔다 그러면 3만 명 실적만 그렇게 자랑을 하고요.

그다음에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80% 정도 했다, 이것도 처음에 3만 명 대비 정규직 전환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턴 6개월을 수용한 과정, 그때 벌써 1만 명이 탈락을 하는데 거기서 80%가 정규직이 되었다 이런 것만 홍보하고 있고요.

사실상 처음에 3만 명 들어갔다고 자랑해 놓고 남는 게 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도 사실상, 지금 1만 명을 더 늘린다고 해 놓았는데 늘릴 게 아니라 줄이든지, 아니면 이 문제점이 뭔지를 좀 파악을 하고 주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업정책에 대해서도, 창업이 청년 고용의 메인, 해결할 수 있는 메인 정책으로 있는 게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창업을 해서 청년들이 얼마나 일자리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메인 정책은 아닙니다.

○장하나 위원 그것은 개인적인 판단이십니까, 고용노동부 공식적인 입장이십니까? 그것만 확실히 해 주시면 저는 좋겠는데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여러 가지 정책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메인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장하나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네 가지 주요 정책 중에는 들어간다고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제3섹터의 창업, 사회적기업 창업 등 창업도 여

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뭐라고 하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창업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하나 위원 그런데 그 전에 여러 가지를 뭐 뭐 말씀하셨는지……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사회적기업 창업이라든지 또 실제로 이제 지금 창조경제에서도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청소년들이 굉장히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ICT하고 결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하나 위원 일자리 창출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고용률 70%를 5년 안에 달성한다고 하는데 청년고용정책에 있어서 주요한 네 가지 중의 하나가 창업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게 1998년 이후로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벤처 붐이 있었지요?

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알고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98년에 벤처기업이 2000개였고 2009년에 2만여 개 됩니다. 10배 늘었습니다.

그러면 청년고용률이 그에 따른 확실한 변화를 보여 주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도 창업만 얘기하는 것은 이 역시도 기업이나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창출해야 되는 의무를 회피하고 자영업을 해라, 자영업 많다 많다 하면서 청년한테는 자영업을 강요하는 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들어 보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들어 보았습니다.

○장하나 위원 그 개정안이 발의되었었고 또 환노위에서는 여야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서 일단 민간부문에는 무리가 있을 듯하니 공공부문부터 의무고용을 하자는 어떤 노력 조항을 의무 조항으로 바꾸는 이런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누가, 그러니까 두 세력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는데 누구였는지는 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장하나 위원 하나는 기획재정부고요, 나머지

하나는 아쉽게도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공 부문에서 의무고용하는 것도 안 된다고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로서 왜 청년일자리를 공공 부문에서 늘리는, 의무 조항으로 바꾸는 법안 통과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반대를 당했어야 되는지 납득이 좀 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들은 바가 없이 지금 이 자리에서 들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이제 장하나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장하나 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환노위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조속히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청년고용정책들이 이름만 바뀌었을 뿐 지난 정권의 정책에서 별로 달라진 바가 없고 저는 고용률 70% 절대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장관후보자가 할 의향을 갖고 있었으면 합니다.

그럴 수 있으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가능한, 발생할 수 있는 제안이나 문제점들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추가질의까지 모두 끝났고 여기까지가 여야 간사 간에 일정하게 합의가 된 것인데요.

혹시 위원님 중에서 마치려고 하는데 이것은 꼭 후보자의 정책 검증이나 자질 검증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꼭 내가 말을 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한명숙 위원 하나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그래요.

심상정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김경협 위원님.....

장하나 위원님도 더 하시겠습니까?

○장하나 위원 아주 짧게.....

○위원장 신계륜 마무리를 잘 지켜주시고요. 또 여기 발언 신청을 안 한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짧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상정 위원님부터.....

심상정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장하나 위원님, 김경협 위원님 이렇게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위원 마지막으로 하라는 뜻이지요, 지금?

○위원장 신계륜 먼저 발언하십시오.

○심상정 위원 마지막으로 하라는 말씀이지요?

○위원장 신계륜 예.

○심상정 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몇 년씩이나 해묵은 노동현안들이 많고 또 많은 노동자들이 오늘 청문회에서 자신과 관련된 문제들이 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까 절박한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현안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장관 후보자께서 좀 책임 있게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아침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대자동차 불법과건 문제, 제가 보기에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께서 의지를 갖는다면, 장관이 되셔서 의지를 갖는다면 해법의 아웃라인이 이미 나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GM대우의 불법과건의 성격에 대해서 아주 클리어하게 정리를 해주었고 그다음에 이마트 특별조사에서, 특별감사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노동부가 자기 권한과 책임을 갖고 조치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지금 현대자동차 불법과건 문제에 대한 해법이 정리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법의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첫 번째로는 이미 2004년도에 노동부가 불법과건 판정을 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심상정 위원 9234 공정에 대해서, 물론 이것

은 제조사 과정에서 조정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게 불법과건 판정이 이미 내려졌고 또 이 논란에 대해서 대법원이 GM대우 케이스를 놓고 클리어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사법부의 여러 진행과 상관없이 노동부의 권한과 책임으로 해야 될 조치들을 제대로 하면 이 문제가 저는 원만하게 풀릴 수 있다, 이마트 사례에서 그것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마트 사례에서 우선 첫 번째로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노동부에서, 그것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인당 1000만 원씩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대자동차도 9234 또는 그와 유사한 공정에 고용의무를 지시하고 그게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면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GM대우와 다를 바 없이 불법과건을 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 되어야 합니다, GM대우처럼.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과 관련해서 고용부가 자기 권한을 확실하게 행사하면 저는 현대자동차 사용자도 스스로 책임 있는 해법을 내놓을 거라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장관후보자에게서 확실한 의지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위원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마트의 경우는 이제 근로감독이나 특별감독이 들어가서 관련된 위법사항들에 대해서 조치를 했던 것이고,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GM대우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결과들이 현대자동차의 상황하고 상당히 많은 유추 해석들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마는 제가 지금……

○심상정 위원 아니, 노동부에서 2004년도에 이미 불법과건 판정을 내렸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그렇지만 현대 전체에 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개별적 법률적 쟁송들이 진행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의 주시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 정부 입장에서……

○심상정 위원 아니, 왜……

아니, 왜 현대자동차만 법률적인 진행 과정을 지켜보시겠다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이마트는 그게 진행된 것이 아니고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이런 위법사항들이 발견돼서 거기 벌금도 매기고 이제……

○심상정 위원 아니, 오히려 현대자동차는 2004년부터 지금 10여 년간 노동부가 이미 특별감사를 통해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서 판정을 했고 또 최병승 씨가 대법원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고 그다음에 그 모든 다툼의 소지를 대법원에서 GM대우 사례로 정리를 해 줬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특별근로감독 이후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 이마트에서 노동부의 권한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책임을 발휘한 사례가 있고, 또 어떤 법적인 절차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냐는 거지요.

왜 현대자동차에 대해서는 이마트에서 했던 것처럼, 또 이미 GM대우에서 확인된 것처럼 조치를 할 수 없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심상정 위원 그러면 하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지금 제 생각이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부 입장에서 어떤 시점에 어떤 접점으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라든지 판결 결과라든지 지금 이마트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같이 엮어서 현대자동차에 있어서의 과건 문제라든지 하도급 문제를 볼 수 있겠느냐……

○심상정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쭙 볼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이마트의 불법과건, 똑같은 불법과건 이니까요, 불법과건에 했던 노동부의 조치 그것이 현대자동차에도 적용 가능하지요? 어떻습니까? 이마트하고 현대자동차의 불법과건은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불법과건이 있다면 그것이 현대자동차든 다른 곳이든 그 불법과건이 발견되면 그것은 엄중하게 법으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이마트에 했던 대로 현대자동차에 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과정들을 한번 제가 면밀히 살펴보고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심상정 위원 특별근로감독을 다시 실시해서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한지 자체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근로감독을 하기 위한 몇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그 전에 몇 가지 예비적인 단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법원의 판결이라든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이마트의 유통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불법과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정을 해서 향후에 현대자동차의 문제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조금 더 신중하게 장관의 입장에서는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심상정 위원** 현대자동차 과건이……

○**위원장 신계륜** 심상정 위원님, 이제 정리하십시오.

○**심상정 위원** 그러면 다시 재차 질의를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신계륜** 아니요, 이것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심상정 위원** 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검증할 것도 많고 이야기할 것도 많지만 지금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입니다. 장관이 되어서 이것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심상정 위원** 물론이지요.

○**위원장 신계륜** 그렇기 때문에 장관이 되어서 질의하고 따질 것과 청문회 때 따질 것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만 집중적으로 따져 주시고, 왜냐하면 이것은 여야 간사 간에 이렇게 합의된 것이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다음, 한명숙 위원 질의합니다.

○**한명숙 위원** 아까 사회협약위원회는 누락됐다고 말씀하셔서 그 자료를, 활동 내역을 서면으로 저희 의원실로 좀 보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리고 지난 2월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정리해고요건 강화와 정리해고자 생계 대책 강구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권고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국회의장에게

권고한 것도 있고 고용노동부에게 한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권고는 쌍용자동차와 한진중공업 그런 사업장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많이 해고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한명숙 위원** 그 해고한 이후에 많은 해고자들이 목숨을 끊거나 또 그 과정상에 가정을 유지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반영한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IMF 이후에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요건이 완화되었어요. 그래서 그 완화된 이후에 비용 절감을 위해서 기업들이 정리해고를 한다거나 또는 투자 유치를 명분으로 해서 해외자본들이 경영 상황을 의도적으로 조작을 해서 인적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쌍용자동차도 사실상 회계조작으로 인한 정리해고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밝히고자 했던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과 또 대통령인수위원회 국정과제 64번을 보면 부분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리해고 전에 업무 재조정, 무급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의 해고 회피노력 의무 강화를 위해서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제도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약속했구요.

그다음에 대규모 정리해고 시에 고용재난지역 선포하고 예산 지원규정들을 신설할 것을 공약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국정과제 64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고 인수위에서도 국정과제로 밝힌 사안이니만큼 이 부분은 속도감 있게, 지금 쌍용자동차 문제나 한진중공업 문제 같은 것은 아마 이번에 노동부장관으로 인선이 되시면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박근혜정부의 노동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하는데 이렇게 공약이기도 하고 또 국정과제로 부분적이지만 포함됐기 때문에 내정자가 구상하는, 이것을 잘 구상하셔서 좀 속도감 있게 이것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권고한 바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내정자의 입장을 말씀해 주

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그 부분은 제가 인수위에 있을 때도 사전예보시스템이라든지 또 실제로 이제 정리해고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여러 가지 고용 유지 패키지들은 실사가 됐는데 그게 이제 평택시 같은 경우에 조금 정책적으로 미비한 부분이라는 것이 실제로 이제 정리해고자가 어떻게든지 다툼이 있거나 법률에, 소송 진행되어 다시 복직이 될 때까지 생활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에 직접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들을 제가 봐서 여러 가지 이제 생계 지원이라든지 또 실제로 이제 실업급여도 개인 연장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이것을 추진하다가 약간의 부딪히는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빠른 속도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정리해고,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이것은 공약과 또는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관으로서는 소신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신다는 말씀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새롭게, 정말 의미 있게 들어온 공약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안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될 수 있으면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저는 이것을 속도감 있게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시겠다는 해석을 제가 장관님의 답변에서 하고……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다음에 박근혜정부가 취임 초기에 사회적 현안인 쌍용자동차 등 정리해고 현안 사업장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노동 문제를 제대로 갖고 가느냐 못 갖고 가느냐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근로기준법 개정에 적극 나서 주기를 요청하고, 저희 민주통합당에서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인 해고 회피 노력 이외에도 국가인권위가 권고한 사항대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강화, 정리해고자에 대한 지원

또 고용 유지 지원 제도의 강화를 약속했고 저희 당의 당론으로 홍영표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회에서 거론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 고용노동부장관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함께 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공약의 경우에는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근로자들의 일자리 지키기, 정리해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다음, 장하나 위원 질의합니다.

○**장하나 위원** 민주당 장하나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짧기 때문에 후보자께서도 답변을 좀 짧고 간략하게 필요한 내용만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지난 12월 4일에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새누리당 김성태 위원님, 이종훈 위원님, 김상민 위원님, 최봉홍 위원님, 이렇게 위원님께서 18대 대선 이후 열리는 국회에서 쌍용차의 여러 가지 해외매각, 기술 유출, 정리해고 등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정조사 실시해서 정상화 방안과 해고자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가겠다고 이런 기자회견을 하신 바가 있고요.

이후에 그래서 종교계에서 새누리당을 찾아가서 이런 새누리당의 특히 쌍용차를 중심으로 한 노동 현안 해결에 대한 어떤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 자리에 있던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의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김무성 본부장이 국정조사를 첫 국회에서 다루는 것으로 이렇게 또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알고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알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그전의 자세한 내용들은 모르지만……

○**장하나 위원** 그러면 김무성 총괄본부장이……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일반적으로 언론에 언급된 것들은 알고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예.

그리고 이후에 황우여 당시 새누리당 당 대표가 12월 30일인가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임시국회 때 국정조사 실시하겠다. 당내에서 찬반 논리가 아직은 있지만 그러나 이 문제는 미뤄 둘 사안이 아니고 내년에 조속히 실시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박근혜정부는 대선 이후로 미루자던 이 국정조사를 대선이 끝났고 이제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정부, 청와대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처럼 이 문제에 아무 답도 안 내고 있는 것이 저는 상당히 답답하고 사실 이해가 안 될 정도인데요.

저는 국정조사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대답이 아니라 이런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 사실을 접했고 새누리당이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부인한 적도 없고, 특히 김무성 총괄본부장이라든가 황우여 당 대표가 본인들이 했던 말에 대해서 정정이라든가 어떤 입장을 바꾼다는 내용이 없었을 때 일반적인 국민이라면 이것을 박근혜 후보자 당시의 대선 공약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국정조사 관련해서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회에서의 논의들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장하나 위원 아니, 언론 보도를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대선 때, 대선 선거 기간 때 이런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나왔어요. 많은 국민들이 많이 접했습니다.

이랬을 때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 박근혜 후보의 또는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으로 쌍용차 국정조사가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것만 답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자신 있는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아니, 김무성 총괄본부장이 언론을 통해서 얘기했구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그것은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장하나 위원 김무성 총괄본부장이 얘기한 것도 아까 안다고 하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알고 있습

니다.

○장하나 위원 황우여 대표가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정 보도를 요청한 것도 아니고 입장을 번복하거나 바꾼 적도 없습니다. 이대로 흘러온 시간인데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언론을 통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것은 박근혜 후보의 대선 공약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까?

상식적인 질문이잖아요. 쌍차 국정조사를 하겠느냐는 의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라면 대선 공약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그 본인이……

○장하나 위원 뭐가 그렇게 무섭고 뭐가 그렇게 얘기하기가 힘든 질문입니까, 제 질문이?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대선 공약으로 본인이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공약인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답변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장하나 위원 박근혜 후보는 당시 개인이었습니까? 새누리당 대선후보였고, 김무성 선거캠프의 총괄본부장입니다.

그러면 황우여 당 대표와 김무성 본부장이 쌍차 국정조사에 대해서 다음에 열리는 국회 때 다루겠다고 얘기했다면 국민들은 박근혜 후보의 입을 통해서 나오지 않은 말이지만 이것을 대선 공약으로 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무소속 후보였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그런데 당에서 비중 있는 분들이기는 합니다마는……

○장하나 위원 아니, 선거캠프의 총괄본부장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선거캠프의 대선 공약으로 생각을 하면, 국민들한테 이제 와서 '그것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지금 그 말은 '박근혜 후보의 입으로 발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 공약이다라고 하기는 힘들다' 그런 입장이십니까?

○朱永順 委員 위원장님, 시간 지켜 주십시오.

○장하나 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부적인 내용의

진행 과정이라든지 국회에서 발언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장하나 위원**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위원님, 제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실만 가지고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하나 위원** 아까는 언론을 통해서 보았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언론을 통해서 제가 본 것은 굉장히 굵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 자세하게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여기 있지 않았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판단이 어렵……

○**장하나 위원** 제가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언론을 통해서 당시 김무성 총괄본부장과 황우여당 대표가 대선 이후 임시회가 열리면 쌍차 국정조사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발언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런 게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정정보도라든가 아니면 입장을 바꾼다는 말 없이 지금 이 시점까지 왔다면 국민들은 여전히 그것을 대선 공약으로 생각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드렸지, 이 보도된 내용의 진위까지는 저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답변은 거기까지만 들겠습니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게 될 줄은 저는 오늘 아침에 청문회 시작하면서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저는, 지난 환경부장관후보자 청문회 때도 논문에 대한 논란도 있었고 하지만 특별히 어떤 낙마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거론이 안 되었고 그것은 여야 위원님들이 암묵적으로 합의가 된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은 어떤…… 꼭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위장전입이나 병역 비리 이런 도덕적 흠결만 지금 많은 청문회에서 중심으로 부각되는 반면, 저는 사실 이런 국무위원 후보자의 자질을 얘기할 때 사실은 역량이라든가 업무 능력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진이 빠지고, 지금은 후보자 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과연 손쉽게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여야 간사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정말 해 주십

시오.

그리고……

○**위원장 신계륜** 보고서 채택은 내일 하니까요. 지금 그런 정도로 마무리하시고요. 아마 장하나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또 장관후보자가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잘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질의를 마쳐 주시고요.

○**장하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마지막으로 김경협 위원님 질의합니다.

○**김경협 위원**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비즈니스 프렌들리, 부자 감세 온갖 경기부양 성장정책 여러 가지 시도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도 약화시키고 노조도 분열되고, 비즈니스 프렌들리 이렇게 해서 온갖 성장정책을 다 펼쳤는데 실질적으로 성장률은 2%대로 떨어졌습니다. 경기침체는 더 심해졌지요.

노동부장관후보자의 입장에서 이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성장률 자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는데, 외부적인 요인도 있고 내부적인 요인들도 있다고……

○**김경협 위원** 노동부장관후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주요한 원인.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성장률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경협 위원** 예, 성장률은 이렇게 떨어지고 경기는 더 침체하게 됐는데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느냐 이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거시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고, 또……

○**김경협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거시적인 요인이나 이런 것을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된 요인에 노동부장관후보자의 입장에서 주요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것을 지금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수출 잘 되고 있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김경협 위원** 그런데 내수시장은 대단히 침체해 있지요? 내수 성장동력 추락해 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아마 그중에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도, 지금 내수시장은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산층의 축소하

고도 상당히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핵심을 잘못 짚고 계시는 것인데요. 비정규직은 확대되고 고용 불안이 확대되고 특수고용직, 위장 자영업자들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그런 것들이 다 중산층 축소의 영향을 받습니다.

○**김경협 위원** 생계위기에 직면해 있지요, 자영업도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해고자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다 자영업을 하고 있고요. 노후도 불안하고 최저임금이나 실질임금은 하락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노사 간의 힘의 불균형이 아주 심각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의 원인은 MB정부의 부자 중심의 정책 그리고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가져온 노조 약화 정책입니다. 그래서 힘의 불균형이 심각해졌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수 구매력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내수 침체가 대단히 심각하고 내수 동력이 살아날 수가 없지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정책이라는 것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고, 아까 심상정 위원께서 얘기했던 노조의 힘을 강화시켜서 노사 간의 힘의 균형을 회복시켜서 내수 구매 동력을 만들어 내고 이것으로 인해서 경기 불황을 탈출해내는 해결책으로 사용합니다. 이게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의 핵심입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경제를 살려 내기 위해서라도 특수고용직 문제, 노동기본권 확대해야 되지요. 불법파견 비정규직 문제, 정규직화시켜 내야 됩니다. 지금 조합원 범위 문제, 조합원 자격 문제 가지고 노동부에서 대단히 협소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유니온, 노년유니온……

그런데 이게 직종·업종·산별 노조 이런 경우에 실제로 조합원 자격을 해석하는 기준이 대단히 다릅니다. 기업별 노조에서는 그 기업에 지금 근무하고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런 직종노조나 업종노조, 산별노조 같은 데—공무원노조도 마찬가지입니다—거기에 실직자·해직자 한두 명이 끼어 있다, 그래서 노조로 인정 못 한다 이런 식의 해석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식의 해석이? 이렇게 해서 노

동조합 계속 약화시키고, 노사 간의 힘 균형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렇게 해서 내수경제 다 침체시키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요인들이 실제로 중산층 축소라든지 내수 진작에 여러 가지 방해가 됐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새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정말 유념을 해서 일자리 정책도 가져가고 성장정책도 가져가고……

○**김경협 위원** 노동부장관후보자로서 이후에 이런 관점에서 노사 간의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의 기본 시각이 필요하고 철학이 필요하고 소신이 필요한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경제를 바라보는 철학이나 노사관계에 대한 기본 시각이나 거의 없습니다. 오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문회 보면서 대단히 답답하거든요. 속 터져요, 정말로. 속 터집니다. 어떻게 하나 참 걱정스럽습니다.

○**최봉홍 위원** 위원장님, 시간 좀 지킵시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위원님, 제가 그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제 진정성을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혹시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앞으로도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계륜** 장관후보자께서는 이따 마무리 발언 할 때 발언을 잘 하시고요.

김경협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인사청문회는 도덕성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고용노동부의 수장으로서 이후의 노동정책, 이러한 전반의 경제정책과 연관된, 어떻게 해 갈까 철학과 소신 이런 것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보여지는데 오늘 정말 그런 부분에서는 빵점입니다, 빵점. 자질과 능력에 대해서 심각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계륜**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준비한 게 많고 또 더 해야 할 이야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심상정 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예, 발언하십시오.

○**심상정 위원** 국회가 효율적인 운영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동안에 여야 간사하고 위원장님의 협의 결과에 충실하게 제가 함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문 위원의 헌법상의 권한을 통제할 권리는 위원장도 간사도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저에게 양해를 구하셔야 될 문제지, 여야 간사가 합의했다고 해서 그렇게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선이지만, 여러 차례 청문회도 해 봤지만 여야 간사가 합의했다고 해서…… 저한테는 와서 상의한 적도 없어요. 제가 아무리 소수당이고 또 이 자리에 혼자 나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예의나 절차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의 내용도 마찬가지지요. 그것은 저의 권한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위원장께서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섭섭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아무리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합의 이전에 최소한 저한테 상의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청문 위원들이…… 어쨌든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 온 그런 내용을 충분히 발언할 기회, 검증할 기회는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인사청문회하고 있는 곳입니다. 다른 청문회 같은 경우 밤 11시, 10시까지 늦게까지 하는 청문회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우리나라의 고용현실, 노동현실이 그렇게 쉬운 자리는 아니다, 노동부장관 자리는…… 그런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계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러나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 위원들의 의사를 수렴해서 여야 간사가 하는 것도 존중해 주지 않을 수 없는 면도 있기 때문에 이 양자를 잘 조정하는 일이 그리 쉽지는 않은가 봅

니다.

특히 현안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심상정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추후에 이것을 잘 보완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주영순 위원, 이완영 위원, 한정애 위원, 장하나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청문회를 마치기 전에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에게……

○**김경협 위원** 추가 자료제출 요구의 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청문회를 마무리하는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존경하는 신계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 자신과 고용노동정책 방향에 대해 아낌없는 충고와 진심 어린 격려의 말씀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나름대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자 최선을 다하였습시다마는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충분치 못한 부분도 있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부족했던 부분은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오늘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충고와 격려를 마음 깊게 새겨 앞으로 노동정책과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임하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고, 국민의 일자리와 고용노동정책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는 것을 위원님들 앞에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들어가십시오.

아까 김경협 위원께서 서면질의, 자료요청이 있었다고 부의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회의는 내일 3월 5일 10시에 개의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일 모두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3분 산회)

○출석 위원(15인)

김 경 협	김 상 민	김 성 태	서 용 교
신 계 루	심 상 정	은 수 미	이 완 영
이 중 훈	장 하 나	주 영 순	최 봉 홍
한 명 숙	한 정 애	홍 영 표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한 공 식
전 문 위 원	김 양 건

○출석 공직후보자

방 하 남